

# 도전.한국

##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 최종보고서

Final Report





# 도전.한국

##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 최종보고서

Final Report



# 도전.한국

##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최종보고회

- » 일 시 2022. 12. 8.(목), 14:00~16:00
- » 장 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 1907호
- » 주 최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세부일정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시 간	내 용
14:00~14:03	개회 및 국민의례
14:03~14:05	인사 말씀
14:05~14:55	수상작 발표
	발 표 ①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 특징 분석과 정책 방향 김현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발 표 ②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형분석 및 활성화 방안 문성남, 김동민, 김호철, 신예은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발 표 ③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형성 비교 :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태건, 이슬 연세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발 표 ④ 지방소멸시대 초고령사회의 균등한 삶 보장 위한 스마트케어(돌봄·의료) 시범연구 : 충청남도 소재 '편편(fun~fun)한 건강경로당'의 타당성 검증 및 사례연구 김미주, 이양우 ㈜Urban Mark 연구원
	발 표 ⑤ 장기미취업 고립청년의 사회진입·관계망 형성 지원 방안 :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자본 형성 전략을 중심으로 김동희, 정보영 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
14:55~15:05	휴 식
15:05~15:45	정책토론회
15:45~15:55	시상 및 기념촬영
15:55~16:00	폐회 및 마무리





도전·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최종보고회  
**CONTENTS**

<b>발표 1</b>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 특징 분석과 정책 방향	1
연구책임자 김현우	
<b>발표 2</b>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형분석 및 활성화 방안	27
연구책임자 문성남 / 공동연구자 김동민, 김호철, 신예은	
<b>발표 3</b>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형성 비교	65
: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태건 / 공동연구자 이슬	
<b>발표 4</b>	
지방소멸시대 초고령사회의 균등한 삶 보장 위한 스마트케어	97
(돌봄·의료)시범연구	
: 충청남도 소재 ‘편편(fun-fun)한 건강경로당’의 타당성 검증 및 사례연구	
연구책임자 김미주 / 공동연구자 이양우	
<b>발표 5</b>	
장기미취업 고립청년의 사회진입·관계망 형성 지원 방안	133
: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자본 형성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동희 / 공동연구자 정보영	



도원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최종보고회

발표 ①

#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 특징 분석과 정책 방향

—  
연구책임자 김현우



##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 특징 분석과 정책 방향

연구책임자 김현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은 광역시 구와 군, 비수도권 중도시, 군지역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유출인구를 줄이고,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방법도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유출인구의 특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특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형화 분석을 위한 첫 단계로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1~2020년까지의 노동패널자료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 간 이동자와 그 중에서 타 권역으로 이동자의 특성을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노동패널자료에 대한 기초분석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유출인구는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직업별로는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중이 많았다. 이는 전체 분석대상의 특징과 유사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산업·직업구조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간 인구이동요인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이동확률을 높고,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종사자가 농림어업 종사자에 비해 이동확률이 높았다. 또한 소득이 포함된 분석모형에서는 타 권역 이동자의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이동확률이 높게 나타나 고소득·고학력 종사자의 이동 확률이 높다는 내생적 인적자본모델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①인구감소지역의 성장거점 육성, ②전통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③생활인구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원 등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I 머릿말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 진행과 함께 농촌에서 도시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높은 임금과 취업을 위해 이동하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부터 지역 간 인구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육성과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개발 속도의 차이가 큰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0년 초부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산업·일자리·교통SOC·과학기술·문화관광·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4차 계획(2018~2022년)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으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중앙정부 예산은 5년간 총 112조원이 투입될 계획이었다. 이처럼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공간·재정 측면에서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목표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다. 2010년대 초에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결과로 비수도권의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개선되면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가 더 많았던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상당수는 향후 인구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2022년 기준)를 보면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으로 비수도권 제조업 중심도시와 수도권 중소도시로 확산하는 등 지역인구감소는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해당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교부금 및 세수원천 감소, SOC시설 확충 지연, 도심쇠퇴 현상 등 복합적인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이다.

지역 인구는 출생, 사망 등 자연적 요인과 인구이동이라는 사회적 요인 등 3대 요소로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가 변화되는데 자연적 요인과 달리 사회적 요인은 정책, 제도 등 인위적 수단을 통해 단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sup>1)</sup>. 지역 간 인구이동은 자연적 요인에 비해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정책효과가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걸리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인구감소 정책은 크게 2가지 저출산·고령화 대책, 낙후지역 발전정책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임신·출산지원, 아동수당 지원, 양육지원(어린이집확충,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노후소득지원, 고령자 의료지원, 고령자 사회참여 등이 있으며, 이외 국토부, 고용부, 여가부에서도 각종 시책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낙후지역 발전정책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제정을 통해 마련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로 추진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이 중심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의 상당수는 대부분

1) 김현우(2020),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수도권 재집중화 요인에 관한 연구: 삶의 자기결정권 선호와 불안정속의 안정 선택,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지역에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며, 부처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인구감소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2021년 인구감소지역(89개)을 지정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비롯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를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인구유출을 축소시키고,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은 11개 시·도의 광역시 구와 군, 비수도권 중도시, 군지역 등 다양한 지역, 도시 규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구감소의 원인과 특징이 차별적이다. 따라서 인구감소를 축소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를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는 정책도 차별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출인구와 지역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유출인구의 특징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인구감소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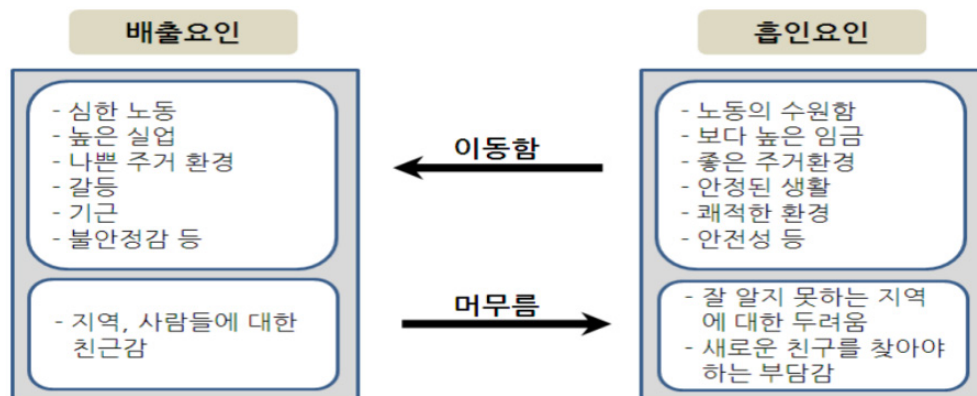
### 1. 이론적 검토

지역 간 인구이동 원인은 크게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이 있다. 거시적 인구이동모델은 지역 간 소득의 차이, 즉 경제적 차이로 인해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미시적 인구이동모델은 이주 과정에서의 개인별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소득 차이와 지역 어메니티 등에 의해 인구이동을 설명한다.

지역 간 경제적 차이로 인한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로써, 토다로(Todaro, 1971, 1976)는 이주를 통해 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기대임금(또는 기대소득)을 이동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은 처음에는 도시의 비공식 부문에서 낮은 소득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 도시 공식 부문에 취업하여 기대되는 임금 때문에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이동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지역 어메니티 이론(Tiebout, 1956)에서는 학교, 병원, 공원, 복지시설 등과 같은 공공재는 사적 재화와 구별된다. 공공재는 사적 재화와 달리 완전하게 소모되지 않고, 구매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이 된다. 즉 지역 공공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차별화되어 공공재와 서비스에 따른 편익도 다르며, 비용인 지방세도 각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편익이 극대화되는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sup>2)</sup>

거시적 인구이동모델 중 하나인 배출-흡인요인 모델(Lee, 1966)은 인구이동의 원인을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 모델은 ①기원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 ②목표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 ③기원지와 목표지 사이에 있는 장애물, ④개인적 요인을 근거로 하여 인구의 이동량, 이동의 주류와 역류, 이주자의 특성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sup>3)</sup> 자세히 말하자면, 배출요인과 흡인요인에는 임금, 노동강도, 고용기회, 주거환경, 종교적·문화적 차이, 자연재해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요인은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이러한 개인 특성이 총합이 현 거주지에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배출압력이나 이동지에서 사람들을 끄는 흡인력으로 작용하면서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1]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배출-흡인요인



자료 : 이희연, 2008, 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 분석, p.23

2) 김현우(2020),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수도권 재집중화 요인에 관한 연구: 삶의 자기결정권 선호와 불안정속의 안정 선택,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이희연, 2008, 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 분석, 국토연구원 보고서, p.20



## 2. 선행연구 분석

지역 간 인구이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오랜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로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경제적 편익 측면의 연구, 지역 특성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 거주지와 개인 특성을 모두 고려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원인을 유출인구의 개인별 특성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최열·김형준(2012)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주거 이동 결정요인이 시기(1999년, 2008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과 순차로짓모형(sequential logi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99년과 2008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연령(-), 주거 기간(-), 자녀 수(-) 등의 결과를 동일하게 나타냈다. 그리고 2008년 모형에서는 수도권 이동자는 경제적 여유가 많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이동자는 낮은 주거비 지출을 위해 이동하는 경향이 높았다.

정인수(2004)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노동이동을 목적으로 한 이동자의 개인 특성을 로짓모형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역 간 이동확률은 근속기간(+), 남성(-), 임금(-), 대기업(-), 제조업(+), 등과 관계를 보였다. 수도권 모형에서는 대기업 종사자가 지역 간 이동확률이 낮은 반면, 비수도권 모형에서는 대기업 종사자의 이동확률이 높았다. 이는 인적자본이 높은 대기업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직장 위치에 따라 이동확률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인적자본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기정훈(2011)은 국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 및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지역 인구감소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함께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구도심에서의 유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구감소정책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 간의 시각 차이가 현저히 존재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반구축, 기업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성호·이창무(2013)는 연령대별 인구이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지역효용 차이를 이용한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20대는 이동 거리의 마찰 수준(영향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아 지역 간 이동경향이 컸다, 그리고 인구 규모(+)와 아파트 가격 차이(+)로 나타나 인구 규모가 크고 주택가격이 높은 대도시로의 이주를 선호하였다. 반면 60대 이상은 주택가격과 인구 규모가 낮은 지역을 선호하였다.

남형권·서원석(2018)은 중소 쇠퇴도시를 대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구의 특성을 이변량 프로빗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2000~2015년) 16년간 자료를 사용하여 쇠퇴도시 9,759가구, 전국 53,886가구 중 지역 간 이동한 쇠퇴도시 299가구, 전국 2,806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교육 수준(+), 자산 수준(+), 기술직·준전문직·사무직 등일수록 쇠퇴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높은 인적자본의 노동자와 지역 자산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임석희(2018)는 인구감소도시를 인구지표에 의한 성장·쇠퇴유형을 분류하고, 지역적 특징을 살펴 보았다. 1995년에서 2016년까지의 인구증감 추세를 통해 인구감소도시(84개)를 지속적 쇠퇴형, 잠재적 쇠퇴형, 불안정 성장형, 안정적 성장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구규모, 인구구조, 지리적 위치와 분포, 제조업 비중 등을 통해 분석하여 수도권은 성장형인 반면, 비수도권은 쇠퇴형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지방의 농촌기반형 중소도시들이 지속적 쇠퇴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최예술(2022)은 인구감소지역(89개)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실태, 인구이동 요인, 유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노동패널조사(2010~2020년)를 이용한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인구이동의 요인을 연령, 성별, 혼인, 교육 수준, 월소득 등 개인 특성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20~30대 청년층과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의 이동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로는 고학력·고숙련·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종이 지난 10년간 유출비율이 높았다.

### 3. 본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를 줄이기 위한 첫 단계인 유출인구의 개인별 특성을 분석하여 인구 이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89개 지역이나 되는 인구감소지역은 지리적 위치, 도시 규모 등이 차별적이므로 동일한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정책 효과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의 개인적·직업 특성 등을 파악한다면 특정 유형의 인구집단의 유출을 밝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지역 차원에서 유출을 방지하는 맞춤형 정책 수단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 효율화와 정책효과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의 개인별 특성을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분석하고,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인구유출요인으로 증점적 살펴보고자 한다. 유출인구의 개인·산업·직업 등과 관련된 유출인구의 이동 원인과 특징에 대한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배출유형을 설정하고,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유출인구의 연령대, 직업 및 산업 특징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배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지역인구감소에 대한 관심으로 정책 내용과 효과, 인구이동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다수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와 동일한 분석대상과 분석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도 있으나, 대부분 연령, 성별, 학력 등 개인적 요인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개인적 요인만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의 유형과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유출인구의 직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 간 인구이동의 원인이 경제적 차이 또는 지역 어메니티 차이로 발생한다고 볼 때, 이동자 직업과 지역 산업 및 직업구조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입지가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유출인구의 특징이 다를 수 있다. 즉, 유출인구는 전입지의 지역적 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인데 동일 생활권이 아닌 타 권역으로 유출하는 인구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 특성을 개인적 요인에 산업·직업요인을 포함시키고, 수도권과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동자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적이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떠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동패널자료 4차(2001년)에서 23차(2020년)까지 20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시군구 단위로 분석하였다. 노동패널자료는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로서 연령, 교육 수준 등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소득 활동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sup>4)</sup> 따라서 지역 간 인구이동을 선택한 개인별 특성과 직업, 소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유출인구의 특징을 파악하는 본 연구내용에 부합한다. 분석 대상은 2001~2020년 기간 동안 수집된 가구원자료에서 거주지, 성별, 나이, 직업 등 모든 변수의 관측치가 있는 표본은 158,715명(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를 추출하여 '이동'과 '비이동'으로 구분하며, 이동 여부는 직전연도 거주지(시군구)와 차이를 통해 식별하였다.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표본 중 가구원 식별번호를 통해 중복값을 제거하면, 표본은 12,930명으로 감소하지만, 동일인이더라도 이동목적, 이동 당시 개인별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복값도 모두 포함하여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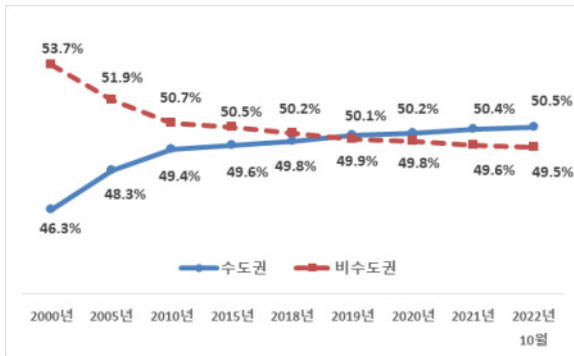
4) 최예슬, 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국토연구원 WP 22-06.

### Ⅲ 인구감소도시 이동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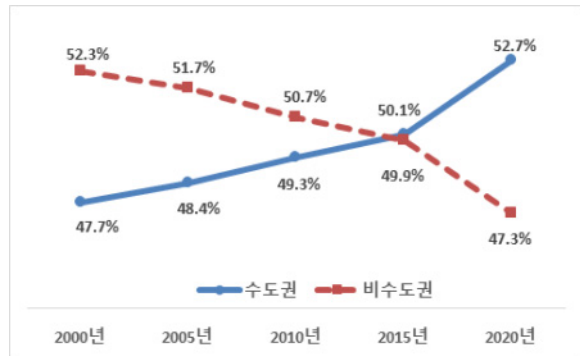
#### 1. 지역 간 격차 및 인구이동 추이

2004년 균특법이 제정된 지 18년이 지난 현재, 4차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 과정에서도 인구·경제의 수도권 일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은 비수도권 비중이 지속 감소하여 수도권 비중이 더 높아진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2022년 10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상의 우리나라 인구는 5,150만명이며, 수도권은 2,599만명, 비수도권은 2,547만명으로 각각 50.5%와 49.5%를 차지하고 있다.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2019년 이후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규모(생산력) 측면에서도 같은 추이를 보였다. GRDP(지역내총생산) 비중의 경우, 2000년에는 수도권 47.7%, 비수도권 52.3%로 비수도권이 높았으나 격차가 점차 줄면서 2015년 처음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2020년 기준 52.7%로 비수도권 47.3%보다 5.4%p 높다. 이처럼 총인구와 GRDP의 수도권 집중화는 경제·산업·문화·재정 등 여러 부문에서도 수도권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므로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 문제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전망이다.

[그림 2] 수도권/비수도권 총인구 비율 추이



[그림 3]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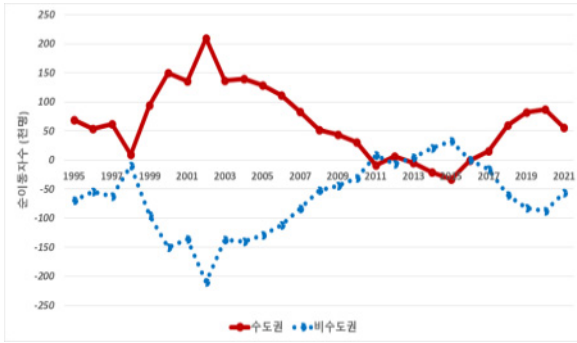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자 수는 2000년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수도권 순유입이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 내에서는 충청권,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인구가 순유입된 반면, 영남권, 호남권은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연령별로는 수도권 이동이 많은 20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하였던 중장년층의 탈수도권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대부분 연령층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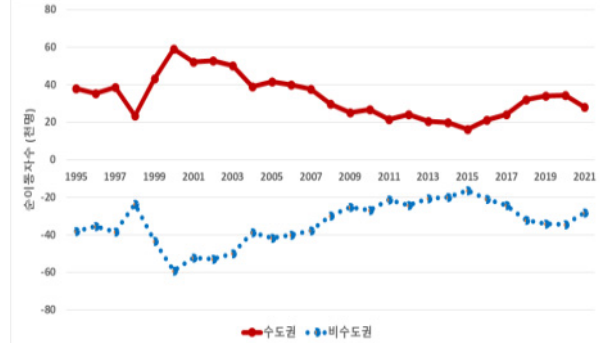
[그림 4] 우리나라 시기별 인구이동 변화(1995~2021)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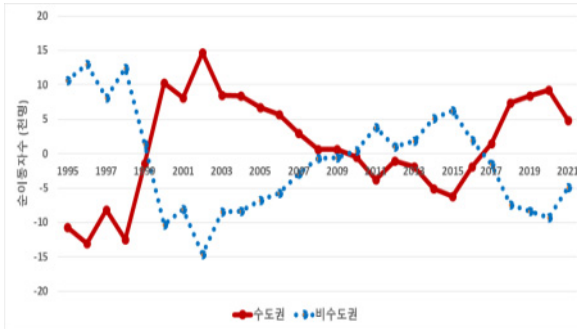
〈수도권-비수도권 전체 순이동자수 추이('95~'21)〉



〈수도권-비수도권 25세-29세 순이동자수 추이('95~'11)〉



〈수도권-비수도권 30세-34세 순이동자수 추이('95~'21)〉



〈수도권-비수도권 40세-64세 순이동자수 추이('95~'21)〉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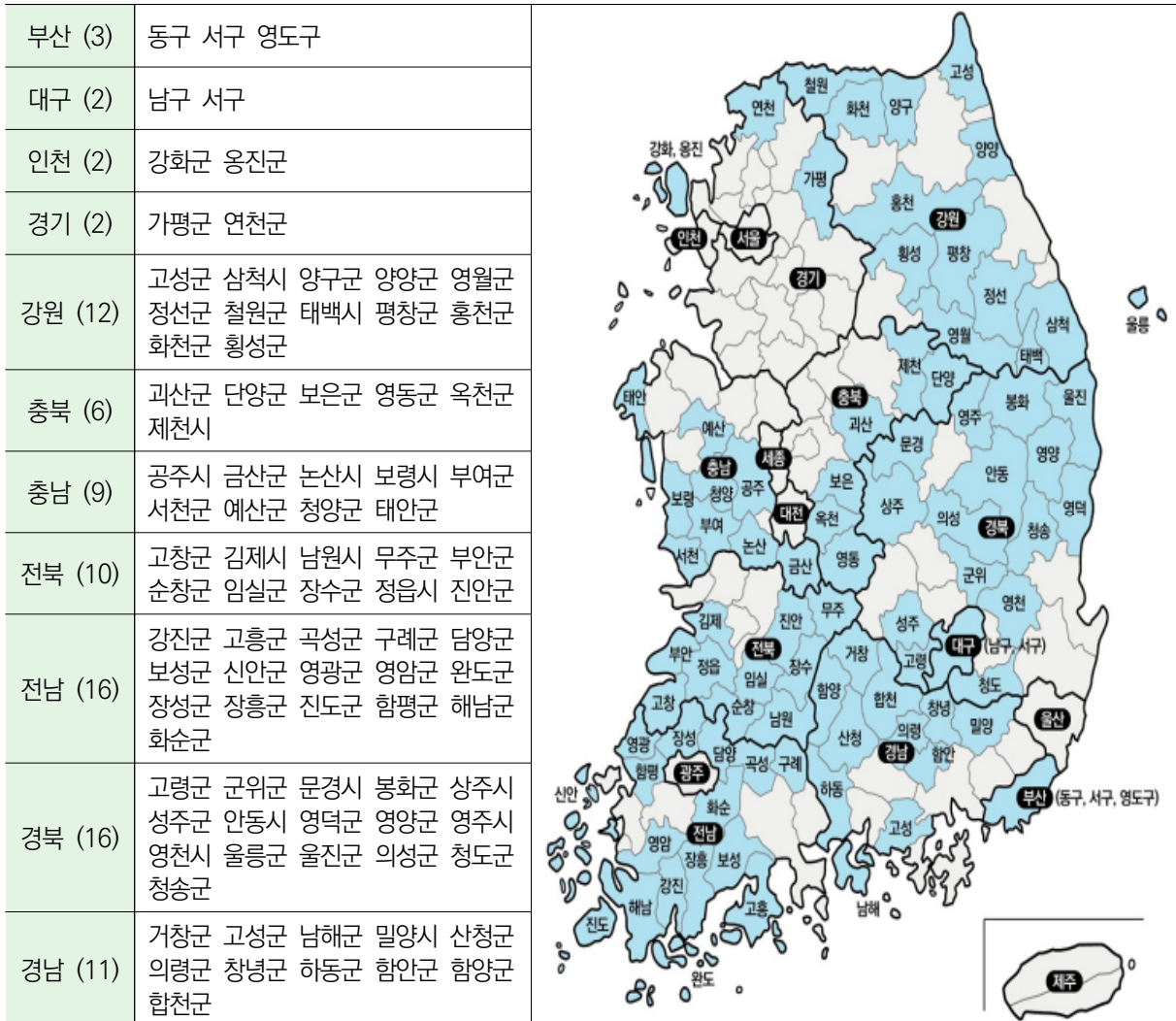


##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및 유출가구·인구의 특징

###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1년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2022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 지정하되, 첫 시행주기(2021~2026년)에는 2년 후(2023년) 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통해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229개 지역(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총 89개 지역을 지정하였다. 지정된 89개 지역 중에서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개 지자체로 가장 많고, 강원(12), 경남(11), 전북(10) 순이며,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대구, 인천 등이 있음.

[그림 5]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2021),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보도자료(2021.10.18.)

## 2) 인구감소지역 유출가구 현황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동한 가구는 다른 지역 이동가구에 비해 원거리를 이동하였으나, 동일 광역권 내 이동 비중이 높았으며, 주로 주택, 가정, 환경 등의 이유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20년 동안 지역 간 이동을 한 가구 수는 총 2,680가구, 이 중 비수도권에서 전출한 가구는 1,112가구, 인구감소지역에서 전출한 가구는 173가구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간 이동을 한 가구의 평균 거리는 전체 43.3km, 비수도권 56.3km, 인구감소도시 63.3km 등으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동한 가구는 상대적으로 원거리 이동을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이 비수도권 시·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 거리가 먼 점이 기인하였다.

〈표 1〉 인구감소지역 전출 가구의 이주 거리

평균이동거리	거리(km)	가구수
이주가구 전체	43.3	2,680
비수도권 이주가구	56.3	1,112
인구감소지역 이주가구	63.3	173

주 : 지역 간 거리 시도군청을 중심지하여 직선거리로 산출하였으며, 특광역시는 구단위, 그 외는 시지역으로 산출

전출 가구 이동지역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동한 가구의 2/3는 동일 광역권역 내로 이동하였으며, 타 광역권역으로 이동한 가구는 전체의 34.7%인 60가구, 이 중 23가구(전체의 13.3%)는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총전출 가구의 이동지역은 동일 광역권 내는 60.9%, 타 광역권은 39.1%로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타 광역권으로 이주한 비중이 다소 높다. 반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중은 67.3%로 인구감소지역의 13.3%에 비해 54.0%p가 높는데 이는 전체 전출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도권 내 이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전출 가구라 하여 수도권이라는 증력작용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 광역권 내로 이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인구감소지역 전출 가구의 이동지역

(단위 : 가구 수)

구분	합계(A+B)	광역권내(A)	타 광역권(B)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73(100%)	113(65.3%)	60(34.7%)	23(13.3%)
총 이주가구(인구감소지역 제외)	2,507(100%)	1,528(60.9%)	979(39.1%)	1,687(67.3%)

주 : 이동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광역권내 또는 타 광역권에서 이동한 경우 모두 포함

노동패널자료의 이주 동기 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동한 가구는 내집마련(18.3%) 사유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가족(12.9%), 환경·건강(10.8%), 취업·창업(8.3%) 순이다. 전체 이주 가구 분석 결과에서는 주로 주택 및 통근과 관련된 사항이 이동한 목적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환경과 일자리 관련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중에는 비수도권의 시·군 지역이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편의시설 및 의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되어 이동한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이주 동기(노동패널조사 문항)

(단위 : 가구 수)

항목	총 이주 가구		인구감소지역	
(1) 취업/창업	107	6.8%	8	8.6%
(2) 동일직장 내 근무지 이동	109	7.0%	7	7.5%
(3) 현재 다니는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를 위해	134	8.6%	5	5.4%
(4) 자녀 교육 때문에	52	3.3%	4	4.3%
(5) 집값이 오를 것이라 여겨져서	29	1.9%	0	0.0%
(6)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167	10.7%	8	8.6%
(7)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	206	13.2%	8	8.6%
(8) 보육 혹은 부모봉양 때문에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	150	9.6%	12	12.9%
(9) 환경 및 건강 때문에	128	8.2%	10	10.8%
(10) 인근의 편의시설 때문에(마트, 공원, 복지시설 등)	59	3.8%	2	2.2%
(11) 신혼집 마련	22	1.4%	2	2.2%
(12) 내집 마련	298	19.0%	17	18.3%
(13) 어려서부터 살아왔다	17	1.1%	0	0.0%
(14) 기타	19	1.2%	5	5.4%
(15) 계약만료 / 철거, 재개발	48	3.1%	5	5.4%
(16) 독립하고 싶어서	2	0.1%	0	0.0%
(17) 별거, 이혼, 가정불화	6	0.4%	0	0.0%
(18) 경제적 상황 악화	12	0.8%	0	0.0%
합계	1,565	100.0%	93	100.0%

주 : 이주동기 문항은 2008년부터 조사됨.

### 3)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 현황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개인별 직업·산업·소득과 관련된 자료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시·군 지역의 산업 및 직업구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이동자들은 전체 표본의 산업 및 직업구조와 유사하다. 전체 표본의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각각 18.6%, 65.1%이며, 인구감소지역 전체는 농림어업이 35.6%, 서비스업 47.0%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군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같은 산업구조를 보였는데, 인구감소지역 이동자는 19.2%, 57.6%로 전체 표본의 산업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이동자의 산업 비중 중에서 건설업 종사자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지역낙후수준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SOC 및 주택 건설, 유지보수 등의 일감이 줄어든 것과 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분석 대상의 종사자별 산업 분포

구분	전체 표본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이동자
농림어업	12,672 (8.0%)	4,600 (35.6%)	15 (9.9%)
제조업	29,495 (18.6%)	1,416 (11.0%)	29 (19.2%)
건설업	13,221 (8.3%)	835 (6.5%)	20 (13.2%)
서비스업	103,107 (65.1%)	6,079 (47.0%)	87 (57.6%)
전체	158,495 (100.0%)	12,930 (100.0%)	151 (100.0%)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의 산업분포가 지역 특징보다 전체 표본의 특징에 가까운 이유는 한 도시나 지역의 경제구조 및 성장의 건전성을 규명하는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에 기인한다. 경제기반모형에서는 지역내 산업을 기반산업(수출재)과 비기반산업(지역재)으로 구분하는데, 기반 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외부에서 소비되는 산업이며, 비기반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산업을 의미한다.<sup>5)</sup> 이때, 도시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각 산업의 일자리는 증가하며, 기반산업의 수출고용보다는 비기반산업의 지역고용이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된다. 반면, 지역 서비스와 달리 기반산업인 지역 생산직 일자리는 지역 내 수요변화보다는 국가 전체 수요에 의해 변한다. 즉, 인구감소지역의 제조업이 쇠퇴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면 기반 산업의 성장과 노동자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는 비기반산업 쇠퇴로 이어져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직업별 분포의 특징도 인구감소지역 이동자는 해당 지역의 분포보다는 전체 표본의 분포와 유사하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출인구의 대부분이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과 같은 3차 산업과 관련된 직업군 들이며, 특히 고학력·고소득층과 관련 있는 전문직의 인구이동 비중이 높다. 고학력·고소득층의 이동 비중이 높은 이유는 내생적 인적자본모델(Schultz, 1961 ; Becker, 1975)에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고 있다.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임금수준의 취업 기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고, 높은 인적자본이 유입되는 지역은 집적경제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노동수요 증가로 인한 임금 수준 향상이 된다.<sup>6)</sup> 내생적 인적자본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지역별 소득 격차가 인구이동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취업 기회와 정보 획득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표 5〉 분석 대상의 직업별 분포

구분	전체 표본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이동자
전문직	34,953 (22.1%)	1,475 (11.4%)	32 (21.2%)
사무직	23,966 (15.1%)	1,250 (9.7%)	24 (15.9%)
서비스직	32,575 (20.6%)	2,358 (18.2%)	34 (22.5%)
생산직	18,986 (12.0%)	1,031 (8.0%)	17 (11.3%)
농림어업	11,790 (7.5%)	4,347 (33.6%)	13 (8.6%)
기능직	18,088 (11.4%)	1,058 (8.2%)	12 (7.9%)
단순노무직	17,894 (11.3%)	1,411 (10.9%)	19 (12.6%)
합계	158,252 (100.0%)	12,930 (100.0%)	151 (100.0%)

5) 양준석, 2020, 세종시출범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

6) 김현우, 2020,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수도권 재집중화 요인에 관한 연구: 삶의 자기결정권 선호와 불안정속의 안정 선택,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IV 실증분석

### 1. 분석모형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의 개인·직업·산업별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선택하였다. 이 모형은 2차 이상 일련의 연속된 선택이 있을 때, 오차항의 상관관계에 기초한 두 개의 프로빗 모형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 간 이동 여부 결정과 타 권역으로의 이동 여부 결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만약 타 권역으로의 이동 여부 결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 프로빗 모형을 활용한다면, 타 권역으로의 이동은 지역 간 인구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확률 특성을 간과하고, 특성정보를 분석모형에서 제외함으로써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X_{1i}$ 는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한  $i$ 번째 관측치의 특성을 나타내며,  $X_{2i}$ 는 타 권역으로 이동한  $i$ 번째 관측치를 의미하며, 첫 번째 모형은 선택모형, 두 번째 모형은 결과모형이라고 한다.  $\epsilon_{1i}$ ,  $\epsilon_{2i}$ 는 오차항으로 각각 전체 모집단과 지역 간 이동을 결정한 집단에서만 정의되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며,  $\rho$ 인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즉, 종속변수가 지역 간 이동유무(0, 1)인 프로빗 모형과 타 권역으로 이동유무(0, 1)로 하는 프로빗 모형을 동시에 분석하여 유출인구의 개인별 특성을 파악한다.

$$y_{1i} = \beta_1 X_{1i} + \epsilon_{1i}, \quad y_{1i} = \begin{cases} 1 & \text{if } y_{1i} \geq 0 \\ 0 & \text{if } y_{1i} < 0 \end{cases} \quad (\text{식 1})$$

$$y_{2i} = \beta_2 X_{2i} + \epsilon_{2i}, \quad y_{2i} = \begin{cases} 1 & \text{if } y_{2i} \geq 0 \\ 0 & \text{if } y_{2i} < 0 \end{cases}$$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간 인구이동에 미치는 요인은 연령, 학력, 혼인, 종사상지위, 직업, 산업, 소득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전체 표본은 총 12,930명이며, 지역 간 이동자 151명, 타 권역으로의 이동자 98명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중 20~30대 연령층은 22.0%, 40~50대는 40.8%, 준거집단인 60대 이상은 36.9%를 차지한다. 학력 기준으로는 고졸 이하가 30.3%, 대졸(4년제) 23.0%, 대학원 이상 2.4%이며, 준거집단인 대졸(2년제)는 9.9%를 차지하였다. 기혼자는 73.0%이었으며, 상용직은 30.6%를 차지하였다. 직업별로는 준거집단인 농림어업 종사자가 33.6%, 생산직 27.4%, 서비스직 18.2%, 전문직 11.1%, 사무직 9.7%이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47.0%, 제조업 10.9%, 건설업 6.6% 순이다.

〈표 6〉 주요 변수 및 기초통계량

변수 유형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 오차	최소	최대
종속 변수	이동여부	지역(시·군·구) 간 이동 = 1, 이동하지 않음 = 0	12,930	0.012	0.107	0	1
	타 권역 이동여부	타 권역으로 이동 = 1, 동일권역으로 이동 = 0	12,930	0.008	0.087	0	1
독립 변수	연령	20-30대	12,930	0.220	0.415	0	1
		40-50대	12,930	0.408	0.491	0	1
		60대 이상(준거집단)	12,930	0.369	0.483	0	1
	학력	고졸	12,930	0.303	0.460	0	1
		대졸(2년제)(준거집단)	12,930	0.099	0.298	0	1
		대졸(4년제)	12,930	0.230	0.421	0	1
		대학원 이상	12,930	0.024	0.154	0	1
	혼인	기혼 = 1, 미혼 = 0	12,930	0.730	0.444	0	1
	종사상지위	상용직 = 1, 비상용직 = 0	12,930	0.306	0.461	0	1
	직업	농림어업(준거집단)	12,930	0.336	0.472	0	1
		전문직	12,930	0.111	0.314	0	1
		사무직	12,930	0.097	0.296	0	1
		서비스직	12,930	0.182	0.386	0	1
		생산직	12,930	0.274	0.446	0	1
	산업	건설업(준거집단)	12,930	0.066	0.247	0	1
		제조업	12,930	0.109	0.312	0	1
		서비스업	12,930	0.470	0.499	0	1
소득	개인연소득(ln값)	9,809	7.311	0.993	1.792	10.518	

## 2. 실증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 유출인구의 특성을 분석한 모형1(소득 제외)에서 지역 간 이동요인 분석(선택모형) 결과는 60대 이상 고령층에 비해 20~30대와 40~50대의 지역 간 이동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지역 간 이동에 미치는 제약조건인 적기 때문에 이동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혼인은 기혼에 비해 미혼이 지역 간 이동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도 미혼자가 이동 제약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기인한 결과이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에 비해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모두 이동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내생적 인적자본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소득·고학력 종사자가 지역 간 이동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반영되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에 비해 서비스업 종사자 이동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 전체 종사자 중 지역 간 이동확률에 비해 서비스업의 이동확률이 낮은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므로 서비스업 종사자의 이동확률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니다. 학력과 종사상지위 기준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지 않았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이동자 특성에서 학력과 종사상지위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타 권역으로의 이동요인 분석(결과모형) 결과는 선택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한 개인 중에서도 연령층이 젊고, 미혼일수록 타 권역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고,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의 이동확률이 농림어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산업 분야와 학력, 종사상지위와 관련된 설명변수 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없었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한 개인 중에서도 타 권역으로 이동한 개인은 연령과 혼인여부, 직업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의 분석결과(모형1)

구분	변수명	$\beta$ 값	표준오차	P> z	
선택모형 (종속변수 = 지역 간 인구이동 여부)	연령	20-30대	0.504***	0.139	0.000
		40-50대	0.370***	0.117	0.002
	학력	고졸	0.115	0.107	0.284
		대졸	0.085	0.131	0.517
		대학원 이상	0.150	0.224	0.503
	혼인	기혼	-0.145*	0.070	0.037
	종사상지위	상용직	-0.042	0.084	0.617
	직업	전문직	0.633***	0.176	0.000
		사무직	0.542***	0.171	0.001
		서비스직	0.619***	0.161	0.000
		생산직	0.451***	0.131	0.001
	산업	제조업	-0.055	0.123	0.657
		서비스업	-0.266**	0.115	0.021
	상수항		-2.838***	0.112	0.000
	결과모형 (종속변수 = 타 권역으로의 인구이동 여부)	연령	20-30대	0.402***	0.139
40-50대			0.241*	0.126	0.056
학력		고졸	0.186	0.122	0.126
		대졸	0.120	0.143	0.403
		대학원 이상	0.064	0.272	0.815
혼인		기혼	-0.029*	0.078	0.714
종사상지위		상용직	-0.078	0.087	0.369
직업		전문직	0.784***	0.216	0.000
		사무직	0.759***	0.201	0.000
		서비스직	0.674***	0.205	0.001
		생산직	0.668***	0.173	0.000
산업		제조업	0.039	0.137	0.776
		서비스업	-0.209	0.131	0.112
상수항		-3.198***	0.190	0.000	
athrho		15.673	2.986	0.000	
rho		1.000	0.000		
N		12,930			

주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소득변수를 포함한 모형2의 분석결과는 모형1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선택모형은 모형1과 계수 부호가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소득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결과모형에서는 연령과 혼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소득변수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한 개인 중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타 권역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높은 소득을 위해 동일권역에 비해 거리가 먼 타 권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표 8〉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의 분석결과(모형2)

구분	변수명	$\beta$ 값	표준오차	P> z	
선택모형 (종속변수 = 지역 간 인구이동 여부)	연령	20-30대	0.376**	0.170	0.027
		40-50대	0.434***	0.143	0.002
	학력	고졸	0.082	0.118	0.485
		대졸	0.080	0.151	0.596
		대학원 이상	0.304	0.235	0.196
	혼인	기혼	-0.146*	0.082	0.077
	종사사지위	상용직	-0.000	0.098	0.999
	직업	전문직	0.355*	0.204	0.083
		사무직	0.442**	0.192	0.021
		서비스직	0.434**	0.186	0.019
		생산직	0.344**	0.146	0.018
	산업	제조업	-0.070	0.136	0.605
		서비스업	-0.241*	0.128	0.059
	소득	개인소득	-0.036	0.048	0.449
상수항		-2.478***	0.328	0.000	
결과모형 (종속변수 = 타 권역으로의 인구이동 여부)	연령	20-30대	0.114	0.208	0.584
		40-50대	0.206	0.168	0.221
	학력	고졸	-0.049	0.165	0.767
		대졸	0.037	0.203	0.857
		대학원 이상	0.230	0.363	0.526
	혼인	기혼	0.080	0.149	0.592
	종사사지위	상용직	0.073	0.161	0.650
	직업	전문직	0.390	0.301	0.195
		사무직	0.503*	0.289	0.082
		서비스직	0.563**	0.274	0.040
		생산직	0.500**	0.213	0.019
	산업	제조업	-0.275	0.235	0.241
		서비스업	-0.268	0.171	0.118
	소득	개인소득	0.144**	0.072	0.046
상수항		-4.138***	0.487	0.000	
athrho		13.613	7.271	0.061	
rho		1.000	0.000		
N		9,809			

주 1)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소득자료는 2003년부터 구축되어 관측치수가 모형1과 다름

## V 결론

### 1. 주요 결과

노통패널자료를 기반으로 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간 이동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이동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출 인구의 대부분이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과 같은 3차 산업과 관련된 직업군들이며, 특히 고학력·고소득층과 관련 있는 전문직의 인구이동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의 경우, 지역산업에서 신산업, 부가가치 창출, 고도화와 관련있는 직업과 관계있어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주요 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유출 배경과 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인구감소 지역의 기반산업이 쇠퇴하면서 서비스업과 같이 기반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비기반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관련 종사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감소도시의 지역 간 이동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선택하였다.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 간 이동여부를 선택하고, 목적지를 어디로 할지를 동시에 의사 선택하기 때문에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표본선택편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젊은 연령층과 미혼자의 이동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리고 직업 중에서는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 등이 이동확률이 높았으며, 소득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타 권역으로 이동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내생적 인적자본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소득·고학력 종사자가 지역 간 이동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 2. 정책방향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sup>7)</sup> 첫째,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하여 설립 기준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둘째,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행안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방문 진료사업(의료), 학예사 운영 특례지원(문화), 체류 외국인 특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산업·일자리 관련된 사항은 미흡한 한계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유출인구가 젊은 연령층, 높은 소득, 전문직·사무직·서비스·생산직 종사자 등일수록 유출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①인구감소지역의 성장거점 육성, ②전통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③생활인구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원 등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7) 행정안전부, 2022,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개선·지역활력도모 체계적 지원 확대, 보도자료(2022.5.29.)



〈표 9〉 인구감소지역 주요 지원내용

분야	주요 내용
보육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
교육	유·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 운영,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의료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방문 진료사업 지원 등
주거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
문화 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 특례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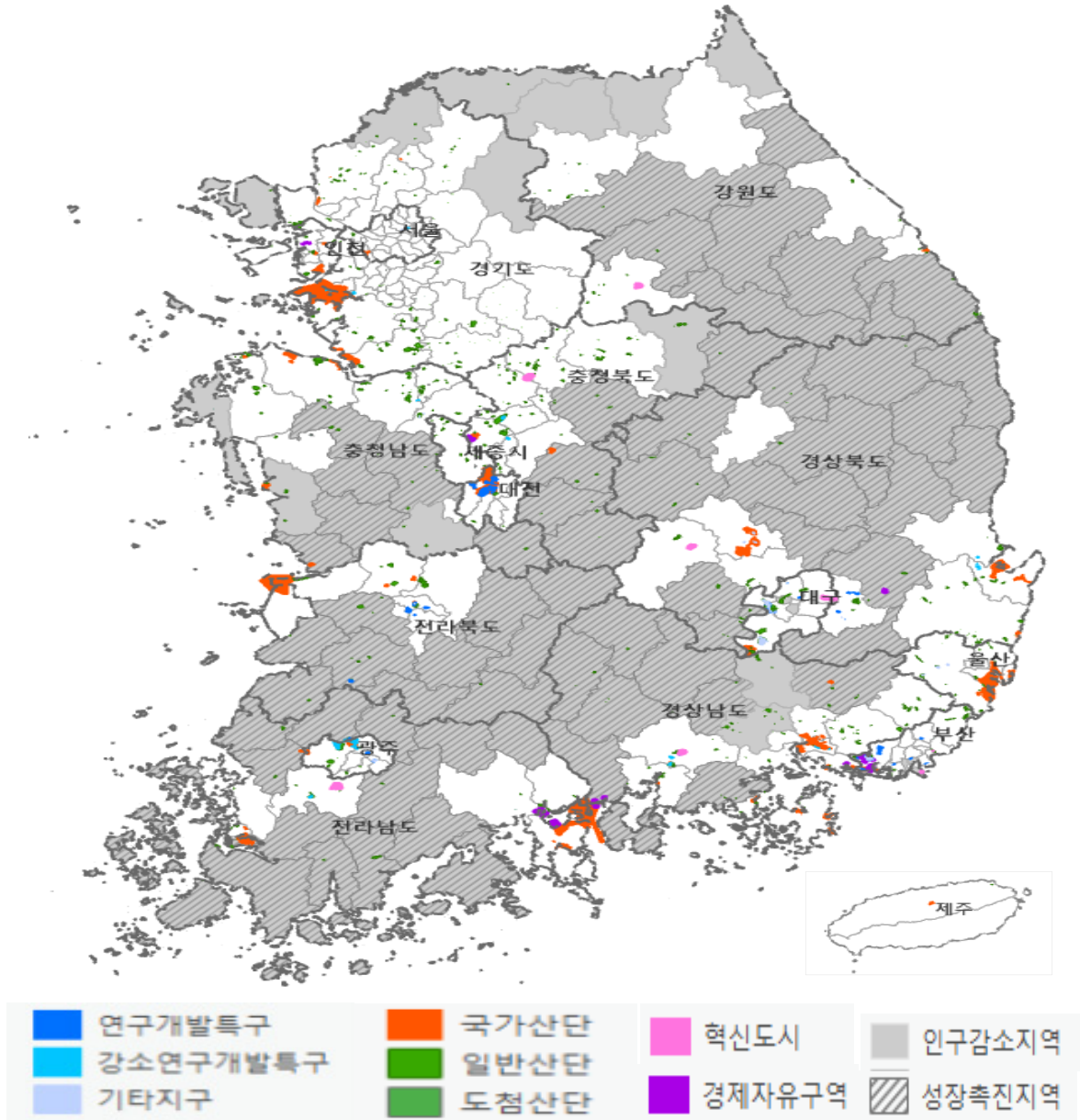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22),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개선·지역활력도모 체계적 지원 확대, 보도자료(2022.5.29.)

### 1) 인구감소지역의 성장거점 육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육성과 관련된 장소기반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비수도권 중 특정 공간에 집중되어 거점을 형성하였다.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의 산업클러스터와 지역성장거점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대도시 및 50만 이상 도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고, 인근 지역에도 산업단지와 같이 산업거점이 조성되어 있는 등 전국 지자체 중 약 65%가 넘는 지자체가 1개 이상의 성장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낙후지역(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에는 성장거점조성이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이 같은 경우는 특구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내 산업구조와 기업, 자원, 혁신역량이 보유한 지역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어 낙후지역은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기존의 장소기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대응지역, 여러 특구지역 제도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방안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구조성 및 지역공모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중앙부처의 지역사업에서 균형위의 균형발전지표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수준에 대한 가중치와 배점 등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정책과 수단이 지역투자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한계가 있는 현 정책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이 입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감면 정책과 규제혁신제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낙후지역과 연계하여 지정·조성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와 초광역협력사업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특구 및 산업단지와 낙후지역의 분포



자료 : 산업연구원(2022),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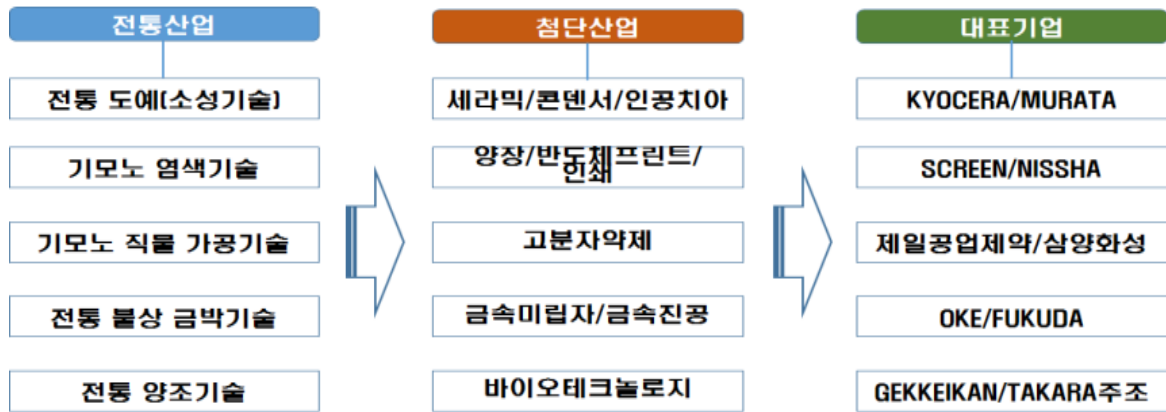
## 2) 전통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와 전문직·사무직 인력이 유출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제조업 구조고도화가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이나 인프라 등의 기반 조성이 열악한 낙후지역에서 산업육성과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허문구 외(2016)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제조업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인적자본과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첨단제조업 특화는 오히려 지역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현재 인구감소지역이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로의 이행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가령 일본 교토시의



경우,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제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예가 있다. 교토시는 불교문화가 발달하여 전통 불상에 사용되는 금박기술이 발전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첨단기술인 금속미립자 및 금속진공 등과 융합을 통해 구조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OKE, FUKUDA와 같은 지역 기업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사례이다.<sup>8)</sup>

[그림 7]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제조업으로 발전과정(교토시 사례)



자료 : 허문구 외(2016), 고령화시대의 고성장지역 유형별 성장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구구조가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서 고부가가치로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기반이 조성된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산업육성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이러한 전략마련과 컨설팅, 실행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과 인력이 부족하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광역단위 지역혁신기관(예 : 테크노파크, 산업진흥원 등)과 협력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3) 생활인구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원

최근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관련한 대응 방안으로 많이 언급되는 생활인구(또는 관계인구)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흡수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 단위의 '재능은행'을 도입하여 다양한 도시 인재들이 농산어촌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재능은행이란 농산어촌에 이주한 귀농·귀촌인뿐 아니라 잠재적인 농촌 정주 희망자나 도시에 거주하는 창조인력들을 대상으로 재능은행에 등록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이다.<sup>9)</sup> 그리고 생활인구에 대해 앞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일본 재능은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라현 아스카무라를 들 수 있다. 나라현 아스카무라는 (재)지역진흥공사 주관으로 도농교류 프로그램인 인재뱅크와 오너제도를 도입하였다. 인재뱅크는 참여 희망자를 인재로 등록하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유상의 농작업, 전문 지식·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토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도농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다락논과 같은 지역자원이나 감귤나무, 양조를 위한 고구마밭 등 지역 농산물 대상으로 하는 오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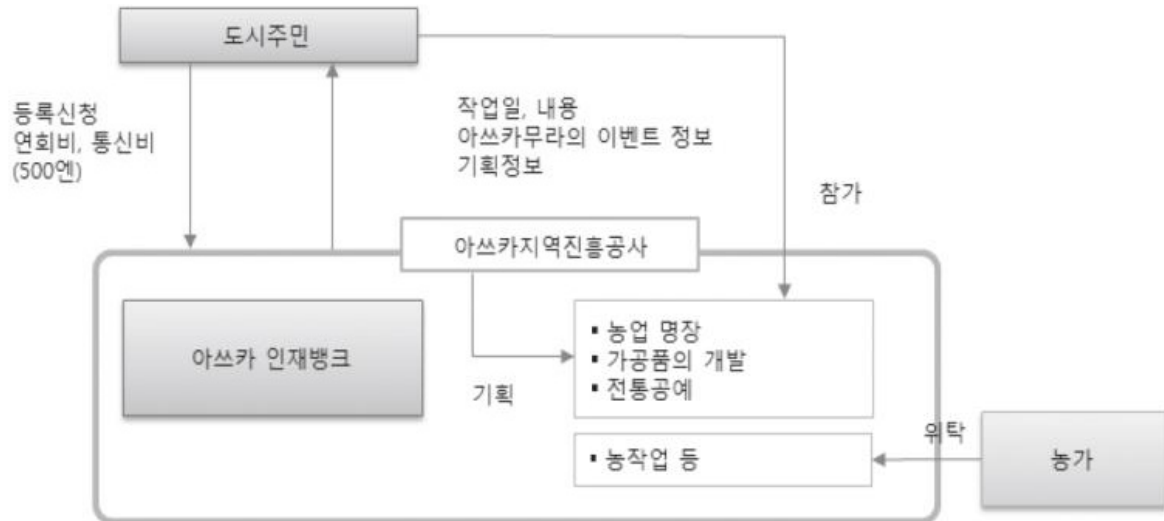
8) 허문구 외, 2016, 고령화시대의 고성장지역 유형별 성장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9) 송미령 외, 2022, 지역균형뉴딜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 방안 연구

10) 송미령 외, 2022, 지역균형뉴딜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이상의 사례와 같이 기존 마을 조직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농산어촌 공동체 활동에서 생활인구를 비롯한 귀농·귀촌인, 외부 지원 그룹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변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8] 일본 재능뱅크 사례 (나라현 아스카무라 지역진흥공사)



자료: 성주인 외(2021), 균형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용 방안 연구

## VI 참고문헌

- 강동우, 2016,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고용,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16-01, pp. 2-9.
- 기정훈, 2011,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쇠퇴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pp. 1-141.
- 김현우, 2020,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수도권 재집중화 요인에 관한 연구: 삶의 자기결정권 선호와 불안정속의 안정 선택,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우, 2020, “삶의 자기결정권 선호에 따른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인구이동 특징”,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제32권 제5호, pp. 49-27.
- 김현우, 이준영, 2022,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방향, KIET 산업경제, pp. 23-33.
- 남형권, 서원석, 2018, “지방 중소 쇠퇴도시의 유출가구 특성 분석”, 국토계획, 제53권 제4호,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pp. 57-70.
- 박성익, 조장식, 2019,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활용한 인력유출 결정요인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 회지, 제30권 제1호,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pp. 23-31.
- 산업연구원, 2022,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 성주인, 김광선, 심재현, 한이철 외, 2021, 균형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용 방안 연구,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pp. 89-128.
- 송미령, 성주인, 이명기 외, 2022, 지역균형뉴딜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35-01, pp. 149-176
- 양준석, 2020, 세종시출범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2020-19, pp. 9-27.
- 이희연, 2008 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 분석, 국토연구원, 국토연자 2008-03, pp. 6-23.
- 임석희, 2018, “인구감소도시의 유형과 지리적 특성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제52권 제1호, pp. 65-84.
- 정인수, 2004, “지역간 노동이동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pp. 57-87.
- 최성호, 이창무, 2013, “연령대별 지역간 인구이동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 부동산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pp. 87-102.
- 최열, 김형준, 2012,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주거이동 결정요인 비교 분석”. 국토계획, 제47권 제4호, pp. 219-231.
- 최예술, 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국토연구원, WP 22-06, pp. 1-28.
- 허문구, 송하울, 김정홍, 김현우 외, 2016, 고령화시대의 고성장지역 유형별 성장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2016-810, pp. 191-220.
- 행정안전부, 2021,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보도자료(2021.10.18.)
- 행정안전부, 2022,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개선·지역활력도모 체계적 지원 확대, 보도자료 (2022.5.29.)
- Becker, G., 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Second Edition. Univ. of Chicago Press.
- Lee, E. S., 1966, A theory of migration.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3(1), pp.47-57.

- O'sullivan, A., 2015, 오설리반의 도시경제학 제8판, 박영사, 서울, pp. 109-110.
- Schultz, T. 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pp.1-17.
- Todaro, M. P., 1971, Income expectations, rural-urban migration and employment in Africa.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04, pp. 387-413.
- Todaro, M. P., 1976, *Internal Mig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Swiss.
- Tiebout, C.,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pp. 416-424.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 (accessed on 2022 10. 20)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accessed on 2022 11. 21)

도원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최종보고회

발표 2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형분석 및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문성남  
공동연구자 김동민, 김호철, 신예은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형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문성남 / 공동연구자 김동민, 김호철, 신예은(가나다 순)

## I 연구요약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사회적 인구증감’ 관점에서 모색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선례를 참고하여 인구감소지역 특별법과 관련 제도를 제정하였다. 정부는 ‘생활인구’ 개념을 통해 기존 주민 외에도 방문 및 체류 인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문에서는 문헌조사 방식의 유사 개념 분석을 통해 새로운 생활인구 유형을 설명하고, 설문·통계·사례조사 방식의 실증 연구를 통해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일본 ‘관계인구’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한국의 생활인구는 교류목적에 한정하지 않으나 방문 및 체류 방식에만 한정한다는 점에서 관계인구와 구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형은 관계인구 특성에 대해 국내 방문 및 체류 인구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역기반 활동’, ‘개인의 내적동기’, ‘직주 및 체류 경험’, ‘지역 내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인구정책 TF 조직의 개편 및 보완 필요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특색있는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 I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국가 총 인구감소 현상

#### 1) 총인구의 자연적 증감영향

통계청(2022)에 따르면 국가 총인구는 2020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총인구는 2021년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총 인구감소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해 어느 한쪽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 다만, 거주 내국인이 96.8%에 달하는 만큼 인구감소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 절은 내국인 대상 총인구의 첫 감소가 나타난 2021년을 중심으로 나이, 지역 등 인구 성격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 변화에 주목한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인구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증감 차이가 있었다. 유소년(0~14세)과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전년 대비 감소했던 반면, 고령자 인구(65세 이상)는 증가했다. <표 1>과 같이 생산연령인구의 활동이 유소년과 고령자 대상 부양 기능을 부담하는 부양비(比, ratio)를 산정했을 때, 2005년부터 유소년인구 대상 부양비는 지속 감소했다. 반면, 고령인구 부양비가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부터 노년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를 추월했다. 즉,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를 통한 사회적 부양 대상이 유소년 중심에서 노년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표 1> 유소년 및 노년부양비, 2015~2021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유소년부양비 <sup>1)</sup>	18.5	18.1	17.8	17.4	17.0	16.8	16.5	-0.3
노년부양비 <sup>2)</sup>	17.6	18.1	19.1	19.8	20.8	22.2	23.6	1.3

(단위 : %)

통계청(2022) 자료를 재구성

○ 한편, 도시별 출산율은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높다. <표 2>와 같이 시군구 도시별 출산율 가운데 상위 10개 도시 전원이 비수도권에 위치하였다. 하위 10개 도시의 경우 서울 5개 도시를 비롯하여 전남 곡성을 제외하고서는 9개 도시가 특별·광역권 대도시에 속하였다.

<표 2> 합계 출산율 상·하위 시군구, 2021년

합계 출산율 상위					합계 출산율 하위				
순위	시 군 구	출산율 (%)	2020년 순위	전년대비 순위변동	순위	시 군 구	출산율 (%)	2020년 순위	전년대비 순위변동
1	전남 영광군	1.869	1	-	252	부산 영도구	0.381	253	△ 1
2	전북 임실군	1.803	3	▲ 1	253	대구 남 구	0.437	254	△ 1
3	전북 진안군	1.562	7	▼ 4	254	전남 곡성군	0.470	201	▽53
4	강원 양구군	1.518	13	▲ 9	255	서울 강북구	0.523	255	-
5	전남 신안군	1.501	21	▲16	256	서울 종로구	0.525	258	△ 2
6	강원 인제군	1.472	11	▲ 5	257	서울 광진구	0.531	257	-
7	강원 철원군	1.394	6	▼ 1	258	서울 강남구	0.541	256	▽ 2
8	경북 청송군	1.385	40	▲32	259	대구 서 구	0.544	259	-
9	경북 의성군	1.375	8	▼ 1	260	서울 관악구	0.549	260	-
10	전남 해남군	1.361	4	▼ 6	261	부산 중 구	0.549	261	-

KOSIS(2022) 자료를 재구성



## 2) 총인구의 사회적 증감영향

총인구 감소와 지역별 출산율 격차 가운데 <표 3>에 따르면 2020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인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1년 수도권 중심인 서울 인구가 전년 대비 감소(-1.2%)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시도별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인구가 증가(1.0%)하면서 수도권 총인구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통계청, 2022).

<표 3> 수도권 인구, 2016·2020·2021년

(단위 : 천 명, %)

시도	총인구			2016년 대비		2020년 대비		
	2016년	2020년	2021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인구	전국	51,270	51,829	51,738	469	0.9	-91	-0.2
	수도권	25,391	26,043	26,082	692	5.8	39.0	+2
	서울	9,806	9,586	9,472	-333	-3.4	-114	-1.2
	경기	12,672	13,512	13,653	981	7.7	141	1.0
	인천	2,913	2,945	2,957	44	1.5	12	0.4
구성비	전국	100.0	100.0	100.0	-	-	-	-
	수도권	49.5	50.3	50.4	0.9	-	0.1	-
	서울	19.1	18.5	18.3	-0.8	-	-0.2	-
	경기	24.7	26.1	26.4	1.7	-	0.3	-
	인천	5.7	5.7	5.7	0.0	-	0.0	-

통계청(2022) 자료를 재구성

<표 4>와 같이 광역권 구분 외 시군구 도시별로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인구증감률 상위 10개 도시 중 6개의 도시가 경기도에 속하였다. 반면, 하위 10개 도시는 수도권 외 경북(4), 전북(3), 경남(2), 전남(1)에 속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증감영향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전년 대비 인구 증감률 상·하위 시군구, 2021년

(단위 : 천 명, %)

인구 증감률 상위					인구 증감률 하위				
순위	시군구	인구	증감	증감률	순위	시군구	인구	증감	증감률
1	경기 과천시	66	8	13.6	220	경북 청도군	40	-1	-3.2
2	경기 하남시	305	26	9.2	221	전북 부안군	48	-2	-3.2
3	전남 무안군	90	5	6.4	222	전남 신안군	34	-1	-3.2
4	경기 평택시	572	29	5.4	223	경북 고령군	30	-1	-3.2
5	부산 강서구	142	5	3.9	224	경북 울릉군	8	-0	-3.3
6	경기 김포시	492	17	3.6	225	경남 합천군	41	-1	-3.6
7	경기 시흥시	554	19	3.5	226	경북 군위군	21	-1	-3.7
8	세종 세종시	366	12	3.5	227	경남 하동군	40	-2	-3.8
9	경북 경산시	293	10	3.4	228	전북 임실군	25	-1	-4.1
10	경기 파주시	475	15	3.2	229	전북 순창군	25	-1	-4.2

통계청(2022) 자료를 재구성

출산율 상·하위 지역별 분포와 도시인구 증가율을 비교해봤을 때, 수도권 도시는 합계 출산율이 1미만이다. 출산율 통해 인구 증가가 나타나기 어려움에도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도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도시에 비해 출산율이 높음에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도시의 출산율 증가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총 인구감소는 지역 내 자연적 인구증감 외 도시 간 전입·전출을 통한 사회적 인구증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성재·한국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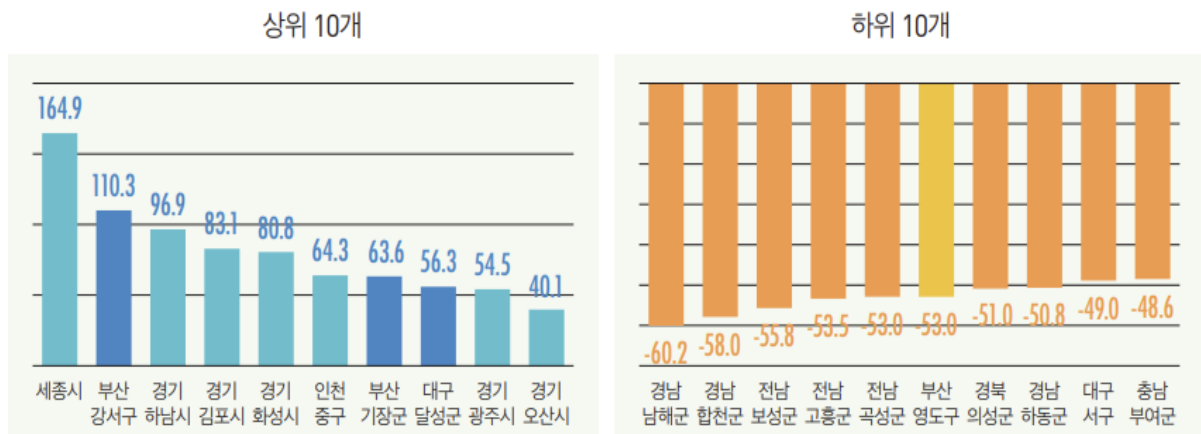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동시에 일어나는 도시의 인구감소는 비수도권 도시의 현주소다. 인구감소 원인 가운데 하나인 노령자 사망은 고령화를 통해 지연되고 있어, 비수도권 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출산율이 높은 소도시에서 출산율이 낮은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현상이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감소를 설명한다.

## 2.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지역

사회적 인구이동을 통한 지방 소도시 인구감소는 지방소멸론은 통해 일본에서부터 먼저 소개되었다. 지방소멸론은 국가 총 인구감소 중에서도 지방인구 감소에 기인하였다는 내용으로, 2015년 번역되어 들어온 서적<sup>1)</sup>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었다. 마스다 히로야는 2013년부터 지방소멸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이정환, 2017). 이후 ‘마스다 보고서(2014)<sup>2)</sup>’에서는 도쿄일극집중을 막기 위한 지방중핵도시 조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제안하였다. 실제 일본에서는 주민이 없어 소멸한 마을이 2019년까지 4년 동안 164곳에 달하였다(정영효, 2022).

마스다 보고서(2014)는 소멸위험지수를 통해 일본 내 소멸 가능성 도시를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2016년에 마스다 보고서에서 사용한 조사방식과 지표 등을 참고하여, 국내 분석을 시도하여 소개한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이상호, 2016).

지방소멸 위기에는 저출산 추세에 따른 인구감소 추세가 단편적인 배경 가운데 있었다. 지방의 인구감소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가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에서의 출산뿐 아니라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절벽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상호, 2018). 이상호(2022)는 [그림 1]처럼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신·대도시로의 인구 유입과 농어촌 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유출에 주목하며 관련한 지역 간 청년 인구 이동을 지방소멸위험 요인으로 보았다.



[그림 1] 시군구별 청년층(20~39세), 인구 순유출유입률 : 2010~2019년  
출처 : 이상호(2022)

1)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와이즈베리. (2015.09)  
2) 마스다 보고서의 정식명칭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ストップ少子化・地方元気戦略)이다.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2021)가 한국만의 인구감소지수를 갖추어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89곳을 고시하였다. 인구감소지수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인구감소지역도 시군구 단위의 중소도시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에 관한 논할 때 척도가 ‘인구’였기 때문에, 인구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로 구성된 지수에 근거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 위험 도시’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 연구

지역마다 다르게 미치는 인구변화의 영향이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는 사회적 담론으로도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약칭: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였다. 특별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변화를 시도한다.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전달되었던 계획주도권이 각 지역으로 이양될 수 있는 상향식 전략으로 국가는 불균형을 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계획체계는 지방정부의 계획이 중앙정부의 계획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인구감소지역법은 중앙정부의 계획이 지방정부의 계획을 따르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 정착의 대상으로 보는 ‘청년·중장년 등’에 대한 지원 외에도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였다(법제처, 2022).

법률을 통해 이전 제도에서 통용되지 않던 ‘생활인구 개념’이 정의되면서, 앞으로는 정책지원 대상으로 생활인구에 관련한 사업과 제도 또한 새롭게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학술연구 차원에서 고려했을 때, 기존에 쓰여왔던 ‘생활인구’ 개념이 이번에 법률로 정의된 개념과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생활인구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새롭게 도출하는 작업을 선행할 것이다. 연구 방식으로는 일본 정부와 학계에서 취했던 선행적 연구·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인구’ 개념을 구체화한다. 해외에서 사용 중인 유사 개념을 참고하되, 이국적 문화차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국내 생활인구 특징을 유형화할 수 있도록 조작적 틀로서 분석한다. 세부적으로는 문헌분석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관계인구 개념을 조사하였고, 유사개념 분석으로부터 생활인구를 개념화하였다. 생활인구 유형화를 위해서는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특정 사례지역의 생활인구 개념과 특성을 분석한 이 연구는 한정된 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특징을 살려 연구안에서 정의한 생활인구에 대해 유형별 활성화 방안까지 제시한다.

### Ⅲ 생활인구 개념화

#### 1. 유사개념으로부터의 고찰

##### 1) 관계인구 개념의 학술적 확장

일본에서 통용되는 관계인구(關係人口) 개념은 정주민구와 교류인구의 가운데 영역에 속한다. 정주하지 않고도 지방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나타났다. 관계인구<sup>3)</sup> 개념은 2016년 다카하시 히로유키(高橋博之)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는 관계인구의 원형적인 개념이 되었다. 사시데 가즈마사(指出一正, 2016)는 관계인구가 교류인구<sup>4)</sup>에 비해 적극적으로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서 '적극성'과 효과를 '가시화'하는 이들이라고 설명하였다. (류영진, 2020).

다나카 테루미(田中輝美, 2017)는 관계인구가 '바람의 사람(風の人)'으로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왕래함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야마모토 츠카사(山本司, 2017)는 명예정(町)민과 같은 행사를 통한 교류인구가 관계인구로 연결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위 논의들은 관계인구의 기반을 쌓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정주'와 '교류' 사이라는 이분법적 정의에 얽매이지 않고 관계인구를 지역혁신 및 콘텐츠로 보는 다각화된 관점도 등장하였다. 다사카 이츠오(田坂逸朗, 2018)는 관계인구가 지역 브랜드에 크게 관여한다고 보았으며, 사쿠노 히로카즈(作野広和, 2019)는 관계인구를 '도농관계', '로컬 이노베이션', '정주민구보완'의 세 각도에서 보아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토 슌지·타쿠미 하타사와(佐藤俊治·畑澤巧, 2020)는 관계인구가 라이프스타일 다양화의 배경이 되고, 복층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에 사례를 적용하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오와다 준코·카자미 쇼조(大和田順子·風見正三, 2020)는 관계인구와 지역 간 협동을 통해 지역과제 실천과 인재 육성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모델 구축의 필요성도 논하였다. 카와바타 아키라 외 2(川端亮 外 2, 2021)는 대학 구성원을 관계인구로 보고, 재난 복구 과정과 과소지 마을 조성에 어떤 프로세스를 제공하는지 고찰하였다.

〈표 5〉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관계인구 개념 확장을 2016년에서 2017년은 관계인구 개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도입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관계인구 학술적 논의 및 개념이 풍성해지는 '심화기',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학계에서 실제 사례연구를 적용하고 있기에 '적용기'로 나눈다. 하지만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은 연구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통일적인 관점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로 작용한다.

3) 다카하시 히로유키의 저서 '도시와 지방을 섞다 : 타베루 통신의 기적'에서는 관광으로 대표적인 교류는 일회적이거나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고 규정하였다. 반면, 상시로 교류가 나타날 수 있는 정주는 실현될 장벽이 높다는 특징을 밝혔다. 정주와 교류에 속하지 않는 인구를 관계인구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류영진, 2020).

4) 교류인구는 1987년 일본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에서 '교류 네트워크의 구상'에 제창된 기본 방침 가운데 교류 기회 만들기로 '도시와 농·산·어촌과의 광역교류'가 등장한 데에서 나왔음(한주성, 2019)

〈표 5〉 관계인구 개념의 학술적 확장의 시기적 구분과 내용적 구분

학자명	시기적 구분	내용적 구분
다카하시 히로유키(高橋博之)	도입기 (이분법적, 제3의인구)	관광은 일회적인데 정주는 장벽이 높기에 그 사이의 관계인구를 보아야 함
사시데 가즈마사(指出一正)		관계인구는 교류인구보다 '적극성'과 '능동성'이 돋보임
다나카 테루미(田中輝美)		관계인구는 '바람의 사람(風の人)'으로 지역에 들락날락하는 인구
야마모토 츠카사(山本司)		명예정(町)민과 같은 교류인구를 관계인구로 연결해야
다사카 이츠오(田坂逸朗)	심화기 (로컬 이노베이션, 지방재생 측면 다각화)	관계인구는 지역 브랜드에 관여
사쿠노 히로카즈(作野広和)		관계인구를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서 봐야함
사토 슌지·타쿠미 히타사와 (佐藤俊治·畑澤巧)		라이프스타일과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돼야
오와다 준코·카자미 쇼조 (大和田順子·風見正三)		관계인구의 모델 구축 필요성 제시
카와바타 아키라 외 (川端亮 外)	적용기 (커뮤니티, 지역사회 개념 적용)	대학 구성원의 재난 복구 프로세스가 과소지 마을 조성에 어떤 상관관계를 끼치는지 살펴봄

## 2) 관계인구 개념의 정책적 확장

관계인구를 정책적으로 처음 도입한 지역은 야마나시현이다. 야마나시현은 2017년 ‘야마나시 연계(linkage) 프로젝트’를 통해, 야마나시현과 관련성 및 귀속 의식이 높은 인구를 관계인구 유사개념으로서 ‘연계인구’로 칭하였다(이소영·김도형, 2021).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6년 총무성이 ‘앞으로의 이주·교류시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검토회’에서 관계인구를 언급한 이래, 2018년 관계인구를 지역재생 및 인구감소대응정책으로서 채택하였는데, 당해 33개 지자체를 채택해 ‘관계인구 창출사업’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019년에 본 사업은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으로 심화되면서 ‘관계심화형(연고형, 고향납세형)’, ‘관계창출형’, ‘저변확대형’, ‘저변확대형 외국인형’의 4가지로 구체화되었다. 2020년에는 25개의 지자체가 더해지며 상한 500만엔~900만엔 선에서의 자금이 조달되었다. 2021년에는 불확실한 평가지표(KPI) 측정을 이유로 사업을 임시 중단하였다. 이는 관계인구 도입에 있어 명확한 성과 지표와 카운트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제공해준다.

“정확한 관계인구 수를 카운트하기 위한 전수조사는 현 상황으로는 어렵지만, 국토교통성이 2020년 18세 이상 성인 7만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관계인구수를 1,827만 명(일본 인구의 15%)으로 추정했으나, 이것이 사업의 성과인지는 모호하다.” (총무성, 2022)

관계인구 개념의 정책적 확장에서는 지자체가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데, 이러한 선도적 시도는 중앙정부가 사업을 공식화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 <표 6>과 같이 관계인구 정책적 시도는 야마나시현의 시도를 ‘도입기’라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총무성 관계인구 사업시기는 ‘확장 및 정제기’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인구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 설정 및 실효성 검증이 우선시 돼야 함을 시사해준다.

<표 6> 관계인구 개념의 정책적 확장의 시기적 구분과 내용적 구분

시기적 구분	사업주체명	내용적 구분
도입기	야마나시현(지자체)	야마나시와 연관 높은 인구를 연계인구로 정의 (2017)
확장 및 정제기	총무성(중앙정부) → 지자체 예산 조달 役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 ‘지역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2018)
		‘관계심화형(연고형, 고향납세형)’, ‘관계창출형’, ‘저변확대형’, ‘저변확대형 외국인형’으로 세분화(2019)
		관계인구가 지역과 보다 깊게 연결되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원격협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공공단체 간 지원 확대(2020)



## 2. 새로운 인구개념의 필요성 : 인구특별법 제정과 생활인구

### 1) 생활인구의 법적 정의

이제는 정주인구 증가 등 양적 인구 확대에서 벗어나, 지역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 방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민현정·김병진, 2022 : 152). 2022년 6월 10일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약칭 : 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아래 <표 7>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인구 유형을 포함한다.

<표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정의

유형	정의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체류유형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에 따르면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정주인구로서 ‘거주자’, 체류유형과 외국인을 일정 기간 지역에 방문하여 머무는 ‘체류자’로 분류할 수 있다. 생활인구는 이 거주자와 체류자 분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본의 관계인구가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 사이 스펙트럼에 상응하는 인구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법에서 정의한 생활인구는 일본의 관계인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sup>5)</sup>

한편,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전부터 국내에서 사용한 생활인구 개념은 서울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인구 개념은 ‘서울의 특정지역, 특정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sup>6)</sup>’이며 거주자와 체류자 모두가 포함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 생활인구 개념에서 체류자가 ‘유동인구(流動人口) 관점에서 확대된 유형<sup>7)</sup>’이라면, 법적 개념으로서의 생활인구 가운데 체류자는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 관점에서 설정된 유형’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적 개념으로서 생활인구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롭게 정의된 인구 개념으로 지역의 정주인구와 체류인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5) 관계(關係)와 생활(生活)이라는 용어의 의미상 차이로 이 연구에서는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함

6)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s://data.seoul.go.kr/dataVisual/seoul/seoulLivingPopulation.do>) / 접속일 2022.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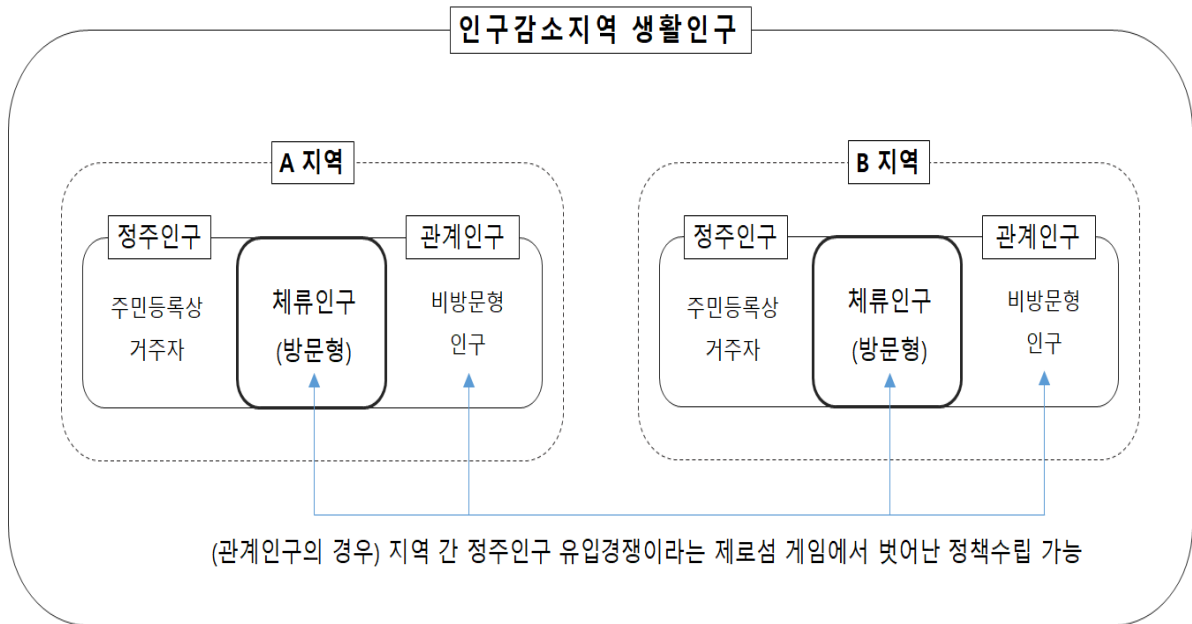
7) 서울시의 생활인구 개념은 유동인구의 개념에 가까우나, 인구특별법상의 생활인구 개념은 흘러 지나가는 인구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여 일정 정도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함(이소영, 2022,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2022.7.21. 뉴스레터-생활인구 확대를 극복하는 지역소멸 / 접속일 2022.10.23.)

## 2)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형과 생활인구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인구 현황과 지역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상황에 알맞은 생활인구 범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용어인 생활인구 개념에서 여러 인구의 유형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법적 생활인구는 크게 ‘정주인구’와 ‘체류인구’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을 참고하면, 체류인구가 아니지만,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비방문형 관계인구’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수립 시 고려해볼 수 있는 인구유형이다. 관련 법 제정 이전에 지자체의 생활인구 관련 정책사례를 살펴보면, 유동인구, 관계인구, 체류인구 등 다양한 정책용어가 활용되고 있다(이소영, 2022).<sup>8)</sup>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최상위 인구개념을 생활인구로 설정한다면, 생활인구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정주인구와 관계인구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관계인구는 방문형과 비방문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유형 중 체류인구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전략이 다양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류인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상이며 체류주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목표집단별 전략과 사업이 강구될 수 있다(이소영, 2022).<sup>9)</sup>



[그림 2] 생활인구 개념에서 정리한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형

8) 서울시의 생활인구 개념은 유동인구의 개념에 가까우나, 인구특별법상의 생활인구 개념은 흘러 지나가는 인구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여 일정 정도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함(이소영, 2022,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2022.7.21. 뉴스레터-생활인구 확대로 극복하는 지역소멸 / 접속일 2022. 10.23.)

9) 서울시의 생활인구 개념은 유동인구의 개념에 가까우나, 인구특별법상의 생활인구 개념은 흘러 지나가는 인구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여 일정 정도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함(이소영, 2022,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2022.7.21. 뉴스레터-생활인구 확대로 극복하는 지역소멸 / 접속일 2022. 10.23.)



## IV 생활인구 특성 도출의 위한 사례연구

### 1. 사례연구 개요

생활인구 설명요인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는 생활인구 개념을 구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분석으로 내용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그리고 평균비교분석(t-test, ANOVA)을 진행하였다.

내용분석 대상은 2016년 이후 관계인구에 대해 논의한 일본 학술문헌과 한주성(2019) 및 류영진(2020)의 논문 및 국내 관계인구 보고서다. 이 중 관계인구에 대한 정의 및 제시를 한 학자의 문헌을 기준으로 18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생활인구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구조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이며, 평균비교 분석은 생활인구의 설명요인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지 실증분석 하는 단계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평균비교분석을 위한 자료는 관계인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강원도 평창군을 대상으로 하였고, 구체적인 설문조사 지역은 평창읍 내 올림픽시장 인근이다. 설문조사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2년 8월 7일까지 진행하였고 설문 대상은 평창읍에 거주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평창읍을 방문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설문내용은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설명 요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지는 총 148부를 진행하였고 결측치를 가진 설문응답 6개를 제외하고 142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Python 3.8버전 statsmodels 모듈과 SPSS 25버전을 교차 활용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설문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항목		응답비율	항목		응답비율
성별	남자	70(49.3%)	연고 유무	있다	27(19.0%)
	여자	72(50.7%)		없다	114(80.3%)
연령	19~29세	16(11.3%)	주 방문목적	관광	62(43.7%)
	30~39세	20(14.1%)		업무(출장)	12(8.5%)
	40~49세	24(16.9%)		업무(상시)	17(12%)
	50~59세	40(28.2%)		쇼핑	20(14.1%)
	60세 이상	42(29.6%)		공공서비스	3(2.1%)
교육				-	
기타		28(19.7%)			
거주자	평창군 내	30(21.1%)	주 방문수단	자기차량	122(85.9%)
	강원도 내	20(14.1%)		대중교통	16(11.3%)
	강원도 외	92(64.8%)		택시	1(0.7%)
가구 구성	1인가구	19(13.4%)		공유차량	-
	2인가구	56(39.4%)		도보	3(2.1%)
	3인가구	31(21.8%)		기타	-
	4인가구	27(19.0%)			
	5인가구 이상	9(6.3%)			

## 2. 내용분석 결과

---

생활인구 개념의 설명 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였다. 첫째,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논문 및 보고서를 학술콘텐츠 플랫폼(DBPIA)와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를 통해 ‘관계인구’, ‘關係人口’를 입력하여 18개의 문헌을 도출하였다. 둘째, 문헌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관계인구의 특성을 문장 단위로 정리해보았으며, 이를 비슷한 키워드끼리 묶어보았다.<sup>10)</sup> 셋째, 비슷한 키워드끼리 일종의 그룹을 만들어 ‘설문조사 문항’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내용 분석은 각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정리를 종합하여 <표 9>와 같이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협력활동’이라는 변수는 선행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회적인 기록이나 효과의 가시화’, ‘각각의 지역과제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 및 학생들과 협동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 ‘외부 주체가 관여함으로써 지역주민까지 촉발되어 새로운 주체적인 움직임을 유발’ 등으로 설명한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협력활동 변수를 ‘해당 지역에서 지역민과 협력활동 진행 경험’으로 정리하였다.

---

10) 별첨1. 설문조사 문항과 관계인구 세부요인 구성

〈표 9〉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	변수 의미	분석 척도
협력활동	해당 지역에서 지역민과 협력 활동 진행 경험	7점 척도
관계 심화 의사	해당 지역과 관계를 심화시킬 의사	
지속적 교류	해당 지역의 특정 요소와 지속적 교류	
지인	해당 지역에 얼마나 많은 지인이 거주하는지 정도	
로컬살이 호감	평소 로컬 살이에 대한 관심	
지역자원	지역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	
지역문제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개인활동	해당 지역에서 개인적인 활동 경험	
기부	해당 지역 개인·기관·단체에 기부 경험	
지역애착	해당 지역에 대한 애착	
특산품	해당 지역의 특산품 구매	
효능감	해당 지역을 바꿀 수 있겠다는 느낌	
지역정보 수신	지역정보를 받아본 경험	
지역정보 전달	지역정보를 보내본 경험	
거주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본 경험	
체류	해당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해본 경험	
근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본 경험	
원격 근무 여부	본인의 직업이 원격 근무가 얼마나 가능한지 정도	
현 거주지 스트레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사회적이슈	어떤 지역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에 대한 관심	

### 3.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구조 분석 결과 :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결과로 정리된 변수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값을 요인 분석으로 통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총 20개 변수가 4개 요인으로 그룹화되었다. 요인 1은 기부 변수가 제외된 총 5개 변수로 분류되었다. 요인2는 지역정보 수신·전달, 원격근무 변수가 제외된 4개 변수로 분류되었다. 요인3과 요인4는 특산품 변수만 제외되어 각각 3개 변수로 분류되었다.

요인1은 지역자원, 효능감, 협력활동, 개인활동, 지역문제 변수로 구성된 그룹으로 어떤 지역과 관계성이 있는 주체가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활동을 한다는 내용에서 ‘지역기반 활동’으로 그룹명을 설정하였다. 요인2는 사회적이슈, 관계 심화 의사, 로컬살이 호감, 현 거주지 스트레스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어떤 개인이 로컬살이에 관심이 있고 어떤 지역의 사회적이슈에 관심이 있는지와 이를 심화시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따라 그룹명을 ‘개인의 내적동기’로 설정하였다. 요인3의 경우에는 거주, 장기체류, 근무와 같이 지역에 머무는 행위이므로 그룹명을 ‘직주 및 체류경험’으로 설정하였다. 요인4는 지속적 교류, 평창애착, 지인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의 어떤 지역 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룹명을 ‘지역 내 네트워크’로 설정하였다.

<표10>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공통성	성분				신뢰도	
		1	2	3	4	Alph a if item Deleted	Cronbach $\alpha$
요인1 (지역기반 활동)	지역자원	.733	.802			.854	.869
	효능감	.709	.732			.833	
	협력활동	.710	.729			.857	
	개인활동	.583	.703			.828	
	지역문제	.626	.694			.843	
	기부	.493	.542			.862	
요인2 (개인의 내적동기)	사회적이슈	.573	.735			.835	.851
	관계 심화 의사	.637	.725			.817	
	로컬살이 호감	.696	.689			.831	
	현 거주지 스트레스	.529	.670			.843	
	지역정보 수신	.666	.586			.820	
	지역정보 전달	.637	.542			.818	
요인3 (직주 및 체류경험)	원격근무	.405	.435			.843	.880
	거주	.820		.884		.800	
	장기체류	.840		.876		.892	
요인4 (지역 내 네트워크)	근무	.686		.763		.785	.829
	지속적 교류	.715			.757	.804	
	평창애착	.803			.756	.786	
	지인	.599			.663	.761	
	특산품	.565			.527	.785	
Kaiser-Meyer-Olkin 측도		.86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669.681					
	자유도	190					
	유의확률	.000					

#### 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생활인구 설명요인 비교분석 결과 : 평균비교분석

##### 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

성별에 따른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t-test 결과, 아래 <표 11>과 같이 생활인구 설명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도 ANOVA 분석 결과, 아래 <표 12>와 같이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성별에 따른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

생활인구 설명요인	인구통계적 특성 :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요인1 ( 지역기반 활동 )	2.19	2.22	1.34	1.35	-0.15	0.881
요인2 (개인의 내적 동기)	3.38	3.40	1.56	1.63	-0.09	0.928
요인3 (직주 및 체류경험)	1.82	1.67	1.68	1.50	0.55	0.584
요인4 (지역 내 네트워크)	3.54	3.50	1.74	1.99	0.13	0.892

<표 12> 연령에 따른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

생활인구 설명요인	인구통계적 특성 : 연령				
	연령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결과
요인1 (지역기반 활동)	19-29세	2.4933	1.41596	0.535/ 0.710	Scheffe 검증
	30-39세	2.0300	1.49141		
	40-49세	1.9583	1.18978		
	50-59세	2.3250	1.39720		
	60세 이상	2.2341	1.30912		
요인2 (개인의 내적 동기)	19-29세	2.8906	1.34154	1.060/ 0.379	Scheffe 검증
	30-39세	3.0125	1.67504		
	40-49세	3.3438	1.52838		
	50-59세	3.6500	1.61106		
	60세 이상	3.5536	1.64496		
요인3 (직주 및 체류경험)	19-29세	2.0625	1.79802	1.744/ 0.144	Dunnet T3 검증
	30-39세	1.1500	.48936		
	40-49세	1.6111	1.69873		
	50-59세	1.5833	1.11389		
	60세 이상	2.1626	2.06037		
요인4 (지역 내 네트워크)	19-29세	3.6667	2.28684	2.120/ 0.082	Dunnet T3 검증
	30-39세	2.9167	1.37596		
	40-49세	2.8750	1.37195		
	50-59세	3.6417	1.99342		
	60세 이상	4.0238	1.93442		

## 2) 거주지역에 따른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

거주지역에 따른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ANOVA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3>과 같으며, 직주 및 체류경험과 지역 내 네트워크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직주 및 체류경험 요인의 경우 평창군 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강원도 내·외 거주에 비해 관계인구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네트워크 요인의 경우 평창군 내 거주하는 경우가 강원도 외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관계인구 특성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거주지역에 따른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

생활인구 설명요인	인구통계적 특성 : 거주지역				
	거주지역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증결과
요인1 (지역기반 활동)	평창군 내	2.5586	1.47588	1.222/ 0.298	Scheffe 검증
	강원도 내	2.1200	1.18304		
	강원도 외	2.1209	1.33129		
요인2 (개인의 내적 동기)	평창군 내	3.2750	1.66007	0.786/ 0.458	Scheffe 검증
	강원도 내	3.0500	1.62748		
	강원도 외	3.5082	1.56430		
요인3 (직주 및 체류경험)	평창군 내	2.9667	2.43907	13.074/ 0.000**	Dunnet T3 검증 (a>b,c)
	강원도 내	1.3667	1.13375		
	강원도 외	1.4322	1.06167		
요인4 (지역 내 네트워크)	평창군 내	4.3444	2.06129	3.942/ 0.022*	Scheffe 검증 (a>c)
	강원도 내	3.5167	1.74877		
	강원도 외	3.2609	1.77613		

\*p<0.05 \*\*p<0.01

### 3) 가구 구성에 따른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

가구 구성별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ANOVA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개인의 내적 동기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는데 가구 구성 중 3인 가구의 경우가 1인 가구에 비해서 관계인구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가구 구성에 따른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

생활인구 설명요인	인구통계적 특성 : 가구 구성				
	연령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증결과
요인1 (지역기반 활동)	1인 가구	1.9474	1.18292	1.532/ 0.197	Scheffe 검증
	2인 가구	2.0321	1.24858		
	3인 가구	2.5800	1.46532		
	4인 가구	2.1462	1.30299		
	5인 가구 이상	2.8444	1.76572		
요인2 (개인의 내적 동기)	1인 가구	2.4605	1.64626	2.698/ 0.033*	Scheffe 검증 (c)a)
	2인 가구	3.4330	1.61350		
	3인 가구	3.9435	1.48564		
	4인 가구	3.3519	1.51000		
	5인 가구 이상	3.3611	1.29368		
요인3 (직주 및 체류경험)	1인 가구	1.4912	1.25889	0.477/ 0.753	Scheffe 검증
	2인 가구	1.7798	1.71184		
	3인 가구	1.6889	1.58763		
	4인 가구	1.7284	1.64352		
	5인 가구 이상	2.3704	1.45721		
요인4 (지역 내 네트워크)	1인 가구	3.0351	1.79813	2.128/ 0.081	Scheffe 검증
	2인 가구	3.6905	1.89828		
	3인 가구	3.5484	1.88473		
	4인 가구	3.0494	1.81566		
	5인 가구 이상	4.8889	1.47196		

\*p<0.05

#### 4) 지역 연고 유무에 따른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

지역 연고 유무에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t-test 결과는 아래 <표 15>과 같다. 직주 및 체류경험과 지역 내 네트워크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 연고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관계인구 특성이 강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15> 지역 연고에 따른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

생활인구 설명요인	인구통계적 특성 : 지역 연고 유무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요인1 (지역기반 활동)	2.29	2.20	1.28	1.36	0.30	0.763
요인2 (개인의 내적 동기)	3.38	3.41	1.49	1.61	-0.08	0.935
요인3 (직주 및 체류경험)	2.65	1.53	2.25	1.32	3.37	0.001*
요인4 (지역 내 네트워크)	4.95	3.20	1.85	1.72	4.66	0.000*

\*p<0.01

#### 5) 주 방문목적에 따른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

주 방문목적별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ANOVA 분석 결과는 오른쪽 <표 16>과 같다. 지역기반 활동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의 내적 동기 요인을 살펴보면, 주 방문목적이 상시 업무인 경우가 관광, 출장, 쇼핑, 기타에 비해 관계인구 특성이 강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직주 및 체류경험 요인의 경우에는 상시 업무를 목적의 방문자가 관광, 쇼핑, 공공서비스 목적에 비해 관계인구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네트워크 요인의 경우에는 상시 업무 목적과 기타 목적의 방문자 두 가지 유형 모두가 관광과 공공서비스 목적에 비해 관계인구 특성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주 방문목적에 따른 생활인구 설명요인의 차이

생활인구 설명요인	인구통계적 특성 : 주 방문목적				
	연령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증결과
요인1 (지역기반 활동)	관광	2.0290	1.36025	1.218/ 0.304	Scheffe 검증
	업무(출장)	2.3500	1.04142		
	업무(상시)	2.9467	1.62387		
	쇼핑	2.0900	1.19556		
	공공서비스	2.0000	1.11355		
	기타	2.2714	1.35013		
요인2 (개인의 내적 동기)	관광	3.2742	1.61366	4.735/ 0.001*	Dunnet T3 검증 (c)a,b,d,f)
	업무(출장)	2.5833	1.39940		
	업무(상시)	4.8676	.95245		
	쇼핑	2.8125	1.72801		
	공공서비스	3.5000	1.75000		
	기타	3.5179	1.30868		
요인3 (직주 및 체류경험)	관광	1.2097	.54400	9.622/ 0.000*	Dunnet T3 검증 (c)a,d,e)
	업무(출장)	2.3333	2.26969		
	업무(상시)	3.7708	2.56968		
	쇼핑	1.2667	1.11659		
	공공서비스	1.4444	.38490		
	기타	1.9167	1.53860		
요인4 (지역 내 네트워크)	관광a	2.5914	1.43012	9.598/ 0.000*	Dunnet T3 검증 (c)a,e / f)a,e)
	업무(출장)b	4.0278	1.99220		
	업무(상시)c	5.1961	1.84112		
	쇼핑d	3.7667	2.05509		
	공공서비스e	2.2222	.50918		
	기타f	4.3333	1.52078		

\*p<0.01

## 5. 사례연구 소결 : 생활인구 특성 도출

우리나라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는 인구의 자연증감량 감소보다 사회적 인구 유출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저출산과 고령화 가운데 인구의 자연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구의 유출은 지방 소도시의 존립마저 위협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 먼저 나타났고, 그에 따라 관계인구(關係人口) 개념의 등장과 함께 정책도 추진되어왔다.

한국에서는 관계인구 개념이 정책용어로 정착되지 않고,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생활인구 개념이 정립되었다. 국내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그에 맞는 개념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하여 생활인구 개념을 구조적으로 해석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일본의 연구를 토대로 관계인구 개념을 설명하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념의 구조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20개 설명요소가 도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협력활동, 관계 심화 의사, 지인 거주 여부, 로컬살이 호감, 지역자원 활용, 지역문제 해결, 기부 여부, 지역 애착, 특산품 구매, 지역 변화 효능감, 지역정보 수신, 거주 경험, 체류 경험, 원격 근무 여부, 현 거주지 스트레스 등이 속한다.

20개의 설명요소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평균비교분석을 진행하여 생활인구의 설명요인을 도출하여 생활인구 개념을 구조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생활인구는 ‘지역기반 활동’, ‘개인의 내적동기’, ‘직주 및 체류경험’, ‘지역 내 네트워크’ 같은 크게 네 가지 요인을 참고하여 설명해볼 수 있다. 각 설명요인을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지역기반활동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네 가지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세 가지 요인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 부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생활인구를 설명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인은 ‘개인’과 ‘지역’이라는 두 가지 틀에서 해석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내적동기가 포함되며,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내 네트워크가 해당한다. 개인과 지역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역기반 활동과 직주 및 체류경험이라는 요인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생활인구는 개인과 지역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인구유형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생활인구에 대한 논의와 적용이 대두하는 시점에 개념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 대상 스스로가 생활인구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자주 방문하는 사람 정도의 기준에 그쳤다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스스로 생활인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특성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V 국내 생활인구 관련 정책 분석

### 1. 중앙정부 지방소멸 지원시책 분석

#### 1) 범국가 인구문제에 대한 국가조직의 제한적 참여

생활인구 활성화는 인구정책에 속한 시책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앞서 경험한 프랑스에서는 ‘국가비상사태’(1989)를 선언하는 방식으로까지 인구문제에 대응했다. 일본의 경우 개각을 단행하여 특임장관 임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시도하려는 전환적 모습을 보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국내에도 인구안정처 및 인구 전담장관 신설 등 공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인구사회정책’ 차원에서 지방소멸 대응 지원시책을 통해 관련한 인구문제 해결을 추진해왔다.

올해 들어 출범한 제4기 인구정책 TF는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여전히 ‘생산가능인구’·‘고령사회’·‘초저출산’에 기반한 자연적 인구증감에 집중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2). 인구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 가운데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독립된 정부 조직이 부재하다는 점과 껌직을 통해 정책 담당자들을 배치한 점은 부분적 영역인 생활인구 활성화 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계로 나타난다.

제4기 인구정책 TF는 <표 17>과 같이 46개 정부 조직 중 17개만이 참여한다. 제3기 TF와 비교했을 때, ‘국방부’가 참여한 것이 큰 변화임에도 그 참여 배경이 ‘생활인구로서의 군병력’보다 ‘병역 인구 부족’ 차원에서 접근하였기에 생활인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범부처 차원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생활인구 활성화’까지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조직개편 또는 인구정책 TF의 작업반 구성과 및 부처별 역할 분담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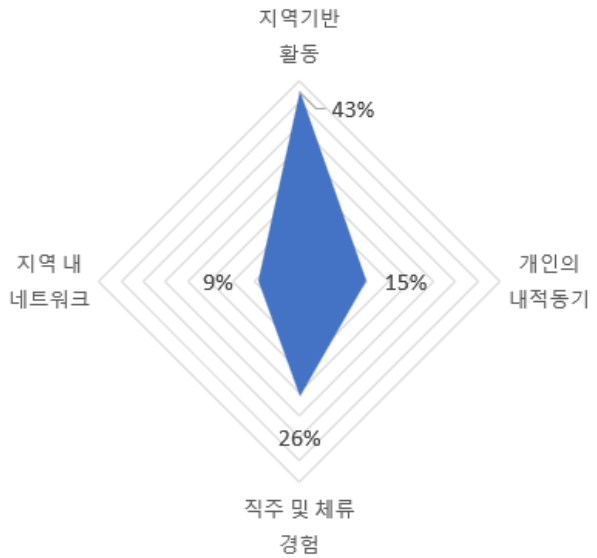
일례로 기획재정부에서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법제처, 2022). 향후 개편에서는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증원과 분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인구변화와 관련한 직제개편 시도를 통해 생활인구 활성화 관련 분장과 증원에 힘써야 한다.

<표 17> 제4기 인구정책 TF 참여 정부조직

참여 (17)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통계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조직법 비해당 조직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미참여 (29)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외교부, 통일부,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환경부,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 2)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업에 대한 방향성 검토

행정안전부(2021)는 18개 정부 조직에서 88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 유형을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귀농·귀촌’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앞장에서 도출한 생활인구 관련 4개 요인과 이 정책을 대조하여 본 결과, 6개 조직의 33개 시책만이 주민이 아닌 방문 및 체류형 생활인구 대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림 3]과 같이 체류형 생활인구와 관련 시범사업은 지역기반 활동(43%) > 직주 및 체류경험 (26%) > 개인의 내적동기 (15%) > 지역 내 네트워크 (9%) 순으로 관련성을 보였다.



[그림 3] 중앙정부 지방소멸 대응 정책 생활인구 요인도

따라서 기존 구분에 한정하지 않는 기준에서의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 개발과 관계 정부 조직의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 인구정책 TF에 속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귀농·귀촌이라는 기존 틀에서 정책이 발굴되지 않았던 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포함되었으나, 생활인구 요인과 무관했던 사업을 보완하거나 조정하여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으로 전용(轉用)할 수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생활인구 관련 사업 가운데 취약한 요인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 2. 지방정부 지방소멸 대응시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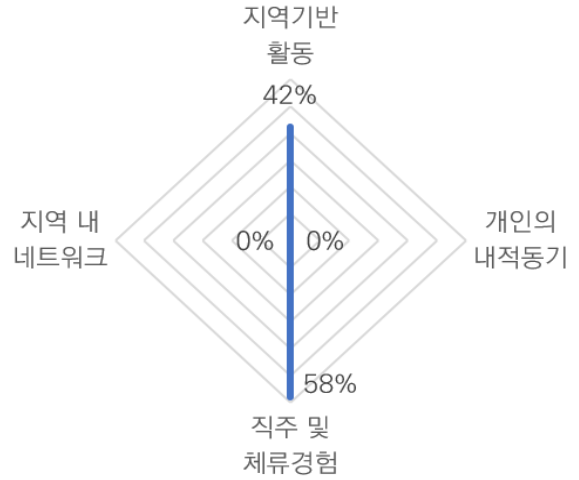
행정안전부(2021)의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23개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시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 40개 시책이 추진되었다. 이 중 <표 18>과 같이 생활인구 관련 사업은 7개 지역에서 14개(39%)가 발견되었다.

관련 사업으로는 ‘직주 및 체류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기반 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이 다음으로 많았다. 두 요인은 12개 시책(32%)에서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직주 및 체류경험을 지원하는 동안 다양한 활동·경험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사업을 다방면에서 지원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도시청년시골파견제’와 전라남도 ‘청년 퍼스트펍권 육성 프로젝트’는 정착을 희망하는 전국의 청년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아이템을 실현하며 지역에 머무는 과정을 지원한다.

‘직주 및 체류경험’, ‘지역기반 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은 대부분 청년, 농업과 관련된 과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였으며, 기획교육과, 미래사업 추진단, 총무과 등에서도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파악했던 사업 내에서는 개인의 내적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시책과 지역 내 네트워크와 관련된 시책은 전무(全無)하였다. 많은 시책이 창업이나 콘텐츠 생산 등의 지역기반 활동과 머무를 기회를 제공하는 직주 및 체류경험 시책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 ‘이주’를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표 18〉 지방정부 지방소멸 대응 정책 중 생활인구 관련 사업

지역	사업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청년시골파견제(인구정책과)</li> <li>이웃사촌시범마을(청년정책관)</li> <li>귀농귀촌유치지원(농업정책과)</li> <li>귀농창업활성화지원(기획교육과)</li> </ul>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인구청년정책관)</li> <li>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유지지원(인구청년정책관)</li> <li>청년 퍼스트펍권 육성 프로젝트(인구청년정책관)</li> </ul>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에서 살아보기(농업진흥관)</li> <li>경주에서 한달 살아보기(미래사업추진단)</li> </ul>
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농업지원과)</li> <li>고령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농업지원과)</li> </ul>
문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입장학금(총무과)</li> </ul>
칠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인재 지역 정착지원(일자리경제과)</li> </ul>
통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후계농 영농 정착지원(농축산과)</li> </ul>



〔그림 4〕 지방정부 지방소멸 대응 정책 생활인구 요인도

## VI 국내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 1. 지역적 분배를 고려한 대학의 지역 연계 추진단 설치

대학은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학의 존재감은 더욱 크다. 대학은 지식과 인재의 집합체이며,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고 지내는 최소 시간을 확보해준다. 또한 지역사회에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 대학교의 대부분은 단지형 캠퍼스를 구성하고 있어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RIS), BK21 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교육부와 연구재단에 의해 추진된다. 그리고 산학협력이라는 기조 아래 진행된다.

그러나 대학은 산학협력의 관점보다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역할을 제시하는 학술 이론을 살펴보면 과학적 지식의 생산만 담당하는 지식공장, 지식의 교환이 일어나는 관계적 대학, 지식의 적극적인 상업화를 이루는 기업가적 대학, 일련의 시스템 속에서 역할 하는 시스템적 대학, 지역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적 대학으로 나뉜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지원사업은 지역혁신체계라는 시스템적 대학을 지원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기업가적 대학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 한정되는 이유는 교육부와 연구재단이라는 조직적 특성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 연구의 주제에 따라 지역 대학을 활용한 생활인구 창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지원할 수 있다. 캡스톤 디자인이란 전공적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기 중 교과과목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할 수도 있다. 주요 사례로 요코하마 시립대학교의 '위성거점 개선을 통한 지역활성화 기여 사업'은 가나자와구 나미끼 지역 상점가 내 빈 점포에 마련된 지역 거점 공간에서 마을만들기를 비롯한 지역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개인의 내적동기를 확보하는 지역학의 육성이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역에 남을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 중 하나는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이다.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가 아카이빙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정보가 존재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에 대해 스토리가 정리된 문헌과 연구결과를 찾기 어렵다. 일본 가나자와 대학이 폐교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지역학에 집중하여 학생들이 지역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세 번째로 직주 및 체류경험이다. 대학의 수많은 학생 수는 지역 활성화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대학은 캠퍼스 내의 독립적인 기숙사와 생활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주변 지역 내 다양한 빈집을 활용하여 마을형 기숙사를 조성할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미 사람이 살아가던, 생활기반시설이 이미 입지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지역 입장에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더욱 핵심적인 부분은 대학에서 지내는 3~4년간의 시간 동안 직주 및 체류 경험이 자연스럽게 쌓인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네트워크이다. 최근 로컬창업, 로컬크리에이터가 주목받으면서 로컬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들과의 멤버십 차원의 교류 프로그램은 생활인구의 기반은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의 일반기업에 취업하기도 하지만 로컬창업 또는 창업기업에의 취업도 고려할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조직과 제도이다. 첫번째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일본 스모토시에서는 학생이나 교원이 숙박으로 시내 지역에서 지역의 매력이나 자원을 발굴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외부 인재와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매칭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스모토시 지학연계 촉진협의회이다. 국내의 많은 대학에서는 지역공헌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공헌은 일방향적이다. 지역연계 추진단으로 적극적인 양방향의 지역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연계 추진단은 대학간에도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이 입지하지 않고 있는 지역도 고려하여 담당 범위를 상호간에 설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도이다. 일본은 문부과학성 주도로 Center of Community(COC)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는 3기인 COC+R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지역 지향 교육이나 연구, 지역연계 활동을 수행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국내의 수많은 대학지원사업은 산학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과 대학의 연결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다양한 혁신과 대학을 연결로의 확대도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사회의 인구감소 대응 전략으로서 대학-지역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표 19〉 지역적 분배를 고려한 대학의 지역 연계 추진단 설치

<b>목적</b>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생활인구 창출
<b>관계부처</b>	행정안전부, 교육부
<b>연계대상</b>	대학(원)생 및 대학 조직, 지역사회 구성원
<b>사업내용</b>	캡스톤 디자인 및 지역학 교과목, 위성 연구소, 마을형 기숙사, 로컬창업가 네트워크, 대학기구 지역연계처 설치, 지역연계형 대학지원사업
<b>생활인구 요인</b>	직주 및 체류 경험 > 지역기반 활동 > 개인의 내적동기 > 지역 내 네트워크

## 2. 일자리형 지역생활 탐험대(새살 탐험대)

우리나라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가 인구의 자연증감량보다 사회적 이동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면, 연고가 없는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지역 내 활동을 탐색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지역의 생활인구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마을에서는 귀농·귀촌인들과 ‘풀무학교11’ 졸업생이 모여 농업과 농촌 살림을 체험할 수 있는 ‘젊은 협업농장’ 사례가 있다. 젊은 협업농장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1년 정도의 인턴과정을 통해 농업을 학습하게 하는데, 단순히 농업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농산물 포장과 납품, 동네 회의 참석 등 농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상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즉, 연고가 없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체류경험을 제공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탐색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연고가 없는 지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주요 일거리, 커뮤니티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음으로는 지역 내 활동인 일거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예비 생활인구가 희망하는 일거리 종사자와 관련 지원조직 등을 포함하여 예비 생활인구를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향후 관심자가 생활인구로 발전하여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은 관심자가 기존 지역사회 조직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관심자와 기존 주민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인구 관점에서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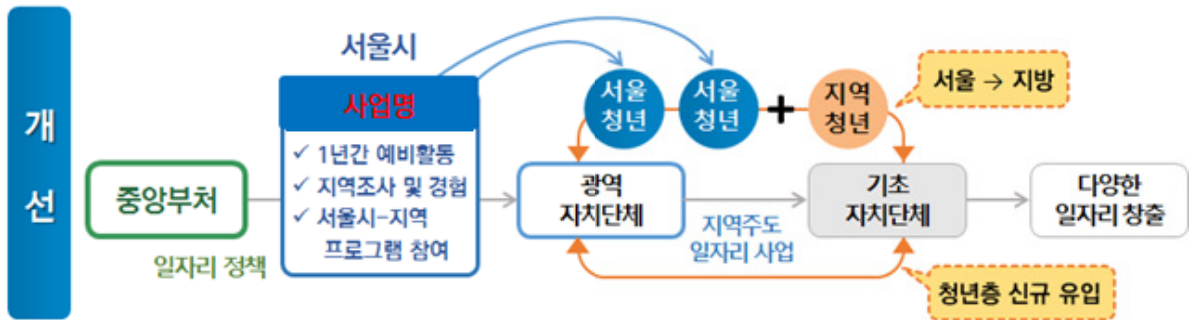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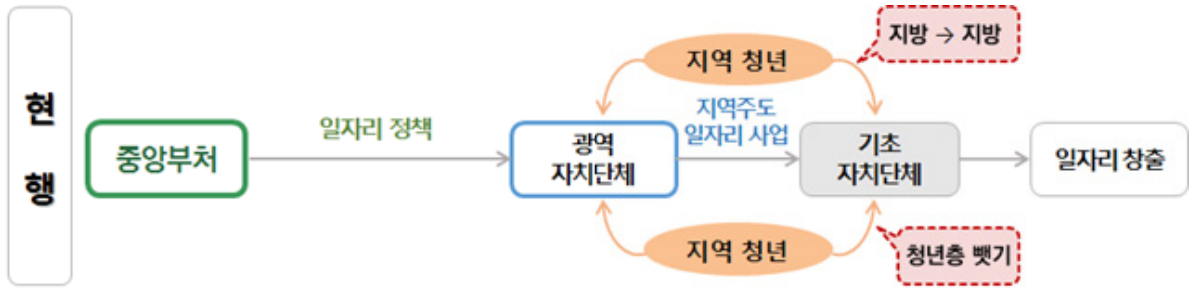
새살 탐험대 사업을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권과 지방의 상생이 필요하다. 대도시권의 참여가 없는 지방 간 생활인구 유치 사업은 서로의 청년층을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일부 개선하여 서울시가 참여하는 새살 탐험대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래 [그림 5]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새살 탐험대 사업의 기본 방향은 지역 상생이다. 사업명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권 청년에게 지방의 여러 지역에서의 일자리 관련 경험과 체류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지역교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중앙 정부와 대도시권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 인구관련 정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도 기대해볼 수 있다.

〈표 20〉 일자리형 지역생활 탐험대 사업 개요

<b>목적</b>	지역 체류경험과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통한 생활인구 유치
<b>관계부처</b>	국도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인구정책 관련 부서 등
<b>연대상</b>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예비 생활인구(귀농·귀촌 관심자)
<b>사업내용</b>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지역 내 활동을 탐색할 수 있도록 주거, 직업 교육,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
<b>생활인구 요인</b>	직주 및 체류 경험 > 지역기반 활동 > 지역 내 네트워크 > 개인의 내적동기

11) 풀무학교(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농업생명산업, 지역 체험활동, 농업기술, 작물재배 등 교과목을 통해 농업인을 양성하고, 귀농·귀촌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다.





[그림 5] 일자리형 지역생활 탐험대 개념도

### 3. 지역거점별 ‘로컬협력센터’ 운영

‘생활인구 활성화’를 정책과 행정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추진할 것인가?”의 주체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과정이 반영된 모델이 요구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관련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0조). 센터의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데, 실태조사 외에도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센터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전대욱·최인수(2020)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귀농·귀촌 등의 정책사업 추진과 함께 중간지원조직이 출범하고 활성화하였다.

생활인구는 지역을 방문하고 체류하는 타지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밖 시민이 특정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접점과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두 개 이상의 이해관계자를 중재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통해 대도시 시민과 인구감소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정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은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존 중간지원조직이 단일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생활인구 대상은 다(多)지역, 타(他) 시민이 될 것이다.

새로운 성격의 중간지원조직은 지금 살고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그 지역의 사람과 콘텐츠와 연결되는 매력적인 경험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유사한 개념으로 정부는 국제문화교류 증진과 자국의 문화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가 협의하여 각국에 문화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 단위 문화원 제도에 착안하여, 국내에서는 대도시와 인구감소 소도시의 문화교류와 농어촌 문화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로서 소통협력공간(COMMONZ FIELD)을 6개 도시<sup>12)</sup>에 조성하였으며, 13개 도시<sup>13)</sup>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 사회혁신 생태계가 일상 속 문제해결에만 집중했다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로컬협력센터’(가칭)는 타 지역과의 소통 확대 및 생활인구 활성화를 대도시 입장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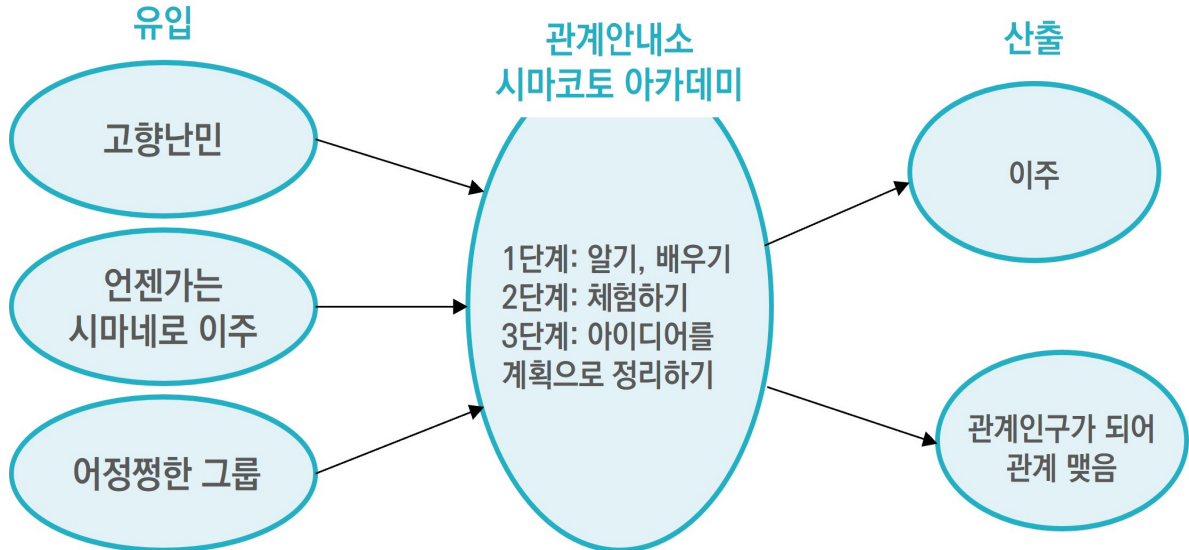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관계인구 관점에서 타지 정착민을 대상으로 ‘고향 알리기’ 차원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이 2011년부터 진행되었다. 시마네현의 ‘시마코토 아카데미’는 ‘알아보기’-‘체험해보기’-‘계획 세우기’ 프로그램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운영하여 아웃바운드(Out-bound) 형 관계안내소로서 역할 하였다(동아일보, 2021).

12) 강원 춘천, 전북 전주, 대전, 제주, 충남, 울산

13)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부산, 울산, 경북, 전북, 제주

〈표 21〉 지역거점별 ‘로컬협력센터’ 운영

<b>목적</b>	대·중규모 도시 시민의 일상에서 지방소멸 문제해결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는 ‘로컬협력센터’ 운영
<b>관계부처</b>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6개 광역시 및 4개 특례시.
<b>연계대상</b>	로컬크리에이터, 인구감소지역 로컬기업 및 유명인사(공인)
<b>사업내용</b>	지역 간 문화교류 및 소도시 문화 소개 업무, 로컬문화콘텐츠 현지 진출 지원 지방소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상품 안내 및 판촉
<b>생활인구 요인</b>	개인의 내적동기 > 지역기반 활동 > 지역 내 네트워크 > 직주 및 체류 경험



[그림 6] 시마코토 아카데미 관계인구 활성화 프로세스

#### 4.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연계조직 ‘브릿지(Bridge) 센터’

인구정책 TF(제4기)가 내세우는 4대 분야에서는 생산연령인구·학령인구·병역 자원을 세부적으로 나눠 살피고, 지역소멸에 대응한 거점도시 활성화 방안과 고령사회 인프라 개선 및 돌봄,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각 논의 방향은 기반이 잡혀있다(기획재정부, 2022). 그러나, 이는 생활인구 도입을 고려하였을 때 분야별로 단편적인 측면이 있으며, ‘사람과 사람’, ‘지역과 사람’의 연결고리까지 궁리하지 못하였다. 타 지역 주민과 원주민 간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학습은 역량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 참여를 유도해나가는 구조로 로컬 거버넌스 측면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김희수 외 2, 2022).

‘유희공간’을 개보수해 ‘브릿지센터’로 명명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협업하고, 행정은 원주민 및 타 지역 주민의 니즈를 서포트 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원주민 간의 거주지역 만족도 및 학습도 제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원주민은 누구보다 지역에 오래 밀착해있기에, 로컬 플레이어로서 지역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둘째, 타 지역 주민이 편하게 지역 시설을 이용하고,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적응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는 지속적인 드나듦을 만들고 낯섬을 타파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셋째, 원주민과 타 지역 주민 간의 연결을 이어주는 ‘정원 캠프’를 도입해야 한다. 독일의 클라이가르텐(Klein Garten) 처럼 유희공간 내 텃밭을 함께 조성하며 주민들 간 친밀감을 높이고, 지자체는 생산물에 대한 상품화 지원도 나서 지역 브랜드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원주민과 타 지역 주민 사이의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고 연대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넷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023.01.01.)에 걸맞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을 내면, ‘브릿지센터’가 지자체로부터 기부내역을 확인받아 기부인에게 ‘명예시민 카드’를 발급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할인권 및 특산품과 이중주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중간다리로서 역할을 한다.

일본에서는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2019)’에서 후쿠시마현 야마쓰리정의 ‘못타이나이(もったいない)<sup>14)</sup> 도서관’을 4회의 워크숍을 통해 사람간, 지역간 교류의 장을 만들어 냈다. 야마쓰리정은 위 사업의 우수사례로 뽑혔다(총무성 지역자립응원과, 2022).<sup>15)</sup> 이는 주민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마을 플랜을 원주민과 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참조해 ‘못타이나이 브랜드화’ 하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야마쓰리정 사업과는 프로젝트 멤버에 대한 대응, 프로젝트 기획 및 입안을 담당하였으며, 야마쓰리정 특산품 개발협의회, 야마쓰리 못타이나이 도서관, 야마쓰리농박 추진협의회는 관계인구와의 교류를 만들어내고 해당 지역의 과제를 공유하였다.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외부위탁자에게 전문 워크숍 실시와 홍보를 부탁하였다. 주체별로 역할 분담이 뚜렷하고 긴밀히 협력한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협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시적으로 로컬 거버넌스 차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14)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깝다, 아쉽다’로, 일본이 식량이 부족한 시절에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먹을 것을 소중히 여겨달라는 데서 유래된 용어

15)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커뮤니티와 도시설계연구실 2022년 하계답사 인터뷰(2022.08.19.) / 총무성 지역자립응원과 담당자 나가무라 쇼우(中村将)와 총무성 지역자립응원과 회의실에서 진행됨

예산 지원방안과 큰 기틀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생활인구 측면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국내외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기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마을기업 발굴 및 교육 컨설팅 등 마을 단위에서 활동을 시행하였다면, '브릿지센터'는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복돋으면서 지역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 또한 앞서 2절에서 살펴본 '로컬협력센터'가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앞장서 알리고, 왜 지역과 함께해야 하는지 지역으로의 문턱을 열어주는 곳이라면, '브릿지센터'는 지역에 들어왔을 때의, 지역 내부에서 네트워크 강화와 사람 간의 연결성 증대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표 22〉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연계조직 '브릿지(Bridge) 센터'

<b>목적</b>	해당 지역 내 원주민과 타 지역 주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함
<b>관계부처</b>	중앙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해당 지역)
<b>연계대상</b>	원주민, 타 지역 주민, 지역 민간 단체
<b>사업내용</b>	원주민 지역 자긍심 제고, 생활인구의 방문지역 관여 방안 모색 및 상호교류의 장(場) 활용 및 재생
<b>생활인구 요인</b>	지역 내 네트워크 > 지역 기반 활동 > 개인의 내적동기 > 직주 및 체류 경험

## VII 결론 및 제언

헌법은 국가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모든 국민의 생활 기반이 되는 국토의 균형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한다(제122조, 123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수도권과 대도시가 출산하기 힘든 환경으로 바뀌어 갈 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서는 인구가 점차 더 큰 도시로 빠져나가며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기울어진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다. 도시와 지역 간 교류 성격을 띤 생활인구 개념과 통계가 활성화되기 전부터, 방문 및 체류 인구는 존재했다. 이번 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생활인구 활성화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함께 지역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평창군 생활인구를 설문하여 분석했을 때, 생활인구의 특징은 ‘지역기반 활동’, ‘개인의 내적동기’, ‘직주 및 체류경험’, ‘지역 내 네트워크’로 묶일 수 있다. 실험적 연구 틀에서 단일 지역을 대상으로 파악한 요인을 전 인구감소지역에까지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지역별 생활인구 유형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은 본 연구가 수행한 유형분석의 의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별 생활인구 유형을 파악은 각 지역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앙정부는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인구정책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생활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주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귀농기층 대응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기존 인구정책 TF는 범부처 성격임에도 참여하지 않는 부처가 더 많다. 따라서 TF 조직개편으로 참여 부처를 확대하는 한편, 각 부처의 인구문제 담당 부서 직제가 신설 또는 강화할 수 있는 보완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에서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나 협력체계가 보이지 않고, 관련 부처의 사업 범위 안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한계가 나타났다. 연구에서 분석한 4개의 생활인구 요인과 비교했을 때, 양 정부에서는 ‘지역기반 활동’, ‘직주 및 체류경험’ 중심의 사업이 두드러져 생활인구 차원의 인식과 생활인구를 향한 동기 활성화가 미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방문 및 체류 이전의 인지(Acknowledge) 기회 및 동기(Motivation) 마련을 위한 점점 인프라 조성을 제안한다.

광역 거점마다 지식생산 및 인력양성의 기능을 맡은 대학의 사회공헌사업을 위치한 지역에서만 한정하지 않고, 광역시도 내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및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 수도권 및 대도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기반으로 한 지역생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도시와 소도시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거점마다 설치한 소통협력공간을 관내 소통이 아닌 지역과 지역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소도시마다 찾아온 생활인구를 초대 하며 환영할 수 있는 물적, 인적자원을 강화가 요구되며 복귀 후 일상에서도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연동 프로그램도 설계되어야 한다. 네 가지 활성화 방안은 독립적이기보다 상호연계성을 띠어, 추진하는 부처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부처별, 지방정부 간 협력에 따른 공동 추진의 필요도 나타나는 만큼 다수의 이해관계조직을 연결할 수 있는 과정과 단위별 책임 조직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VIII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기획재정부, (2022)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 / 접속일 2022.11.24.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58548&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28](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58548&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28)
- 김희수 · 정일지 · 정석. (2022). 지방이주청년의 지원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일본 도쿠시마 현 가미야마정 사례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3권 5호, 73-87.
- 류영진. (2020). 일본의 '관계인구(關係人口)' 개념의 등장과 의미, 그리고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제21권 1호, 6-28.
- 민현정 · 김병진. (2022).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의 시사점과 과제 -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관점에서, 광주전남 정책연구, 제26권
- 법제처. (202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접속일 2022.11.24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6775&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 법제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2885#0000>) / 접속일 2022.10.23.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커뮤니티와 도시설계연구실 2022년 하계답사 인터뷰(2022.08.19.)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s://data.seoul.go.kr/dataVisual/seoul/seoulLivingPopulation.do>) / 접속일 2022.10.23.
- 이정희 (2022.04.11) 텃밭3. 독일의 도시 농업 '클라인가르텐'의 어제와 오늘. 자담. / 접속일 2022.11.26.  
<http://m.jadam.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6>
- 이상호. (2022).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산업과 고용, Vol.3, 한국고용정보원.
-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 이성재 · 한국환. (2021). 인구감소 유형에 따른 실태분석 및 대응 연구 - 전라북도 읍면을 중심으로 -. 지역 사회연구,(),21-47.
- 이소영. (2022.07.21.), -뉴스레터-생활인구 확대로 극복하는 지역소멸.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nabis.go.kr/coverStoryDetailView.do?menucd=320&gbnCode=COM&refCode=140&comIdx=713>) / 접속일 2022.10.23.
- 이소영 · 김도형. (2021) -작지만 강한 연결-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 리포트, 4-23.
- 이정환. (2017). 인구감소와 지속가능한 지방만들기 - 지방소멸(地方消滅)을 둘러싼 논점. 일본공간, 21, 194-223.
- 이지윤. (2021.10.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우리 동네는?.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3147>

- 정영호. (2022.04.23). 4년새 사라진 마을 164개...일본 경제부흥 허리 잘렸다. 한국경제. / 접속일 2022.11.2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236903i>
- 통계청. (2022).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록센서스방식>.
- 최인수 · 전대욱. (2020)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일본의 1억총활약이란 무엇인가 -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Vol 11.
- 한중호. (2021.02.02.) [아무튼 로컬] 관계인구: 로컬과 관계 맺는 사람들. 조선일보. / 접속일 2022.11.24.  
[https://www.chosun.com/special/future100/fu\\_general/2021/02/02/2DCENVIALBDFHNNWAVQBGHO37E/](https://www.chosun.com/special/future100/fu_general/2021/02/02/2DCENVIALBDFHNNWAVQBGHO37E/)
- 한주성. (2019). 농업교육과 체험에 의한 관계인구의 지역활동 -서울시와 지방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4호, 439-448.
- 행정안전부. (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연구,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접속일 2022.10.23.

## 국외문헌

- 田坂逸朗(다사카 이츠오). (2018). 巻き込みと促しあいのファシリテーション——地域ブランドに関する諸活動からの考察——. 広島修大論, 제59권 1호, 89-102.
- 作野広和(사쿠노 히로카즈). (2019). 人口減少社会における関係人口の意義と可能性. 経済地理学年報, 제65권 1호, 10-13.
- 佐藤俊治 · 畑澤巧(사토 쉐지 · 타쿠미 하타사와). (2020). 若者の社会動態の分析と関係人口を機軸とした移住・定住施策の推進について. 地域協働研究 研究成果報告集, 2020년 제2호, 30-37
- 山本司(야마모토 츠카사). (2017). 「関係人口」を広げる! 「まちづくり会社」の「大きな挑戦」~「郡中二百年祭記念事業」に学ぶ~. 調査研究情報誌, 2017년 제2호, 26-37.
- 大和田順子 · 風見正三(오와다 준코 · 카자미 쇼조). (2020). 関係人口による地域価値共創プログラムと地方創生人材育成モデル-宮崎県五ヶ瀬町「関係人口創出事業」を事例に-. 国際 P2M 学会誌, 제15권 1호, 2020, 164-182.
- 総務省(총무성). (2018). これからの移住・交流施策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 1-6.
- 総務省(총무성) 関係人口ポータルサイト(관계인구 포털 사이트)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index.html> / 접속일 2022.11.24.
- 川端亮 · 佐藤功 · 宮前良平(카와바타 아키라 · 사토 이사오 · 미야마에 료헤이). (2021). 関係人口論からみる大学の地域とのかかわり : 西予市野村地域における事例. 大阪大学大学院人間科学研究科紀要, 2021년 제47권, 75-80.
- 日本創成会議, 「ストップ少子化・地方元気戦略」, <http://www.policycouncil.jp/pdf/prop03/prop03.pdf> (검색일: 2022.11.24.)



별첨1. 설문조사 문항과 관계인구 세부요인 구성

출처	관계인구 설명	공통 특징
류영진 (2020)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활동들을 새롭게 재평가하는 역할을 하였음 사시데는 관계인구와 교류인구와의 차이를 교류인구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회적인 기록이나 효과를 가시화(인식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는 이들이라고 설명	협력활동 (7)
大和田順子· 風見正三 (2020)	각각의 지역과제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 및 학생들과 협동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	
作野 (2019)	외부 주체가 관여함으로써 지역주민까지 촉발되어 새로운 주체적인 움직임을 유발 계속되는 전통이나 시끄러움에 얽매이지 않는 지역 자치가 행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지역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보임(作野, 2019)	
총무성 (2018)	담당자로서의 관계인구는 지역산업으로서 지역과 사람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 관계인구의 입구 부근에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지역인재의 육성도 중요해짐	
류영진 (2020)	사시데는 관계인구와 교류인구와의 차이를 교류인구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회적인 기록이나 효과를 가시화(인식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는 이들이라고 설명	관계심화 의사 (4)
作野 (2019)	이주와 교류를 통해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	
총무성 (2018)	커뮤니티 간의 지속적인 교류	
山本 (2017)	관계성을 심화시켜 지역과의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의 지역 만들기의 가능성을 넓힘	지속적 교류 (4)
류영진 (2020)	지방에 참여하고 관여함	
한주성 (2019)	해당 지역을 지속적인 드나듦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됨	
총무성 (2018)	커뮤니티 간의 지속적인 교류 지역(고향)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지역 외의 인재와의 지속적이고 복층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이 중요함	
류영진 (2020)	지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근간을 방문경험에서 도출	지인 (4)
총무성 (2018)	관계인구의 입구 부근에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지역인재의 육성도 중요해짐 지역(고향)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지역 외의 인재와의 지속적이고 복층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이 중요함	
田口 (2018)	외부인이 촉매가 되어 또 다른 외부인과 지역간의 새로운 연계가 창출되기도 함	
作野 (2019)	사시데(2016)에 의하면, 그들은 '로컬'이나 '소셜'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근거하는 생각을, 농산어촌 지역에서 실현하고자 함	로컬살이 호감 (3)
田口 (2017)	관계인구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로 '이주 안 해도 좋다'는 것이 있는데, '로컬'이나 '소셜'이라는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시골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가치관 전환 등으로 '전원회귀'가 가속화되었는데, 이는 국민이 농어촌에 대하여 다양한 관심을 심화시켜 가는 프로세스	
作野 (2019)	지역과제나 지역자원을 활용해야 지역 자원 활용을 비즈니스로서 실행	지역자원 (2)

출처	관계인구 설명	공통 특징
作野 (2019)	지역과제나 지역자원을 활용해야	지역문제 (2)
大和田順子· 風見正三 (2020)	스스로 관계인구로서, 각각의 지역과제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 및 학생들과 협동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출	
류영진 (2020)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활동들을 새롭게 재평가하는 역할을 하였음	개인활동 (2)
한주성 (2019)	해당 지역을 지속적인 드나듦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됨	
丸山 (2021)	관계인구의 그라데이션을 관여 및 관심의 강도순으로 보자면 기부는 물품 구입보다 상위 단계 어떤 지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특산품을 몇번이나 주문하거나 '고향납세'와 같은 형태로 반복 기부를 한 관계인구	지역애착 (2)
岩永 (2019)	방문 지역 애착을 가진 관계인구가 형성되는지에 대해 전국 관광지로의 여행자 약 2만명의 조사에 의해서 검증됨	
田口 (2018)	지역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의지 있는 협력자	특산품 (2)
丸山 (2021)	특산품 구입자에게 다른 매력적인 포인트를 알리기 위해 지역 크라우드 펀딩 등을 소개한다. 어떤 지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특산품을 몇번이나 주문하거나 '고향납세'와 같은 형태로 반복 기부를 한 관계인구	
大和田順子· 風見正三 (2020)	스스로 관계인구로서, 각각의 지역과제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 및 학생들과 협동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출	효능감 (1)
丸山 (2021)	특산품 구입자에게 다른 매력적인 포인트를 알리기 위해 지역 크라우드 펀딩 등을 소개한다.	지역정보 수신 (1)
田口 (2018)	외부인이 촉매가 되어 또 다른 외부인과 지역간의 새로운 연계가 창출되기도 함	지역정보 전달 (1)
한주성 (2019)	해당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도 과거에 그 지역에서 근무나 거주, 체재 경험이 있는 관련자, 비즈니스나 여가생활, 지역지원자 등을 계기로 지역을 오고 간 타향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음	거주(1) 체류(1) 근무(1)
松村茂 (2020)	동경권·긴키권 등 대도시권의 인재가 부업으로 텔레워크로 지방 기업의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에, 관계인구가 생겨나고 장차 이주로 이어질 것	원격 근무 (1)
田口 (2018)	이는 도시지역에서 고수입을 얻으면서도 스트레스를 견디는 삶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로컬'이나 '소셜'이라는 도시에는 적었던 연결고리를 찾아 시골을 지향하는 움직임	현거주지 스트레스 (1)
류영진 (2020)	한 지역의 사회문화 전반에 이르는 다차원적 문제에 대하여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자극을 공급할 수 있는 관계인구가 중요	사회적 이슈(1)

도시·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최종보고회

발표 3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형성 비교  
: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김태건  
공동연구자 이슬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형성 비교

: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태건 / 공동연구자 이 슬

## I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총 인구가 줄어들었다(통계청, 2021).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예측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었다. 2009년 49.0%였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21년 50.4%로 상승하였고 최근 4~5년간 그 상승폭이 두드러졌다(국토연구원, 2022). 국가 전체적인 인구축소 상황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출까지 겹쳐 이증고를 겪고 있는 지방도시들은 실질적인 소멸위기에 마주하게 되었다. 세부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계층의 감소가 특히 우려된다. <표 1>은 지역 인구규모별 청년인구 증감률을 정리한 것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감소율과 비교하여 인구 5만 미만 군지역의 감소율이 무려 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소년계층과 중장년층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보였으나 지역 간 격차는 청년계층에서 압도적이었다. 청년들은 인구구조상 지방도시의 활력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이다. 따라서 청년이탈은 지방도시가 우선 해결해야할 현안이며, 만일 이들 지역이 구심력을 회복하여 청년들의 귀환이 가시화되면 그것은 경제 활성화를 넘어 사회를 변혁하기 시작하는 징후가 될 것이다(엄창욱 외, 2018).

<표 1> 지역 인구규모별 청년인구 증감률(2011~2020)

인구규모	단위: %										평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1	-0.7	-0.5	-0.6	-0.3	-0.1	-0.5	-0.4	-0.6	-1.2	-0.6
수도권 및 광역시도 내 인구 5만이상 50만 미만 중소도시	-1.6	-1.4	-1.2	-1.1	-0.9	-0.6	-0.7	-0.8	-1.1	-1.2	-1.1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 중소도시	-2.6	-2.3	-2.0	-1.9	-1.5	-1.1	-1.5	-2.0	-2.8	-3.6	-2.1
인구 5만 미만 군지역	-3.7	-3.3	-3.1	-2.5	-1.9	-2.1	-2.8	-3.3	-4.5	-5.9	-3.3

출처: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통계청

주1: 청년계층은 19~39세, 주2: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재인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 청년의 지방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다. 일자리 측면에서 농업 및 창업을 지원하거나 주거공간 마련을 보조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청년 유입보다 그들의 자립과 정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의 지방이주와 정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전환이 아니라 과정이며, 현행 정책은 대체로 영속 거주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간과한 채 과정이라는 관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마을학회 일소공도, 2018). 일시적 거주가 아니라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요지라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반드시 주목해야할 요인이 된다. Tibout(1956)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ir feet) 이론<sup>1)</sup>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거환경 여건이 주민의 이동을 결정짓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비수도권 근무에 대한 청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비수도권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로 인적 네트워크 및 생활·문화 인프라 부족을 꼽았으며, 무려 연봉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부여했다. 그렇다면 비도시지역 청년들의 경우 체감하는 주거환경의 격차가 향후 주거선택에 큰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고, 결국 정주의사를 약화시켜 정착을 어렵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청년들의 주거환경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여러차례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정 지역, 단지, 주택유형에 한하여(이지은·이경은, 2018; 이상욱 외, 2019; 손경민·진장익, 2020; 임준홍, 2021)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차이를 직접 고려하지 못하였고, 비도시지역 거주 청년에 대하여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환경만족도 형성과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이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부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였다.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첫 째, 주거지 특성을 반영하여 비도시지역 청년가구를 도시지역과 대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 둘째, 정주의사를 제고하기 위해 청년들의 주거환경 인식을 살펴보고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적 사항을 도출한다는 점이다.

---

1)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수준, 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

## II 문헌고찰

### 1. 근린 주거환경만족도에 관한 일반적 연구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평가 차원에서 주거환경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다. 이성준(2014)과 서원석·박기덕(2020)은 다중회귀모형을, 김헌민·신현주(2018)와 안용인(2019), 김주현·안용진(2020)은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분석과 조절효과분석이 적용되기도 하였는데 윤은영(2020)은 이웃간 상호작용의 매개 효과에, 전준형·박진아(2020)는 보행환경의 조절효과에 주목하였다. 이후의 연구는 분석대상을 세분화, 다각화하여 진행되었다. 윤소영(2021)은 고령자의 주거환경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김세정(2014)은 외국인에, 박효숙·이경환(2018)은 여성에, 권세연·박환용(2014)은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이어지는 '2. 청년들의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거주지역이나 점유형태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서원석(2013)은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정착만족도 형성과정을 파악하였고, 원재웅·이재수(2018)는 임대주택 유형별 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주거환경만족도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김옥진·김태연(2020)과 박주현·이경환(2020)은 각각 건강, 범죄 두려움으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 2. 청년들의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에 관한 연구

청년들이 대표적 주거취약계층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고, 큰 흐름은 앞선 내용과 유사하다. 먼저, 손경민·진장익(2020), 임해린(2021), 서경택(2022), 안균섭·진은애(2022)는 전반적인 청년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효과분석, 구조방정식 경로모형, 사건연구방법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또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세를 감안하여 청년 1인가구로 분석대상이 구체화되었다. 이현정·김모운(2019), 김선주(2020), 민충근(2021), 임준홍(2021)은 다중회귀분석과 순서형 로짓모형을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권정표(2022), 권정표·강정규(2022)는 그중에서 임차가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어서 지역 및 주택유형에 기반을 둔 접근이 등장하였다. 권세연·박환용(2014), 권영수·최완호(2018), 진혜민(2021)은 각각 서울시, 관악구·동작구, 경상북도로 지역적 범위를 세분하였다. 정영광(2022)은 청년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모형에 투입되었던 기존 변수들 외에 임대료·관리비 수준과 시설 성능, 카셰어링을 비롯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추가 투입하여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민동환(2020)은 사회주택을 빈집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비주택 리모델링으로 구분하여 개별 모형을 구축하였고, 신명철·이재수(2019)는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에서 유의미한 만족도 상승을 검증하였다. 만족도 결정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지은·이정은(2020)은 만족도가 정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상욱 외(2019)는 이주와 이주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여러 관점에서 청년들의 주거환경만족도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차이를 직접 반영하고 세부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설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거주 청년들을 비교하되, 요인별 만족도를 통해 연결되는 전반적 만족도 형성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의 범위 및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20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주택계획 및 부동산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매년 수행하는 면접조사로 가구특성 및 구성원특성 외에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거환경만족도, 주거비용, 주거이동 경험 등을 포함한다(신명철·이재수, 2019). 마이크로데이터는 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원(raw)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청년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현재 청년의 범위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법령의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서울이 「청년기본법」을,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준용하고 있고 그 밖에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자체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와 별개로 각 부처는 추진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범위를 달리 정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지원 가능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 등은 각각 ‘39세 이하인 사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청년실업률과 청년패널조사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하며, 관련 선행 연구의 경우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양분되어 있다.

〈표 2〉 청년의 범위

	구분	범위	비고
법률	청년기본법	19~34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5~29세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정책	고용노동부	18~34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39세	창업성공패키지
	국토교통부	19~39세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청년 기본조례	서울	19~34세	「청년기본법」 준용
	부산	18~34세	
	인천, 대구, 광주	19~39세	
	대전	18~39세	
통계	울산, 세종	15~29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준용
	청년실업률, 청년패널조사	15~29세	기획재정부, 한국고용정보원
선행연구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15~39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34세	손경민·진장익(2020), 권정표(2022), 권정표·강정규(2022) 등
		19~39세	민충근(2021), 정영광(2022), 서경택(2022) 등

주: 민충근(2021)의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본 연구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형성과정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거복지로드맵'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을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 2. 분석의 틀

### 1)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특성 비교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거주 지역에 따라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 세부요인별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주택의 종류나 점유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주거지원정책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현황을 살펴본다.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교차분석을 적용하였다. 이들 방법론은 모집단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모를 때 표본으로부터 측정된 분산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두 모집단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독립표본 T-검정은 범주형 독립변수와 연속형 종속변수의 관계를, 교차분석은 범주형 독립변수와 범주형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수단이며 귀무가설은 '양 집단의 평균/비율 분포에는 차이가 없다.'로, 대립가설은 '양 집단의 평균/비율 분포에 차이가 있다.'로 설정한다.

### 2) 주거환경만족도 형성과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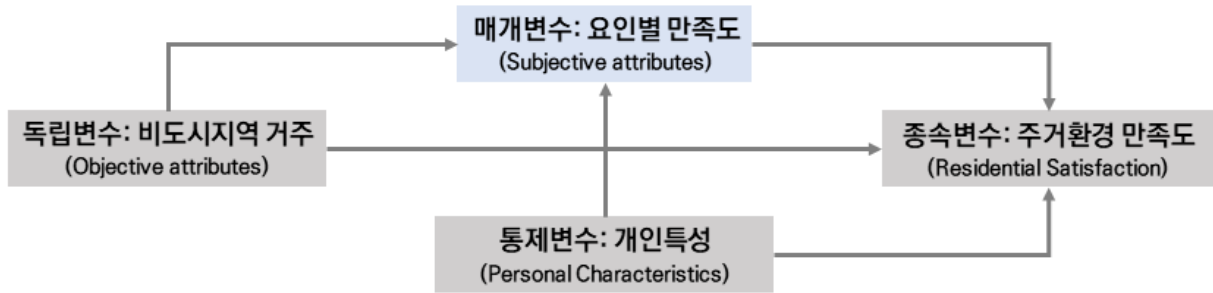
#### □ 모형구축

두 번째 단계는 실증모형을 통해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Amérgo(1992)는 인지(cognitive), 정서(affective), 행동(behavioural)을 포함하여 주거환경만족도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Amérgo의 주거환경만족도 모형에 따르면, 주거환경의 객관적 속성(objective attributes)은 개인의 평가 과정을 거쳐 주관적 속성(subjective attributes)이 되며 이러한 주거환경의 객관적 속성과 주관적 속성은 모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이지은·이경은, 2018). 또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은 객관적 속성이 주관적 속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관여한다. 본 연구는 Amérgo의 모형 중 일부를 활용(〈그림 1〉)하여 매개효과분석(mediation analysis)을 수행하고자 한다. 매개효과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 미치는 영향(직접효과)과 매개변수(mediator variable) 혹은 중개변수(intermediary variable)라고 불리는 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간접효과)을 모두 고려하는 분석방법이다. 청년들의 거주지역 유형과 주거환경만족도의 관계에서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작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Kenny(1986)의 접근법과 Sobel(1982)의 접근법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Baron&Kenny의 접근법은 오류의 위험이 크고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그리고 Sobel의 접근법은 표본분포가 정규분포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검증의 신뢰성을 지적 받고 있다. Hayes(2018)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표본의 반복추출에 기반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Hayes의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 분석모형(Amérigo의 주거환경만족도 모형 일부 활용)



### □ 측정도구

앞선 분석모형을 기반으로 각 변수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Objective attributes)는 비도시지역 여부이다. 국가통계 작성 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동(洞)부, 읍면(邑面)부로 구분하여 표본을 설계하고 결과를 집계·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지가 읍면부인 경우 1, 동부인 경우 0으로 입력하여 독립변수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Residential Satisfaction)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된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이며 매개변수(Subjective attributes)는 세부 요인별 주거환경만족도이다. 주거실태조사는 주거환경만족도 조사 시 전반적 만족도 외에 <표 3>과 같이 여러 세부분항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세부 만족도는 그대로 분석모형에 투입하지 않고 상호 연관된 문항군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상에서 세부 문항의 영역을 공식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 개별문항의 내용을 기반으로 몇 가지 문항군을 지정하고 있다(민충근, 2021; 권정표·강정규, 2022 등). 본 연구는 편의성, 이동성, 환경성으로 세부요인을 구분하고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구성 타당성을 실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요인별 만족도 값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된 하위 세부분항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표 3> 주거실태조사 중 주거환경만족도 관련 변수

구분	변수명	구분	변수명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		6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
		7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1	편의성	8	교육환경
2		9	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
3		10	자동차 경적, 집주변의 소음 정도
4		11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5	이동성	12	대기오염 정도

주1: 측정은 모두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짐

〈표 4〉 주거환경만족도 세부요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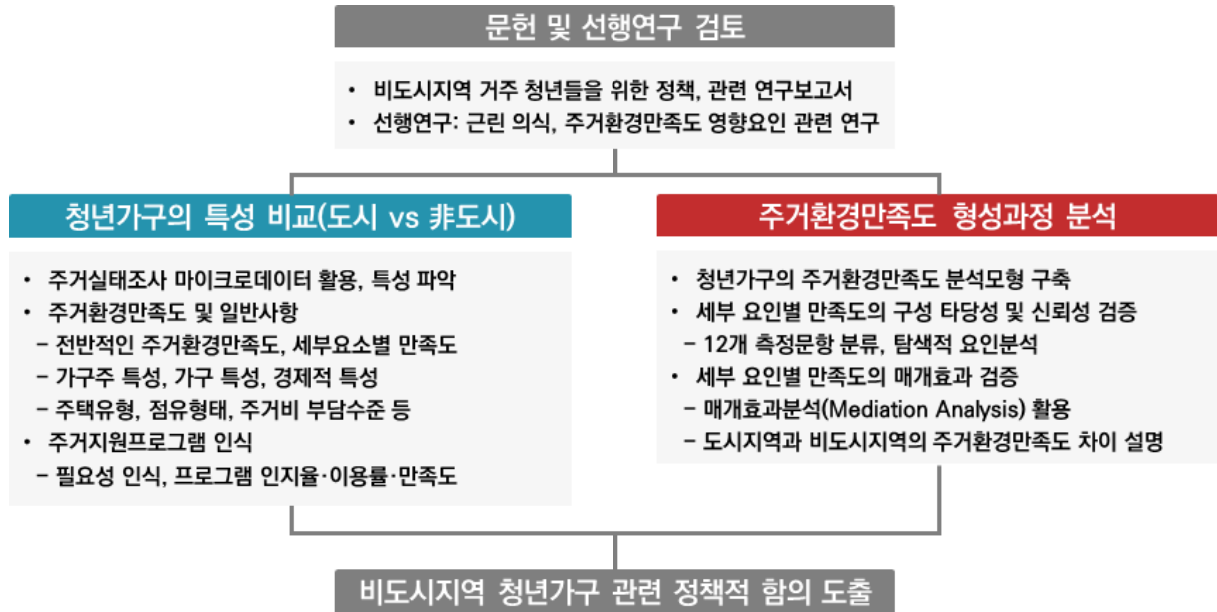
선행연구				본 연구
신명철·이재수(2019)	구한민·김갑성(2021)	민충근(2021)	임준홍(2021)	
편의시설 및 교통접근성	시설접근성	물리적 주거환경	편의시설	편의성
공공시설 접근성	교통편의성	사회적 주거환경	문화·관광·스포츠	이동성
주거지 안전 및 환경	환경쾌적성	자연적 주거환경	환경	환경성
			재해안전	

마지막으로 통제변수(Personal characteristics)는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와 세부요인별 주거환경만족도 형성에 모두 관여하는 변수이며, 크게 가구주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특성으로 나누어 총 11개 변수를 포함하였다. 가구주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 수로 구성된다. 연령은 전체 범위를 10세 단위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고,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입력하였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를 1로, 그 밖의 경우를 0으로 하였다. 이어서 경제적 특성은 월평균 소득과 자산, 주거비 부담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월평균 소득과 자산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총 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며, 0은 자연로그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1로 변환하여 최종 변수값이 0이 되도록 하였다. 주거비 부담수준은 ‘전혀 부담되지 않음’부터 ‘매우 부담됨’까지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를 의미한다. 주거특성은 주택유형과 노후주택 여부, 소형주택 여부, 거주기간을 기간을 포함하는데 각각 아파트, 노후주택, 소형주택, 이주한지 2년 이내에 해당하면 1로 입력하였다. 노후주택과 소형주택 기준은 신명철·이재수(2019)에 따라 주택연한이 21년 이상인 주택,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 보았다.

〈표 5〉 분석모형의 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종속변수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		1 = ‘매우 불만족’ ~ 4 = ‘매우 만족’
독립변수	비도시지역 여부		0 = 도시지역, 1 = 비도시지역
매개변수	편의성		1 = ‘매우 불만족’ ~ 4 = ‘매우 만족’으로 측정된 하위 세부문항의 평균값
	이동성		
	환경성		
통제변수	가구주 특성	연령	0 = 만 19~29세, 1 = 만 30~39세
		성별	0 = 남성, 1 = 여성
		교육수준	0 = 그 외, 1 = 대학교 졸업 이상
		가구원 수	총 가구원 수
	경제적 특성	월평균 소득	ln(가구의 월평균 소득)
		자산	ln(가구의 총 자산)
		주거비 부담수준	1 = ‘전혀 부담되지 않음’ ~ 4 = ‘매우 부담됨’
	주거 특성	주택유형	0 = 그 외, 1 = 아파트
		노후주택 여부	0 = 그 외, 1 = 노후주택(주택연한 21년 이상)
		소형주택 여부	0 = 그 외, 1 =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거주기간		0 = 그 외, 1 = 현 거주지로 이주한지 2년 이내	

[그림 2] 연구의 흐름



## IV 분석결과

### 1.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특성 비교

#### 1) 주거환경만족도 및 일반사항

분석모형 구성 변수 중 연속형 변수에 대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유의수준 1%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는 도시지역에서 더 높았다. 세부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대중교통 접근용이성이 모두 도시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이용과 교통 측면에서 비도시지역 청년들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치안 및 범죄 등 방법상태, 자동차 경적 및 집주변의 소음 정도,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대기오염 정도를 포함하는 환경성과 쾌적성 측면에서는 비도시지역의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교육환경은 예외적이었다. 가구원 수에서는 비도시지역이 평균 2.56명으로 2.20명을 기록한 도시지역보다 다소 많았고, 월평균 소득 또한 우위를 보였다. 응답자가 언급한 주거비 부담수준은 임차비용 및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지역에서 더 높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과 자산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6>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측정항목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평균	표준화 편차	평균	표준화 편차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	<b>3.01</b>	0.496	2.95	0.540
상업시설 접근용이성	<b>3.05</b>	0.623	2.78	0.716
의료시설 접근용이성	<b>3.04</b>	0.634	2.71	0.765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b>3.05</b>	0.594	2.84	0.715
문화시설 접근용이성	<b>2.80</b>	0.735	2.53	0.820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b>3.10</b>	0.644	2.81	0.737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	3.04	0.684	3.00	0.697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3.05	0.556	<b>3.10</b>	0.581
교육환경	<b>3.02</b>	0.578	2.97	0.654
치안 및 범죄 등 방법상태	3.09	0.531	<b>3.12</b>	0.554
자동차 경적, 집주변의 소음 정도	2.88	0.668	<b>3.01</b>	0.664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3.09	0.555	<b>3.14</b>	0.571
대기오염 정도	3.01	0.575	<b>3.18</b>	0.575
가구원 수	2.20	1.245	<b>2.56</b>	1.295
ln(월평균 소득)	5.62	0.776	<b>5.73</b>	0.555
ln(자산)	8.75	2.024	8.75	1.914
주거비 부담수준	<b>3.87</b>	0.847	3.76	0.948



범주형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교차분석에서 30대 비율은 비도시지역이, 여성 비율과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도시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 비율의 경우 셋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소형주택과 노후주택 거주비율은 도시지역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주택 시설 및 성능 부문에서 도시지역이 다소 열악한 경향을 확인하였다. 현 거주지로 이주한지 2년 이내인 비율도 도시지역이 높아 상대적으로 잦은 이주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택 유형의 경우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비도시지역은 아파트와 다가구 단독주택, 일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집중된 상태였다. 비도시지역에서 일반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중이 더 큰 반면,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비중은 더 작았다. 교차분석의 모든 대상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유의수준 1%)하였다.

〈표 7〉 교차분석 결과(주택유형 외)

측정항목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Pearson 카이제곱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연령(30대 여부)	71.0%	29.0%	77.7%	22.3%	23.485***
성별(여성 여부)	23.0%	77.0%	13.6%	86.4%	54.423***
교육수준(대학교 졸업 이상 여부)	72.1%	27.9%	68.0%	32.0%	8.375***
소형주택 여부	62.2%	37.8%	50.4%	49.6%	59.650***
노후주택 여부	34.5%	65.5%	21.3%	78.7%	82.144***
거주기간(이주 2년 이내 여부)	71.0%	29.0%	66.2%	33.8%	11.207***

\*\*\* p<0.01

〈표 8〉 교차분석 결과(주택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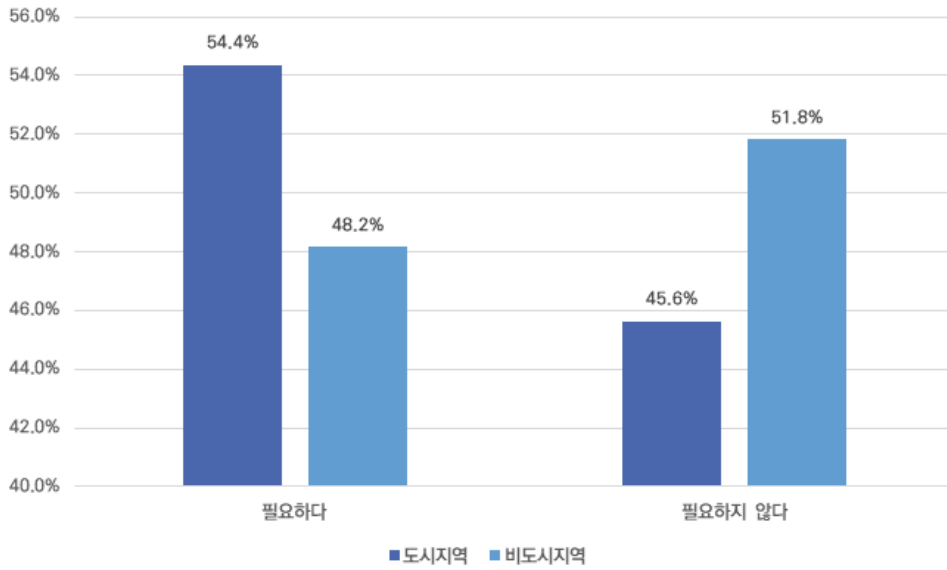
측정항목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Pearson 카이제곱	
주택 유형	일반 단독주택	1.7%	4.3%	224.096***
	다가구 단독주택	24.4%	21.5%	
	영업겸용 단독주택	1.8%	1.1%	
	아파트	46.9%	60.4%	
	연립주택	3.4%	4.0%	
	다세대주택	9.6%	3.1%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0.3%	0.4%	
	오피스텔	10.0%	2.8%	
	고시원	1.7%	0.9%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	0.1%	0.7%	
기타	0.2%	0.8%		

\*\*\* p<0.01

## 2) 주거지원프로그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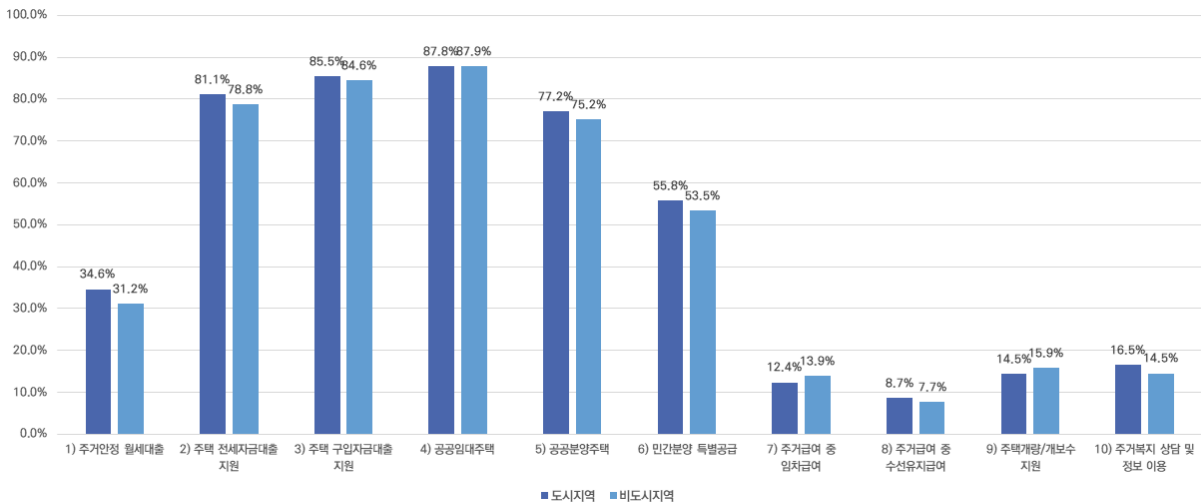
분석모형 구성 변수 외에,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 주거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인식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먼저 주거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수요는 도시 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응답자의 54.4%가 주거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비도시지역은 45.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3]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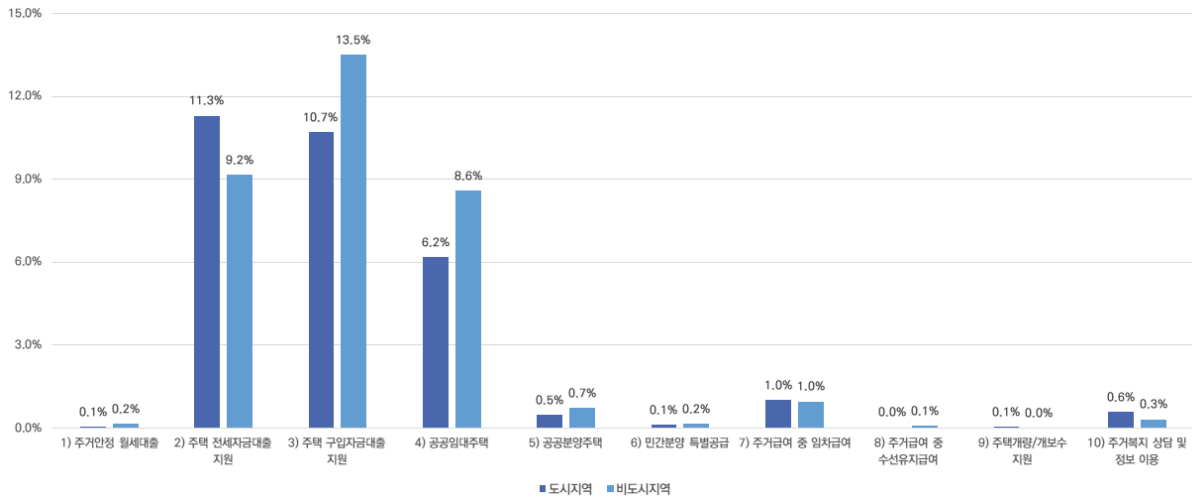
주거지원프로그램별 인지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양 지역 모두 공공임대주택이었으며, 이어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 순으로 확인되었다. 대체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주거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비도시지역과 큰 차이는 없었다.

[그림 4]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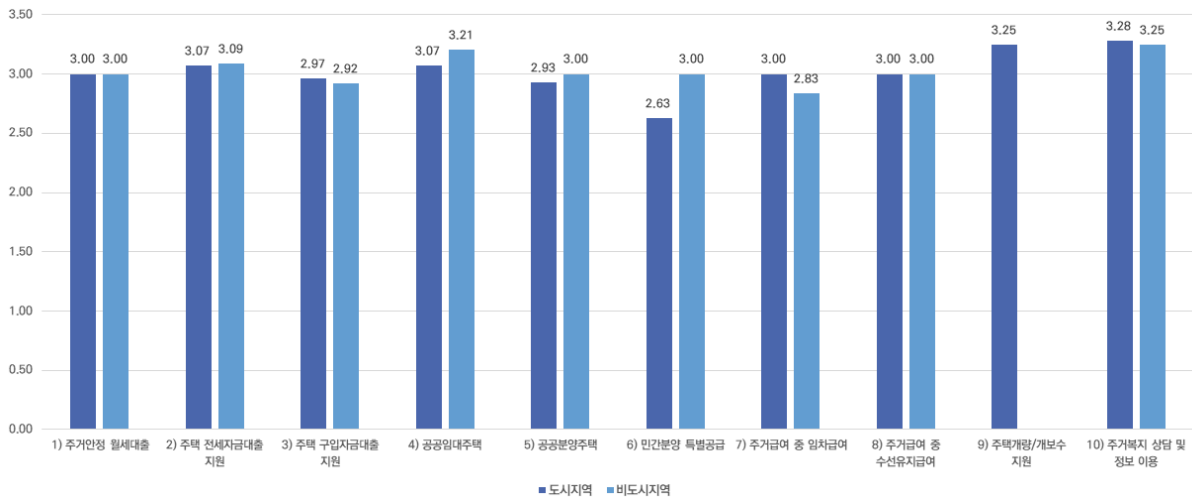
주거지원프로그램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양 지역 모두에서 1, 2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나타나 주거지원프로그램 인지율이 높은 경우 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도시지역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비도시지역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비도시지역에서 주택 구입 보조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도시지역은 공공임대주택 이용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 귀농·귀촌인,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률



주거지원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도시 지역, 비도시지역 모두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양 지역 간 만족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민간분양 특별 공급의 경우 물량 부족 및 청약 시장 과열 등으로 도시지역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그림 6] 주거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 2. 주거환경만족도 형성과 분석

### 1)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부문별 만족도 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부문별 만족도 요인 중 편의성과 환경성의 구성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선행연구(최현정, 2015; 민충근, 2021)와 마찬가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하나의 측정문항으로 이루어진 이동성의 경우 검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하여 고유값(eigenvalue)이 1을 초과하는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회전은 직각회전 중 Varimax 방법을 적용하였다. 더불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측정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편의성과 환경성 모두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KMO 측도는 각각 0.807, 0.895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고유값은 2.700, 3.547로 1을 초과하였으며, 요인적재값은 0.617~0.850의 분포를 보였다. Cronbach's  $\alpha$ 의 경우 0.835와 0.832로 사회과학에서 신뢰성을 인정하는 기준(0.6)을 만족하였다(Hair et al., 2006). 이에 따라 부문별 만족도 요인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고, 이후 분석모형에 투입하여 활용하였다.

〈표 9〉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류	요인별 변수	요인적재값	분산설명력(%)	고유값	Cronbach's $\alpha$
편의성	상업시설 접근용이성	0.846	67.511	2.700	0.835
	의료시설 접근용이성	0.850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0.821			
	문화시설 접근용이성	0.767			
Kaiser-Meyer-Olkin(KMO) 측도: 0.80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0.000 굵은 글씨: 요인적재값 > 0.5					
환경성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	0.617	50.670	3.547	0.832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0.748			
	교육환경	0.690			
	치안 및 범죄 등 방법상태	0.765			
	자동차 경적, 집주변의 소음 정도	0.694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0.745			
	대기오염 정도	0.713			
Kaiser-Meyer-Olkin(KMO) 측도: 0.89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0.000 굵은 글씨: 요인적재값 > 0.5					

### 2) 기술통계분석

매개효과분석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10〉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로 지정된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의 평균은 3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의 21%가 여성이었고, 연령 변수의 평균은 0.72로 3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 71%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가구원 수는 평균 2.26명이었다.

경제적 특성에서는 월평균 소득보다 자산의 표준편차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모든 변수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거비 부담수준의 경우 평균 3.86으로 '부담됨'에 가까워 다수의 청년들이 임차비 혹은 대출금 상환에 있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주거특성을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와 노후주택,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가구가 각각 49%, 32%, 60%를 차지하였다. 또 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70%에 이를 만큼 거주기간이 짧은 편이었다.

매개변수인 환경성, 편의성, 이동성은 평균이 유사하게 형성되었다. 다만 표준편차의 경우 이동성이 0.669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편의성(0.552), 환경성(0.423) 순으로 뒤를 이었다.

〈표 10〉 기술통계분석

구분	변수명		N=5,321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		1	4	3	0.504
독립변수	비도시지역 여부		0	1	0.17	0.374
매개변수	편의성		1	4	2.94	0.552
	이동성		1	4	3.05	0.669
	환경성		1	4	3.03	0.423
통제변수	가구주 특성	연령	0	1	0.72	0.449
		성별	0	1	0.21	0.410
		교육수준	0	1	0.71	0.452
		가구원 수	1	7	2.26	1.260
	경제적 특성	월평균 소득	0	7.65	5.64	0.745
		자산	0	12.70	8.75	2.006
		주거비 부담수준	1	5	3.86	0.865
	주거 특성	주택유형	0	1	0.49	0.500
		노후주택 여부	0	1	0.32	0.468
		소형주택 여부	0	1	0.60	0.489
		거주기간	0	1	0.70	0.458

###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통제변수의 영향을 제하고자 편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결과는 〈표 11〉과 같다. 비도시 지역 여부는 1% 유의수준에서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 편의성, 이동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환경성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 편의성, 이동성, 환경성은 모두 상호 간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 중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와 환경성에서 가장 높은 계수(0.572)가, 이동성과 환경성에서 가장 낮은 계수(0.362)가 관측되었다. 상관계수가 0.8 이상일 경우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박혜정·최은숙, 2017) 본 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표 11〉 주거환경만족도 관련 변수 간 편상관계수

구분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	비도시지역 여부	편의성	이동성	환경성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	1	-	-	-	-
비도시지역 여부	-0.058***	1	-	-	-
편의성	0.542***	-0.157***	1	-	-
이동성	0.397***	-0.140***	0.555***	1	-
환경성	0.572***	0.009	0.496***	0.362***	1

\*\*\* p<0.01

#### 4)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특성 비교에서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표 6〉). 비도시지역 거주 여부와 주거환경만족도 간의 이러한 관계를 요인별 만족도가 매개하는지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 〈표 13〉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비도시지역 거주 여부가 매개변수인 요인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본 결과(〈표 12〉의 Model 1-1부터 Model 1-3) 편의성과 이동성에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었으나 환경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모형의 F 통계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성 조건을 만족하였다.

이어서 독립변수인 비도시지역 거주 여부와 매개변수인 요인별 만족도가 종속변수인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편의성, 이동성, 환경성 세 가지 요인별 만족도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으나 비도시지역 거주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표 12〉의 Model 2).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변수는 아니지만, 통제변수 중에서 교육수준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연령과 노후주택 여부, 2년 이내의 짧은 거주기간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었다. 앞선 모형들과 마찬가지로 F 통계량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한 매개효과 검증에서 유의성은 신뢰구간 내에 0의 포함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판단한다(Shrout&Bolger, 2002).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될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대표집 회수를 Shrout&Bolger(2002)에 따라 5,000번으로 설정하고 95% 신뢰구간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편의성과 이동성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실증되었다(〈표 13〉). 즉 청년가구의 비도시지역 거주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음(-)의 효과는 편의성(-)과 이동성(-)에 의해 매개되었다. 반면, 환경성은 유의한 매개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간접효과의 크기는 편의성이 이동성보다 크다는 사실이 쌍대 비교(pairwise contrasts)를 통해 파악되었다.

〈표 12〉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및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구분		Model 1-1	Model 1-2	Model 1-3	Model 2	
		편의성	이동성	환경성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	
독립변수	비도시지역 여부	-0.240***	-0.263***	0.010	-0.004	
매개변수	편의성	-	-	-	0.270***	
	이동성				0.066***	
	환경성				0.482***	
통제변수	가구주 특성	연령	-0.014	-0.040	-0.039***	-0.024*
		성별	0.059***	0.090***	0.025*	0.017
		교육수준	0.065***	0.069***	0.033**	0.033***
		가구원 수	-0.026***	-0.021**	-0.016**	-0.005
	경제적 특성	월평균 소득	0.031**	0.046***	0.026***	0.001
		자산	-0.002	-0.013*	-0.002	-0.0003
		주거비 부담수준	-0.011	-0.002	-0.028***	0.002
	주거 특성	주택유형	0.018	0.008	0.184***	-0.007
		노후주택 여부	-0.016	0.032	-0.083***	-0.060***
		소형주택 여부	-0.027	0.012	-0.067***	-0.003
		거주기간	-0.016	0.003	0.008	-0.033***
	상수		2.903***	2.931***	3.013***	0.585***
R_squared		0.036	0.036	0.083	0.437	
F		16.5431***	16.5440***	40.2494***	275.0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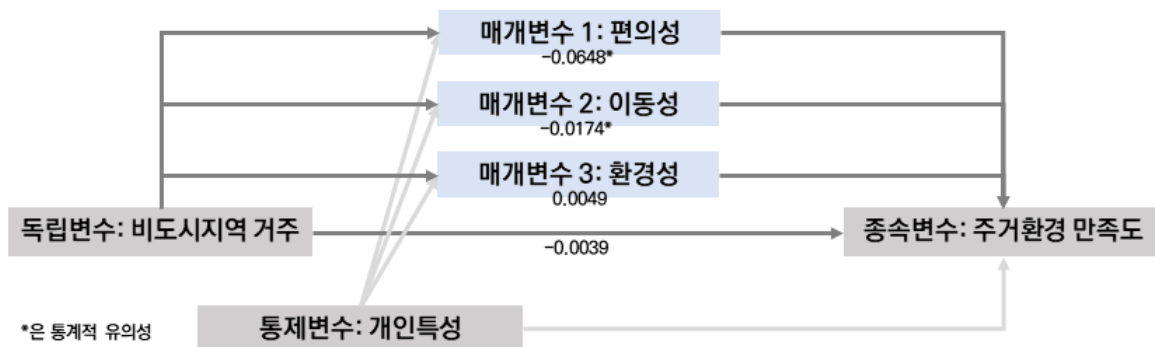
\* p<0.1, \*\* p<0.05, \*\*\* p<0.01

〈표 13〉 주거환경만족도에 대한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

구분	효과	표준오차	t-통계량	LLCI	ULCI
총효과	<b>-0.0812</b>	0.0190	-4.2665***	-0.1186	-0.0439
직접효과	-0.0039	0.0148	-0.2647	-0.0330	0.0251
간접효과	계	<b>-0.0773</b>	-	-0.1055	-0.0498
	편의성	<b>-0.0648</b>		-0.0793	-0.0506
	이동성	<b>-0.0174</b>		-0.0242	-0.0113
	환경성	0.0049		-0.0108	0.0210
간접효과 차이(편의성-이동성)	-0.0474	0.0078		-0.0631	-0.0323

\*\*\* p<0.01 / 굵은 글씨: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

[그림 7] 주거환경만족도에 대한 요인별 만족도의 매개효과





## V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청년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비도시지역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형성과정을 도시지역 청년가구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고, 이러한 관계는 편의성 및 이동성 만족도에 의해 매개되었다. 따라서 요인별 만족도의 제고를 통해 주거환경만족도의 상승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주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매개효과가 검증된 편의성과 이동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대안과 추진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안을 실효성 있게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제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4명을 대상으로 3일간(2022.11.07.~2022.11.09.)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일부 포함하였다.

### 1.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

#### 1) 주유소를 활용한 물류거점 조성

철원군 거주 20대 여성 A

“서울에 살 때보다 생활비가 많이 든다.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이나 식재료를 파는 곳이 없고, 올리브영도 없어서 여성용품을 구매할 때마다 배송비를 더 내고 사야 한다. 장을 볼 때는 주로 차가 있는 동료에게 부탁해서 간다. 서울이나 춘천 출장 갈 때 물건 구매를 부탁하기도 하고 부탁받기도 한다.”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상업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안으로 배송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과 달리 원하는 시간에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에서는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근린 물류거점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물류거점은 자주 구매되는 물품을 적재하여 주문이 들어왔을 때 포장·배송할 수 있는 장소이다. 새로운 공간에 물류거점을 건설하는 경우 적절한 대지 탐색, 이해 관계자 조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기존 대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심 물류 보관의 거점으로 주유소를 활용하는 안이 제시되었다(서울연구원, 2021). 코로나19 이후 등장한 스타트업 업체인 ‘홈픽’은 방문 픽업 물품을 거점 주유소에 적재하면 택배사가 수거하여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에서도 도심 물류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유소를 활용한 미니캠프, 모바일캠프(도심 거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SK에너지, GS칼텍스 등도 주유소 내 무인택배함 설치를 시작으로 중고거래 물품 보관함, 세탁업체 연계 서비스 등 생활 물류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8] 홈픽 운영 프로세스 (출처 : SK이노베이션 웹사이트)



[그림 9] 물류거점으로서 주유소 활용 예시 (출처 : 오호, GS칼텍스 웹사이트)



주유소는 주거 및 업무지역과 가깝고, 생활권마다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공간 특성상 시설이나 건축물이 적고 부지가 넓어 화물 차량과 같은 대형 차량의 주차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유소 이용이 적은 밤-새벽 시간대를 활용하여 타임쉐어 방식의 공간 공유를 통해 소규모 근린 물류거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체 간 연결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참여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운영과 사업 확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2)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공주시 거주 30대 여성 B

“나를 포함해 주변 20대 직장 동료들은 대부분 차가 없는데, 지방은 차가 없으면 장을 보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새벽배송이나 로켓프레시(신선식품, 새벽 배송서비스)도 안되다 보니 채소나 유제품을 싸게 살 수 없다. (차로) 15분 거리인 세종, 청주만 가도 가능한데 공주는 왜 안되는지 아쉽다. 가끔 배송비를 아끼려고 공동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군산시 거주 30대 남성 C

“배달 어플로 시킬 수 있는 음식점이 많이 없다. 특히 혼자 먹는 양을 주문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요리를 직접 해 먹으려고 해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버리게 된다.”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통시장 매출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서 무료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네시장 장보기’는 거주지역 인근의 전통시장을 검색하여 육류, 채소, 생선, 반찬 등을 골라 담아 배달시킬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는 기존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방식을 전통시장에 적용시킨 사례로 서울과 경기, 광주, 포항 등 다양한 지역의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의 경우 1~2인 가구와 청년층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1인분 재료로 구성된 밀키트와 집밥 도시락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간단한 조리법을 모은 ‘망원시장 오늘의 레시피북’을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였다. 또한 1인 가구가 다양한 과일을 맛볼 수 있도록 날개 과일을 물물 교환할 수 있는 ‘망과휴(망원시장 과일들이 쉬어가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층의 니즈 충족과 수요 증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사례다. 이에 착안하여 비도시지역 전통시장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또는 보급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홍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장보기 서비스와 한 끼 분량의 반찬 및 식자재 소분, 공동구매 및 물물교환 서비스 등을 기획하여 생활밀착형 재화와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0] 망원시장 청년 1인가구 서비스



### 3) 청년활동공간 및 자발적 문화소모임 지원

양산시 거주 20대 남성 D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여가나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뮤지컬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서울에 가야하고, 대형서점이나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작품을 상영하는 영화관도 없다.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취미생활을 해보려고 했지만, 노인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시간이 오전인 탓에 학교·직장을 다니면 참여가 힘들다.”

비도시지역 청년들의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년활동공간 및 자발적 문화소모임 지원을 제시할 수 있다. 청년들이 지역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으로 청년활동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물리적 차원의 공간 공급과 더불어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콘텐츠를 지원함으로써 그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건축공간연구원, 2021).

독일 알텐부르크는 낙후된 물리적 시설 개선 사업은 지속되었으나, 2030 세대를 위한 생활문화 인프라가 부재하여 청년층의 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이에 한 지역활동가는 청년들이 결속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동체 활동을 만들어 마을의 활기를 되찾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파브쿠셰’라는 미술동호회 활동과 마을 반상회인 ‘호프 살롱’이 있다. 청년들이 관심 있는 주제의 모임과 친교 활동의 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마을 축제가 부활하고 청년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마을 축제는 주민들과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가요제, 연극, 벼룩시장, 푸드트럭,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축제에 참여했던 외지 예술가들이 이곳에 정착하기도 하였다.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와는 달리 자발적 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은 지역에 소속감을 느끼고 나아가 지역에 정주하게 되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 청년센터의 ‘IN-JOY’와 세종 청년센터의 ‘사이클럽’이 있다. 지역 청년들은 주도적으로 모임을 기획하고, 공공은 청년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소확행하니까 청년이다

“지방에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많이 없다.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업들이 많은데 이번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통해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리고 싶다. 근무지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게 되어 또래를 만나기 어려웠는데, 이 모임을 통해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누고 지역에 잘 정착하길 기대한다.”

#### 2. 1절만 하는 밴드


“(모임 멤버들은) 신도시인 세종의 특성상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모였다.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도시에서 새로움과 도전의 문화를 만들고 싶다.”

#### 3. SERC(세종러닝크루)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세종시와 함께 나아가는 기분이다. 함께하는 러닝의 즐거움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부러닝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세종시 러닝문화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그림 11] 인천(좌)과 세종(우) 청년센터 모임 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현황 일부




**IN-JOY 청년모임지원 <한:아름> 7월 활동내역**

2022.0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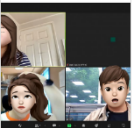
**IN-JOY 청년모임지원 <리:논> 8월 활동 내용**

2022.09.05




**IN-JOY 청년모임지원 <새얼간이> 8월 활동 내역**

2022.09.05



**IN-JOY 청년모임지원 <취업? 실력업(up)!> 8월 활동내역**

2022.09.04




**IN-JOY 청년모임지원 <그랑> 8월 활동내역**

**세종청년센터 '세친나래'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청년 모임을 지원합니다.**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 사이의 연결하여 세종 청년들간의 관계를 활성화하고 유대감을 증진하여 다양한 사회적행동의 유도에도 기여 합니다.

관여자를 담당하세요


구분	#31인	#1인	연승주	#SNS	홍고교역	#포퓰러라이서	#포퓰러라이팅팀	#평택청	#도산	#누리	#연남지
#비트:유니	#밴드	#사이버연인기	#세종호수공관	#호수생태	#호수제주	#우수다	#호수세미	#공작	#산악	#산악	#산악
#평안청	#인생이벤트	#도시포교	#인생화	#이대지	#세종포퓰러라이터	#이대지	#이대지	#이대지	#이대지	#이대지	#이대지
#산악	#산악	#산악	#산악	#산악	#산악	#산악	#산악	#산악	#산악	#산악	#산악



**SERC**  
연명의제보 SERC(세종-연남-연남) 연남. 시제는:~

세종청년센터 | 연남 | 세종호수공관 | ...


2021.06.08



**1절만 하는 밴드**  
시제: 5월은 세종시 관내 초등교에서 교직원입니다~

세종청년센터 | 도산 | 밴드 | 1절만 | ...


2021.06.08



**THE TEN**  
우리는 세종시 내 청년세대 세종시 내의 시연자~

세종청년센터 | 평택청 | SNS | 이대지 | ...


2021.06.29



**뮤직파이브**  
유망 기업에서 근무한 바치고 세종에서 활동중~

세종청년센터 | 호수 | 노래 | 음악 | ...


2021.07.29



**도시 일기와 자기 자유의 시간**  
도시 일기와 자기 자유의 시간: 세종 시역의 기~

세종청년센터 | 누리 | 평택 | 산악 | ...


2021.07.29



**포포머(포지에 포지를 만들다)**  
평안청/나 이대지: 세종시 대상청년들의 포~

세종청년센터 | 호수포교 | 직문포지기행 | ...

2021.07.26



**세종모임**  
수제에 시간: 세종시 내의 청년세대는: 세명4:15:7:사주~

세종청년센터 | 수제 | 평택 | 우다 | 호수 | ...

2021.07.26

이처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도가 높고 운동, 취미활동, 취업 스터디 등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모임의 지속력도 높다. 또 대부분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이후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었다.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센터는 단순한 공간의 의미를 넘어 청년문화와 청년세대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자, 청년들을 지역으로 안내하고 연결하는 소속감 형성의 공간이기도 하다(건축공간연구원, 2021). 따라서 기존 건설된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비도시지역 청년들의 자발적 문화모임 구성을 지원하고 모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소속감 제고에 힘을 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센터 운영과 공간 개방 시간 확대를 통해 청년 모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할 것이다.

## 2. 이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 관용차 공유서비스

군산시 거주 30대 남성 C

“지방에서 차가 없으면 많은 활동이 제약된다. 애초에 집으로 가는 버스 노선은 얼마 없고, 9시 이후에는 배차 간격도 커져서 이용이 어렵다. 차를 사는 건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멀리 이동해야 하는 경우 쏘카(카셰어링)를 이용하고 있는데 비싸기도 하고, 쏘카존도 주요 시설 근처밖에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

기존 교통 소외지역 해소 및 비도시지역의 이동성 확보 정책으로 100원 택시, 1000원 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충남 서산에서 시작하여 전국 70여 개 비도시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대안 교통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촌지역 노인뿐만 아니라 야간 자율학습 또는 학원 보충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심귀가용 택시, 임산부의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행복택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법제처, 2022). 이들 정책의 경우 이용 시간대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직접 운전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청년층은 개인적이고 자율적인 이동을 선호하고 있어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비도시지역 청년들의 이동성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용차 공유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관용차 EV카셰어링’을 도입하여 지난 4월부터 업무시간에는 관용차로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 외 시간과 주말에는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년 까지 총 32대의 전기차를 도입하였고 시범사업 운영 결과 2022년 1분기 평균 이용률은 업무용 81.5%, 개인용 22.4%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도 효과적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되는 적극행정의 우수혁신사례로 인정받고 있다(화성시, 2022). 실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블로그 후기를 살펴보면 다른 카셰어링 서비스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출퇴근 등 필요한 용도로 정기적 이용이 가능해 좋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착안하여 비도시지역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용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용차의 경우 업무시간 외에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저렴한 가격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 화성시 관용차 EV카셰어링 사업 안내지(좌)와 차량 모습(우)



### 3. 정책추진체계

비도시지역의 청년은 소수집단에 해당하고 밀집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정책 대상집단인 청년을 배제한 채 일방향적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대응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앞선 정책대안들을 계획·시행·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뉴거버넌스 이론(New Governance Theory)에 따라 시민참여와 공동생산 개념이 주목 받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은 더 이상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시민참여기구를 마련하여 열린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시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발굴 및 제안, 캠페인, 공론장 개최 등의 해법을 시도하며, 비슷한 맥락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그림 13] 2022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핵심지향가치와 분과구성



비도시지역 청년을 위한 정책과정에서도 이러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형 청년정책네트워크(가칭)’는 정책 대상이자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집단과 소통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고, 본인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효능감의 상승은 지역의 일원으로서 애착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한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역할 분담 및 협업이 요구된다. 중앙부처의 경우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 단계적 시행을 위하여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반영함으로써 정책을 고도화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청년 간 소통을 관리하며, 타 부처와의 협의사항을 조율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여건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 동시에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한다. 청년 유입을 우선과제로 삼아 전담 인력을 배정하여 장기적·체계적 대응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림 14] 정책제언 관련 도식



## VI 참고문헌

- 서주환·조영배·이준근(2002) “형태지수를 이용한 농촌경관의 선호성 분석에 관한 연구: 농촌 문화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6(2), pp.7~14.
- 김호정(2007) “순서화 로짓모형: 설문조사에 적용되는 척도의 종류”, 「국토」, 310, pp.94~102.
- 이상우·황순진(2007) “공간성, 호소유형 및 형태복잡도 지수를 이용한 토지이용과 호소수질의 관계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4(6), pp.1~9.
- 서원석(2013) “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재개발사업 이전 주택유형별 재정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요소 분석”, 「서울도시연구」, 14(1), pp.39~55.
- 권세연·박환용(2014) “서울시 1인 가구의 주거환경만족 영향요인 연구”, 「주택연구」, 22(1), pp.77~104.
- 김세정(2014)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도시근린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준(201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제·사회·환경적 개선효과가 거주자”,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정(2015) “사회자본이론에 입각한 상사-직원 교환관계와 일-가족 균형 및 혁신행동의 인과적 관계 연구: PROCESS macro by Hayes(2013)를 적용한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9(7), pp.211~224.
- 박혜정·최은숙(2017)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8(3), pp.280~290.
- 임혜정(2017)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7(4), pp.510~534.
- 최창호·유연우(2017) “탐색적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 연구」, 15(10), pp.103~111.
- 김현민·신현주(2018) “어메니티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식지표와 객관 지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pp.115~136.
- 박효숙·이경환(2018) “여성들의 동네만족도와 동네애착, 이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충청남도 아산시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4(1), pp.71~81.
- 이호연(2018) “대학가 인근 청년밀집지역의 근린주거환경 특성에 따른 만족도: 서울시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재용·이재수(2018)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근린환경 특성과 주거만족도 비교분석 연구”, 「부동산 정책연구」, 19(2), pp.59~74.
- 안용진(2019) “물리적 근린환경 특성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친 영향”, 「GRI연구논총」, 21(1), pp.241-260.
- 김옥진·김태연(2020) “주거환경만족도가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동네응집력의 매개효과와 거주기간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4), pp.125~158.

- 김주현·안용진(2020) “근린의 물리적 공간범위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혼합단지 주거환경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도시정책연구」, 11(2), pp.25~39.
- 박주현·이경환(2020) “CPTED 사업으로 인한 근린의 물리적 환경변화가 빈곤지역 주민들의 범죄 두려움과 동네만족도, 동네애착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1), pp.105~111.
- 서원석·박기덕(2020) “경제적 사회거리가 공공주택 거주민의 근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GRI연구논총」, 22(2), pp.53~76.
- 전준형·박진아(2020) “보행환경이 근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 서울시 주거실태 조사 2017 자료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5(3), pp.29~42.
- 윤은영(2020) “근린환경만족도가 사회적상호작용과 주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소영(2021)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에 관한 연구: 생활SOC 접근성과 근린생활환경만족도 관계 중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박상우(2022) “지역별 청년층 월세 가구의 주거환경 및 주거비 부담 결정요인 분석”, 「주택도시연구」, 12(2), pp.21~49.
-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보도자료)”, 2022.07.28.
- 국토연구원,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2022.05.25.
- 건축공간연구원,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2021.12.31.
- 엄창욱 외, 「청년의 귀환」, 박영사, 2018.
- 마을학회 일소공도,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2018.12.
- 대한상공회의소, “지방근무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조사(보도자료)”, 2022.06.08.
- 이지은·이경은(2018)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2호, pp.57-86.
- 신명철·이재수(2019)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의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 비교 연구”, 「감정평가학논집」, 제18권 제3호, pp.167-195.
- 이상욱·권철우·임영주(2019)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이주지역 선택: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제37권 제1호, pp.43-66.
- 손경민·진장익(2020) “지역특성이 노인층·청년층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조방정식 경로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국토계획」, 제55권 제4호, pp.19-34.
- 임준홍(2021)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와 주거이동의향 실증분석: 도시와 농촌 차이”, 「주거환경」, 제19권 제1호, pp.13-24.
- 문건웅, 「R을 이용한 조건부과정분석」, 학지사, 2019.
- 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2020.
- 김선주(2020) “1인가구의 연령대별 특성과 주거만족도”, 「주택도시연구」, 제10권 제1호, pp.39-62.

- 구한민·김갑성(2021)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형성과정: 특성요인에 대한 만족도의 매개효과”, 「주택연구」, 제29권 제1호, pp.33-78.
- 권영수·최완호(2018) “서울시 거주 청년의 주거만족도 분석: 서울시 관악구·동작구 거주 청년의 주거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부동산경영」, 제18집, pp.289-311.
- 민동환(2020)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별 특성 및 주거만족도 실증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균섭·진은애(2022)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선택이 주거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별, 생애주기별, 소득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33권 제3호, pp.15-28.
- 정영광(2022)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서비스가 입주자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혜민(2021)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한 경북 청년의 정주만족도 예측요인 탐색”, 「대구경북연구」, 제20권 제1호, pp.151-167.
- 임해린(2021) “주거복지정책이 청년가구의 주거비부담과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충근(2021)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10년, 2019년 주거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연구원,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도시 생활과 공간 변화」, 2021.05.31.
- 권정표(2022) “청년 1인가구 임차인의 주거만족도 및 주거이동의향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정표·강정규(2022) “청년 1인가구 임차인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LHI Journal」, 제48호, pp.65-79.
- 서경택(2022) “청년주거정책 시행에 따른 청년가구의 주거만족도 변화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김모윤(2019) “청년층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거수준 변화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30권 제4호, pp.55-64.
- 화성시 취재지원자료, 2022.04.01.
- 법제처 보도자료, “우리 지역 교통 사각지대, ‘100원 마을택시’로 해소한다”, 2022.07.04.

- Amerigo, M.(1992) "A model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M. Aristides & K. Karaletsou (Eds.)", *Socio-environmental metamorphoses : builtscape, landscape, ethnoscape*, 5:411-417.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ition, Pearson International Edition, Inc., New Jersey, 2006.
- Hayes, F.,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2018.
- Shrout, P. E., & Bolger, N.(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25.
- Sobel, M.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Leinhardt, S., Ed., *Sociological Methodology*, Jossey-Bass, San Francisco, 290-312.
- Tiebout, C. M.(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https://blog.naver.com/romeo0314/222792386445>

<https://blog.naver.com/aahnjii/222797521727>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53>

[https://www.seoul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556.html](https://www.seoul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556.html)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590>



발표 4

지방소멸시대 초고령사회의  
균등한 삶 보장위한 스마트케어  
(돌봄·의료) 시범연구

: 충청남도 소재 '편편(fun-fun)한 건강경로당'의  
타당성 검증 및 사례연구

—  
연구책임자 김미주  
공동연구자 이양우





# 지방소멸시대 초고령사회의 균등한 삶 보장위한 스마트케어(돌봄·의료) 시범연구

: 충청남도 소재 '펀펀(fun-fun)한 건강경로당'의 타당성 검증 및 사례연구

연구책임자 김미주 / 공동연구자 이양우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소멸고위험지역과 초고령화시대의 진입

○ '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개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을 차지하였다(49.6%). 군 지역은 이미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으며 최근 소멸고위험지역은 45곳으로 '20년도 대비 23곳 증가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2022ab).

- 소멸위험지역 : 33곳(2005년)→61곳(2010)년→80곳(2015년)→102곳(2020년)→113곳(2022년3월)

○ '22년 고령인구비(65세 이상)는 17.5%로써 900만 명에 육박하여 고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10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22년 152.0%로 집계, '25년은 '고령인구 1,000만 시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특히, 1960년 5.3%에 불과했던 노인부양인구비는 지속적인 사망률 저하와 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22년 24.6%로 약 4.5배 증가하였으며, '67년 102.4%로의 추이를 보여 세계 국가(지역)중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 고령인구비 : 5.1%(1990년)→7%'고령화사회'(1999년)→14%'고령사회'('17년)→20.6%'초고령화사회'('25년)→46.4%'('67년)

○ 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5년부터 '45년까지 20년간 1인 가구는 약 689.7만 가구에서 832.4만 가구로 20.7% 증가한다. 해당기간 1인가구의 고령인구는 70대 104.8%, 80대 134.9%, 90대 209.8%의 상당한 추이를 나타내어(통계청, 2022; 국회입법조사처, 2022) 초고령 1인가구의 사회적 고독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및 지자체의 노인부양에 대한 정책적 설계가 시급하다.

〈표 1〉 부양인구비 및 고령화지수('09~'22)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부양인구비*	37.3	36.9	36.3	36.2	36.2	36.2	36.2	36.2	36.7	37.1	37.6	38.7	39.7	40.8
노인부양인구비**	14.4	14.8	15.0	15.6	16.3	16.8	17.5	18.0	18.8	19.6	20.4	21.8	23.1	24.6
고령화지수***	62.9	67.2	71.0	76.1	81.5	87.0	93.0	98.4	105.1	111.7	119.2	129.3	139.5	152.0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부양인구비 :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0-14세, 65세 이상 인구의 합) 인구의 비율임

\*\*노인부양인구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임

\*\*\*고령화지수 : 소년인구(0-14세)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임

## 2. 거점형 스마트경로당 건강관리 사업

-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건강·정서적 지원을 위한 IoT 기반 서비스(보건복지부 ‘스마트홈 서비스’ 서울시 ‘스마트플러그’ 인천시 ‘안심폰’ 등)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령층의 디지털 사용 어려움을 간과한 채, 위급 상황의 대응정책으로 국한된 아쉬움을 토로한다.
- 이에, 행안부는 2022년 하반기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으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특별 교부세 총 30억 원을 지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디지털타운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공주시와 고령군은 접근성이 용이한 경로당을 스마트경로당으로 구축해 AI 로봇 기반 스마트 건강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 타 지자체에서도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층의 디지털격차를 완화하고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AI, ICT, IoT 기반의 스마트돌봄 일환으로 거점형 스마트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곧 추진될 도입단계로써 디지털기술 사용 및 평가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실증적 연구는 전무하며, 예비 타당성 검증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층 어르신에게 스마트경로당의 스마트케어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되며 실제 삶의 긍정·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이론·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데이터분석을 통해 다양한 고령층을 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와 제품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 네트워크 등 협력·연계를 강화하여 향후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한다.

〈 표 2 〉 지자체별 거점형 스마트경로당 건강관리 사업

지역	주제	운영 프로그램	차별성
양평군 (서종면)	‘다시, 청춘’ K-스마트 경로당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인지기능 향상, 건강증진 기구와 프로그램	
부천시	‘치매! 가장 두려운 질병, 바로 알고 희망을 준비하자’	치매 예방관리교육 치매 현황, 증상, 환자응대방법과 예방수칙	어르신 눈높이 맞춤 설명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비대면 여가·건강프로그램 실버로빅, 건강강좌, 웃음치료 등 주 5회 IoT 스마트팜, IoT 헬스케어기기	스마트팜 (안전한 먹거리 나눔)
성주군	‘노년과 세상을 잇다(it:da)’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와 생활 정보 서비스, 화상서비스, 문자인식 글읽기 서비스	문자인식 글 읽기 서비스
의정부시	‘스마트건강 청춘경로당’	건강프로그램(우울증예방, 만성질환, 치매예방)	각 경로당에 스마트매니저 (대학생)배치, 세대 간 소통
서귀포시	건강·행복·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심리적·신체적인 건강, 돌봄, 안전 등 지원	제주 사투리로 작동, 조작, 익숙한 지역 여행 VR게임
영통구	‘스마트 시니어 Talk 밴드’	다양한정보 신속 제공, 요청사항 실시간 반영	스마트폰 및 SNS 사용법 등 정보화 교육
유성구 (온천2동)	스마트경로당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 AI아바타 활용 치매진단/ 예방, 비접촉 터치 기반 방식의 건강측정 등	
공주시	‘행복 이어유~ 스마트 경로당 에서’	건강관리, 인공지능로봇의 치유돌봄서비스, 메타버스 체험 공간	스마트팜(일자리 창출)
고령군	‘대가야 건강 누리 마을조성’	스마트 건강샘터서비스, 생체정보 측정/건강지표 확인서비스	

\*해당 지자체별 기사와 자료 참고하여 표로 정리함

## II 연구 방법

### 1. 스마트경로당 및 디지털 정보화 인식에 대한 예비조사

- 본 조사 이전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단계로써 스마트경로당 및 디지털 정보화 인식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연구 기관의 보고서 등 문헌연구를 토대로 인터뷰 문항들을 추출하여 초기질문의 틀을 구성하였다.
- 「2021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에 따르면, 고령층(55세 이상)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1%(19년도 대비 0.5%상승)로 저소득층(95.4%), 장애인(81.7%), 농어민(78.1%) 취약계층 중 가장 낮음으로 시니어 세대의 휴대폰 사용법, 디지털 기기 어려움 등 다양한 고충을 토로한다.
  - ※ 디지털정보화수준 :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유무선 융합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 대비(100이라고 가정) 정보소외계층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을 종합한 점수를 의미함.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
    - ▶ 디지털정보화수준(종합)=디지털접근수준(0.2)+디지털역량수준(0.4)+디지털활용수준(0.4)
    - 접근수준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역량수준 = PC 이용능력(0.5)+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0.5)
    - 활용수준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 한국 노인의 복지서비스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고(김신영, 2006; 김정숙·최선미, 2019; 문진영·장익현, 2021; 이성은, 2015),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상당수의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한 노인은 정보로부터 더욱 소외되며 고령층일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 다음으로 실제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이 도움이 되는지와 한계점 여부 및 인식 조사를 위해 전문가 집단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할 수 있는 현상적 심층면담법(phenomenological in-depth interview)을 시행하였다. 면담법은 스마트경로당 및 디지털활용, 노인복지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 수요자를 대상자(〈표3〉참조)로 선정하였고, 1차로 구조화 되지 않은 설문지(unconstruct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의도적인 응답을 유도하지 않도록 최대한 경청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수렴한다.
- 심층면담 결과, 고비용으로 스마트경로당 인프라를 구축하나 RPA(Robot Process Automation: 로봇프로세스자동화)와 빅데이터 분석 엔진의 난해, 보안과 인증 시스템화 오류, 장비의 노후화, 상황 인식 오류 등 실시간 안전관리 및 비효율성을 우려하여 도입을 망설인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왜 굳이 ‘로봇’이어야 하는가?’ 쉽고 재미있게 주도적으로 건강을 측정하고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고령층의 우울증 진단 및 정신건강관리 맞춤형 서비스 및 정신재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피드백 제한, 고령층 대상 건강관련 전수 설문조사의 응답에 고충을 토로하였다. 로봇시스템도 좋으나 실질적인 벽지 장판, 설비 교체 등을 요청하였으며, 아무리 훌륭한 정책 지원이라도 대상자에게 인지되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임을 강조하였다. 지자체별 사회복지관에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나 소수만 참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로 대면학습이 제한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현장에서 기초교육부터 반복 지속하되 노노케어(노인이 다른 노인을 돕는 일)를 통해 일대일 눈높이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며, 더욱이 교육이 필수이나 무작정 노인세대에 ‘쫓아오라’는 일 방향적인 소통이 아닌, 공감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오프라인에 익숙한 부모세대가 디지털문화에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가족애로의 교육이 최선임을 조언하였다.

〈표 3〉 심층면접 조사대상자 프로필

대상자	성별	소 속	대상자	성별	소 속
1	남	기술연구소 연구교수	6	남	경로당 관리자
2	남	디지털기기 교육 기업 대표	7	남	70대 고령층
3	여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8	여	70대 고령층
4	여	지자체 디지털배움터 담당자	9	여	시부모님(80대) 케어
5	여	신경정신과 전문의	10	남	70대 경로당 회장

## 2.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조사 이전에 스마트경로당 인식의 예비조사 결과, 스마트경로당의 긍정적 측면도 높게 인지한 반면 디지털 격차로 인한 고령층의 소외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고비용 대비 비효율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고령층은 시각, 청각, 감각 인식능력이 저하됨으로 디지털 기기의 모듈 소형화, 세심한 조작, 복잡하고 과다한 정보량 등으로 직접적 사용과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 현 정권의 ‘약자중심’ 복지를 위해 노인 복지 예산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나,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비중 축소와 절대적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인당 조세 부담으로 현실적인 재원 확대규모는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일보, 2022). 우리나라는 (지역별 대동소이하나) 1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약 30여명의 독거노인을 케어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방문 케어가 축소됨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더욱이 스마트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소멸고위험지역의 지원 공백 완화를 위해 현실적인 비용 구조의 복지제도를 고려하여 정책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고령층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체지방 증가 및 근육량 감소 등의 생리적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으로 이환되어, 신체적 불편과 심리적 부담감은

물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고혈압 및 당뇨 등의 만성질환율은 89.5%로 평균 2.7개의 만성질환을 가지며, 14.9%는 기능상의 제한 즉, 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 7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개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 중 6.9%, 65세 이상 노인 중 약 8.3%가 허약노인에 해당되며 허약노인 24.8%가 한 개 이상 일상수행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허약하기 쉬운 노인은 신체적 불편 및 심리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 및 응급 발생 시 주도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는 독립성 상실과 우울감 증가로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하며, 결국 절망감으로 자살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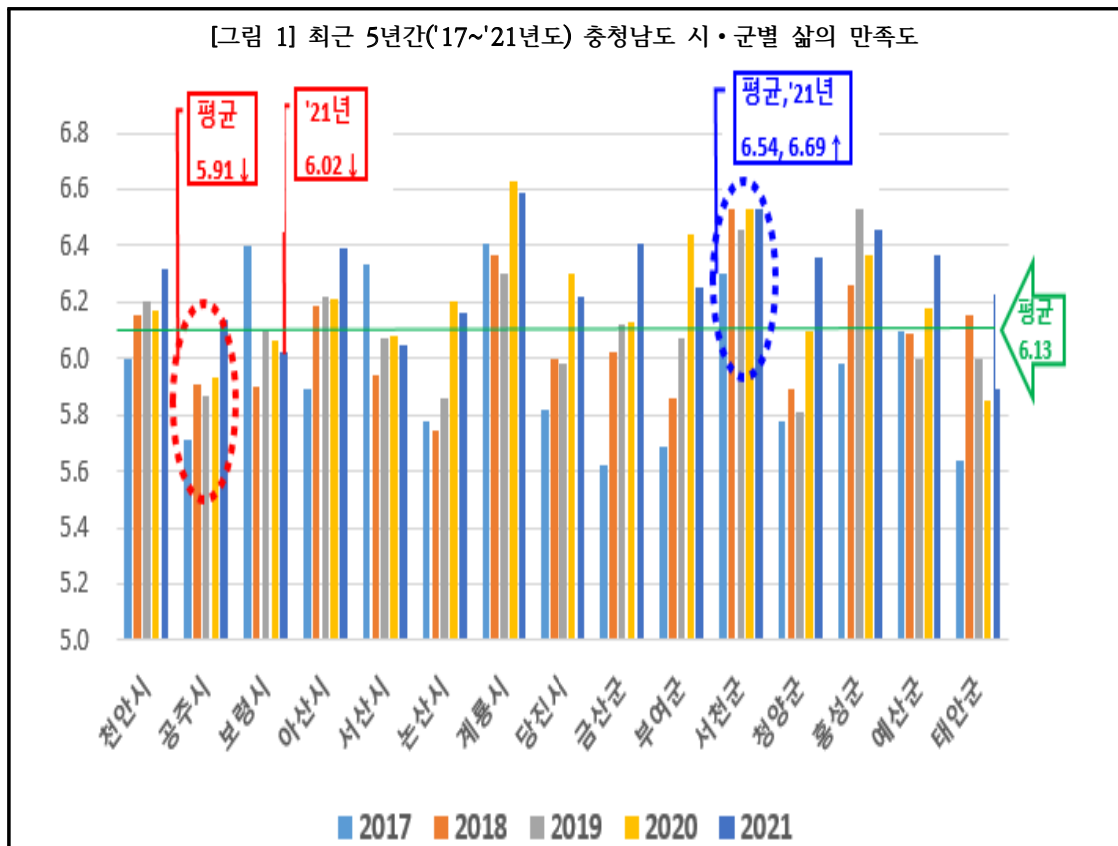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노인성 우울증을 단순 기억력 저하의 일환으로 여겨 사회적 인식이 낮고 정신건강 질환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인류에게 가장 부담 주는 10가지 질환 중 3위가 우울증이었으며, 2030년에는 우울증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다. 우울증은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울 증상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필히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인성 우울증을 간과하는 독거노인의 증가,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만성질환과 합병증 관리는 물론 생활습관과 건강의식이 변화되어 자발적인 건강상태 파악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특히 우울증이나 심리적 고립감이 클 때,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에 소극적이며 진료를 기피함으로써 고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의 자발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인 신체활동은 만성질환 진행도와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로당 이용 재가노인 대상으로 규칙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만성질환 진행정도 저하, 체력수준 향상과 심폐기능의 향상, 혈압과 혈당의 개선, 근력의 증가, 수면습관 개선, 불안, 우울증상 및 절망감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의 치유 및 회복으로 고령층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상과 같이, 초고령 1인가구의 사회적 고독과 우울증 진단 및 정신건강관리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하며 읍면동 마을단위의 자구적 노력이 어려운 취약한 대상에게도 충분한 복지가 지원 되도록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 이에, 스마트경로당의 고비용 인프라 구축 부담을 줄이되, 저렴하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스마트 돌봄 프로그램 '펀펀(fun-fun)한 건강 경로당' 도입, 자발적 운영이 지속화되도록 간단하고 재미있는 시스템과 콘텐츠, 맞춤형의 단순반복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제고로 인한 돌봄 신(新) 시장을 창출과 경로당이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지능형(스마트) 기기와 정보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 3. 본 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 및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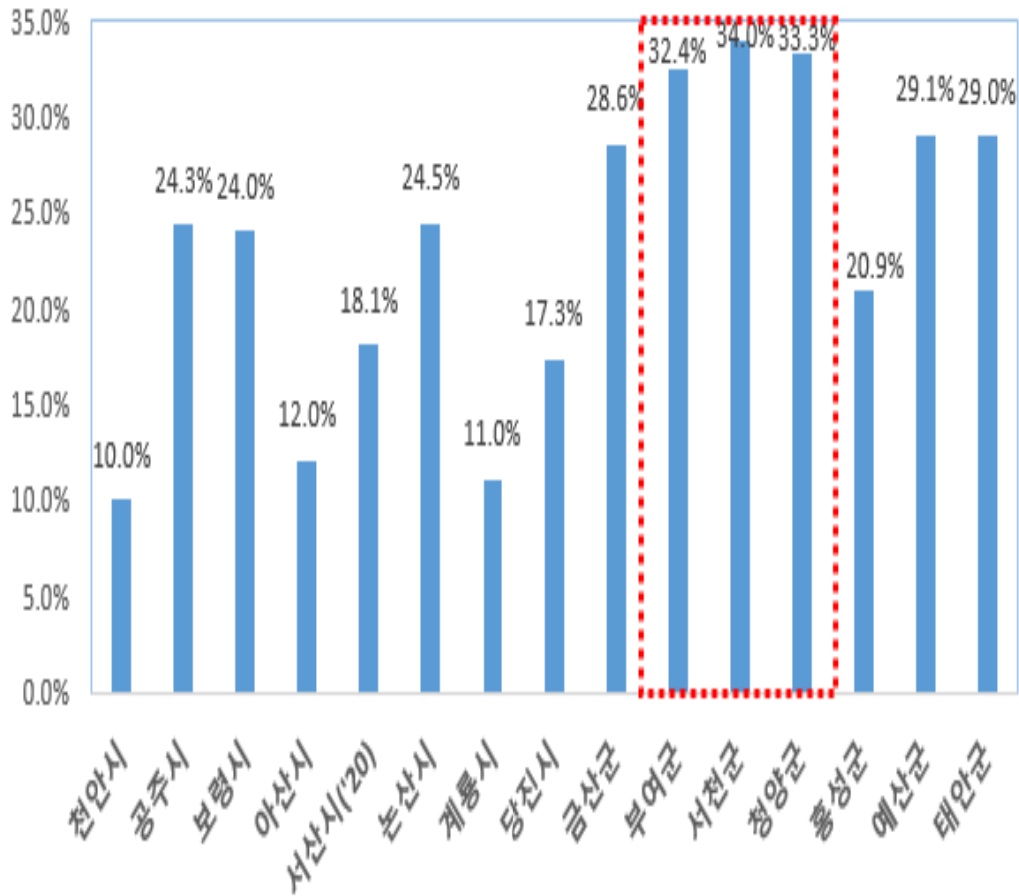
#### 1) 표본 설계

-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는 소멸위험지수, 고령인구비 및 삶의 만족도지수를 토대로 충청남도 공주시와 서천군을 선정하여 스마트 돌봄 프로그램 ‘편편(fun-fun)한 건강 경로당’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먼저, 지자체 중 충청남도를 선정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년 대비 ’22년 3월 신규소멸위험 진입 기초지자체 수 조사결과, 11개 지역 중 소멸위험 지수가 높은 지역은 충남 서산(0.492)이 2순위로 조사, ’21년도 충청남도의 소멸지수는 천안시를 제외하고 소멸위험지역 7곳, 소멸고위험지역이 3곳으로 집계(한국고용정보원, 2022a;2022b)되어 소멸위험성이 높다. 2021 한국인의 행복조사(국회미래연구원, 2021ab) 결과, 17개 지역 중 ‘5년 전 삶의 만족도’는 충남(5.81)이 가장 낮게 평가, ‘5년 후 삶의 만족도’는 경북(5.90), 강원(6.25), 충남(6.27)순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 한편, 충청남도 시·군별 소멸지수는 서천군(0.15)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조사되었고, 2019년도 충청남도 시·군별 고령인구비 또한 서천군(34.0%)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최근 5년간(’17년도~’21년도) 충청남도 시·군별 삶의 만족도는 공주시(mean: 5.91)가 가장 낮게 평가된 반면, 5년간 삶의 만족도와 ’21년도 기준 삶의 만족도 모두 서천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mean: 6.54, 6.69).





[그림 2] 2019년도 충청남도 시·군별 고령인구비



\*통계청 「충청남도 사회통합」 데이터 토대로 정리함.

고령인구비는 충청남도 15시군 중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의 '20년도 데이터가 미기재 되어 '19년도 기준으로 분석함.

-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와 서천군지회로 사전 공문 발송 및 담당자와의 긴밀한 미팅을 통해 연구목적과 의의를 설명함으로써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모든 경로당이 프로그램을 전면 축소하거나 당분간 폐쇄 예정으로 현장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공주시지회와 서천군지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경로당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2곳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초 연구방법 중 AI 얼굴인식 생체 측정 시스템은 고령층 어르신들께 생소하여 조사에 대한 부담감과 우려가 제고되어 고민 끝에 방법을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각 지회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해당 경로당의 고령층 어르신들은 대다수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들 기저질환이 있으며 갑자기 숨이 차는 호흡곤란과 구역, 가슴통증, 식은땀 등의 전조 증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높음을 토로하였다.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는 겨울철 혈관 수축으로 인한 응급질환을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간단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Pulse Logger Sensor를 통해 측정하기로 했으며 조사대상자에게는 개인정보동의서 작성을 통해 분석결과가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참고 됨을 양해구하였다.

○ 먼저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여경로당과 신관동 소재 경로당에서 11월 21일 오후 1시부터 6시 까지 평균 70대 이상 고령층 총 17명을 대상을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서천군지회 행복경로당은 11월 24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까지 평균 70대 이상 고령층 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설문지를 직접 읽고 수기로 체크하는 설문조사는 문항을 읽는 데에도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며, 특히 글자를 못 읽는 어르신들과 펜으로 작성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 정확한 의견 수집에 제한됨으로 1:1심층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bias)를 최소화하며 어르신들의 피로도를 줄이고자 조사 일주일 전부터 면접 조사원 4명을 선별하여 고령층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단어와 설명 등 충분히 교육하였으며 pilot 테스트를 통해 설문지 형식 및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는 총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Pulse Logger Sensor, 2단계 감성 어휘모델링 조사, 3단계 디지털기기 인식 및 AI 로봇의 스마트돌봄서비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되 어르신 한 명당 30분 이상 소요되어 중간 대기 및 충분한 휴식을 통해 조사의 집중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조사를 마친 응답자들에게는 단팥빵과 두유, 과일을 챙겨드림으로 감사함과 건강함을 기원하였다.

[그림 3] 본 조사를 위한 4단계의 수정된 표본설계



[그림 4] 공주시 소재 경로당의 고령층어르신 대상 3단계 연구 조사



[그림 5] 서천군 소재 경로당의 고령층어르신 대상 3단계 연구 조사





## 2) 분석방법여기부터 시작

- 본 조사에서는 스마트 돌봄프로그램 ‘펀펀(fun-fun)한 건강 경로당’의 실태조사를 위해 설문 조사와 심층인터뷰 및 관찰조사, Pulse Logger Sensor, 어휘 기반 노인감성 모델링을 병행 함으로 검증하였다. 변수추출은 스마트경로당에 관한 연구가 현재 전무하여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문항을 본 과제에 적합토록 수정 및 보완하여 1차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전공분야 교수와 전문가에게 문항 구성에 관한 의견 수렴하여 2차 수정 및 보완 작업 후, 고령층 어르신 대상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3차 수정 및 보완 작업으로 설문지를 최종 완성하였다.
- 기존 연구계획의 AI 얼굴인식 생체 측정 시스템은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노인의 얼굴데이터를 저장하고 혈압계를 연동하여 경로당 출입부터 퇴실까지의 체온 및 혈압을 측정 함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얼굴인식 온도체크 시스템과 검증받은 인바디의 생체 측정 시스템을 결합하여 최소오차의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나, 고령층어르신들의 측정 생소함 및 우려 등을 고려하여 Pulse Logger Sensor로 심혈관반응을 확인하였다.
- 고령층 어르신의 건강정보 정량적(생체 신호) 측정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센서를 체험하기 전 2분 동안 쉬면서 안정적인 심박 데이터를 확보한다. 측정되는 생체신호 데이터의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해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여 이동성 노이즈를 해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 측정된 데이터는 Labview 2013 (National Instrument)을 사용하여 그림의 순서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분석한다. 먼저 피크 검출기(Peak detec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심박의 최대 정점을 검출하고, 최대 정점의 발생된 시점들의 간격을 계산하는 PPI(Peak-to-peak Interval)를 추출한다. 종속변수인 BPM은 수식 1을 통해 계산하며, 수식 1에서 X는 PPI값으로 피험자들의 심박 변화에 따라 Peak 개수가 달라진다.

$$BPM = 60 / \frac{1}{N} \sum_{k=1}^N X_k \quad (\text{식 1})$$

- 두 번째 종속변수인 SDNN는 수식2를 사용하여 추출하며, X는 PPI 값이고 m은 윈도우 사이즈 만큼에 평균 PPI값이다.

$$SDNN = \sqrt{\frac{1}{N} \sum_{k=1}^N (X_k - m)^2} \quad (\text{식 2})$$

- PPI 값에 시간 축 데이터가 없으므로 2Hz로 리샘플링을 수행하며 그리고 PRV(Pulse rate variability)를 계산하고자한다.  
VLF, LF, 그리고 HF의 Power 값은 각 해당하는 주파수 영역의 값을 모두 더하여 계산하며 VLF 주파수 영역은 0.0033Hz~0.04Hz, LF 주파수 영역은 0.04Hz~0.15Hz, HF은

0.15Hz~0.4Hz를 사용하고자함 추출 변수인 VLF(%), LF(%), HF(%)를 사용하고자하며 VLF(%)는 수식 3으로 계산하였고, 각 변수들의 주파수 영역은 Power 영역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한다.

$$VLF(\%) = \frac{VLF\ Power}{VLF\ Power+LF\ Power+HF\ Power} * 100 \text{ (식 3)}$$

- LF(%)는 수식 4를 사용하여 추출하며, LF Power 양을 전체 Power양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LF(\%) = \frac{LF\ Power}{VLF\ Power+LF\ Power+HF\ Power} * 100 \text{ (식 4)}$$

- HF(%)는 수식 5를 사용하여 추출하며 HF Power양을 전체 Power양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HF(\%) = \frac{HF\ Power}{VLF\ Power+LF\ Power+HF\ Power} * 100 \text{ (식 5)}$$

○ 어휘 기반 노인감성 모델링은 먼저 Life Logging 어휘 기반의 노인 어휘를 수집하였다. Social Life Logging 환경에서 발견되는 노인 사회감성을 분석하고, '사회감성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 온라인상에 표현된 다량의 일상적 노인 사회감성 어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선행 연구에서 1차 및 2차 어휘 분석 대상 총 24개 선정, 최근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게시글을 업데이트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함).

- 다음으로 문헌기반 어휘 수집은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일반 어휘 및 감성 어휘 자료 수집함으로써, 어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 ① 일반 어휘 수집

- 국립국어원 어휘 데이터 수집
- 말뭉치 어휘 연구 관련하여 총 65,535개 어휘를 수집하였으며, 형용사 2,754개,
- 동사 10,338개, 명사 46,128개 등으로 구성된다. 국어학의 형용사 연구 기반 형용사 수집
- 문헌 상 명시된 총 2,926개의 어휘 개수 중 수집 가능한 877개 어휘 수집

#### ② 노인 사회 감성 (과학 연구 기반) 어휘 수집

- 공감 감성 어휘 체계화 연구의 총 1,646개의 형용사 데이터 수집
- 사회감성 연구 기반 어휘 91개 수집
- 감정단어 범주화 연구 기반 감정표현단어 504개 수집
- 심리학 연구 기반 감정단어 434개 수집

#### ③ 어휘 기반 노인 감성 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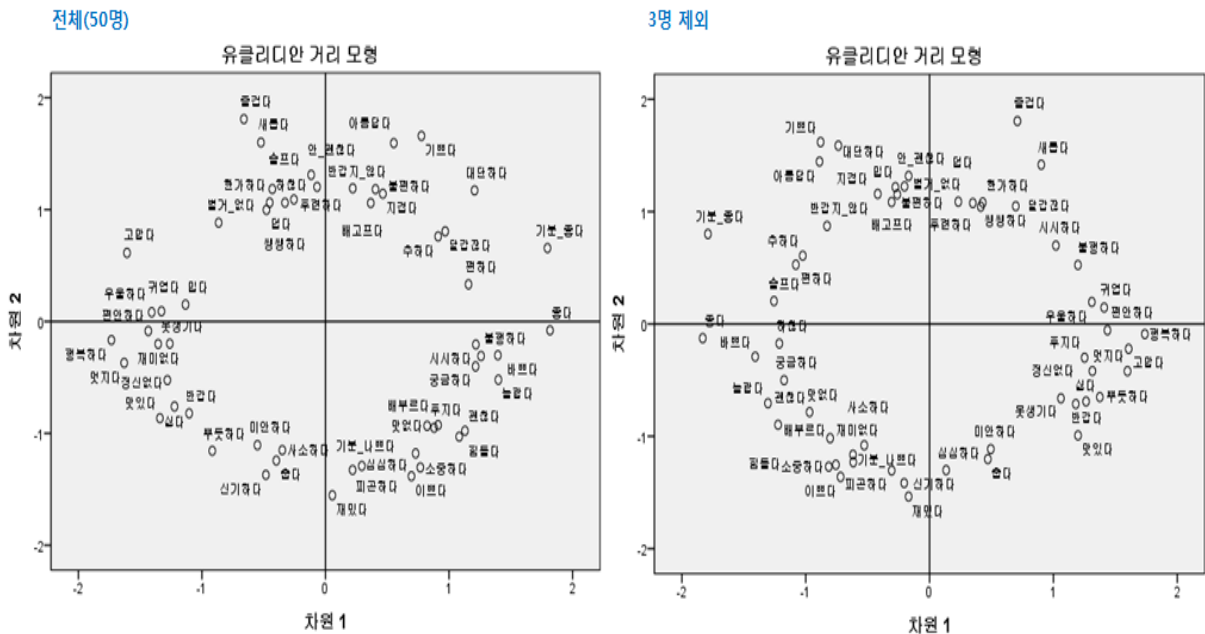
- 경로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헌 분석을 통한 자료 검색
- 경로당 관련 감성 어휘 수집
- 경로당 이용과 관련된 문헌 및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177개 감성 어휘 수집
- 기존 문헌의 경로당 속성 조사 결과를 통해 형용사 42개를 수집
- 경로당 관련 출판물(간행물, 단행본, 체험수기)에서 124개 감성 어휘를 수집
-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55개의 감성 어휘를 추가 수집

○ 설문 및 분석을 통해 감성 어휘의 적합성 검증, 대표 감성 어휘 도출 및 다차원 감성 모델링을 검증한다.

[그림 6] 노인 사회 감성 어휘 Mapping Process



[그림 7] 노인 대상 다차원척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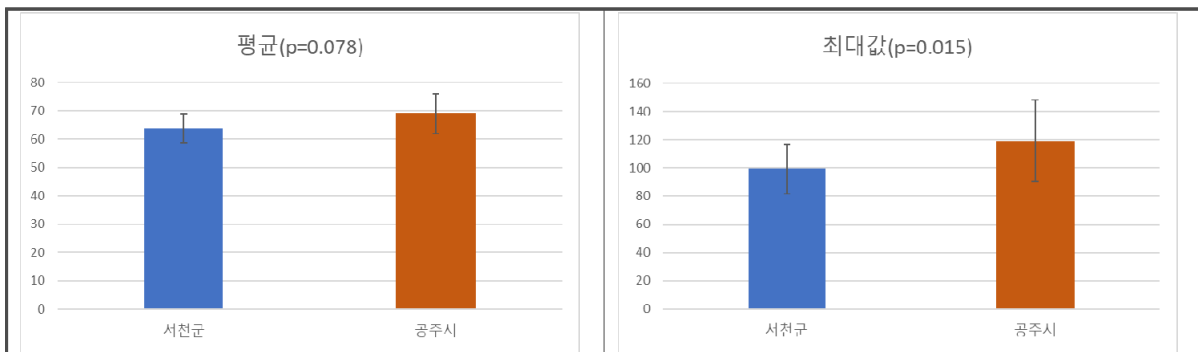


### III 분석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심혈관 반응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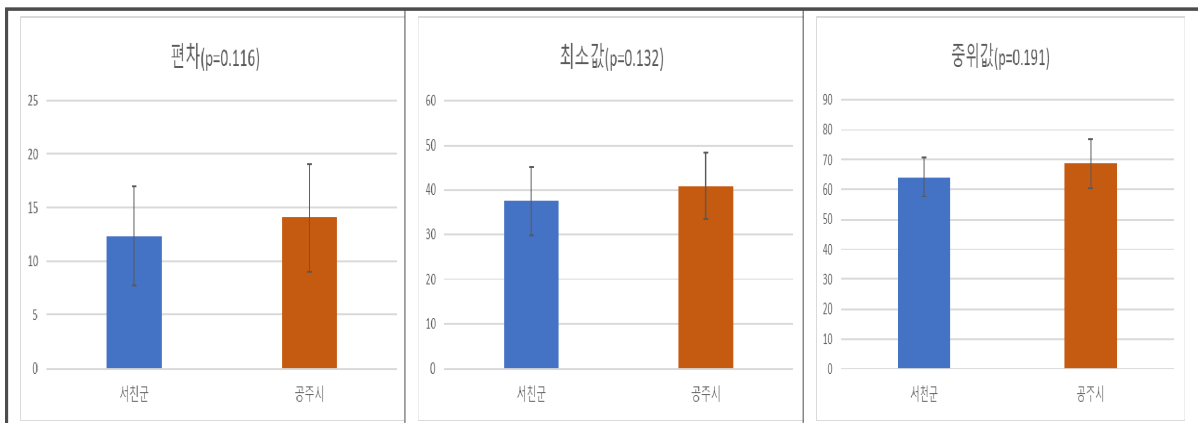
○ 본 연구의 표본으로써 공주시 소재 경로당의 고령층 어르신들과 서천군 소재 경로당 어르신들의 심혈관 반응 분석결과, 평균값과 최대값에서 서천군/공주시간 유의미한 차이( $p < 0.1$ )를 검증하였고, 공주시의 평균 심박 및 최대값이 서천군에 비해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8] 서천군과 공주시의 평균 심박 및 최대값



○ 심박편차, 최소값 및 중위값 분석은 통계적 유의미가 없으므로 검증되었다( $p > 0.1$ ). 심혈관 반응의 편차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공주시의 편차가 큰 경향을 보인다.

[그림 9] 서천군과 공주시의 심박편차, 최소값 및 중위값



○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주시의 고령자 층이 서천군에 비해 심혈관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여진다.

- 심혈관 반응은 변화의 폭이 클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 심박변이가 낮을수록 부정맥과 상관없이 심정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다<sup>1)</sup>).
- 따라서, 최대값이 높고 편차가 큰 공주시의 고령자 층이 서천군에 비해 심혈관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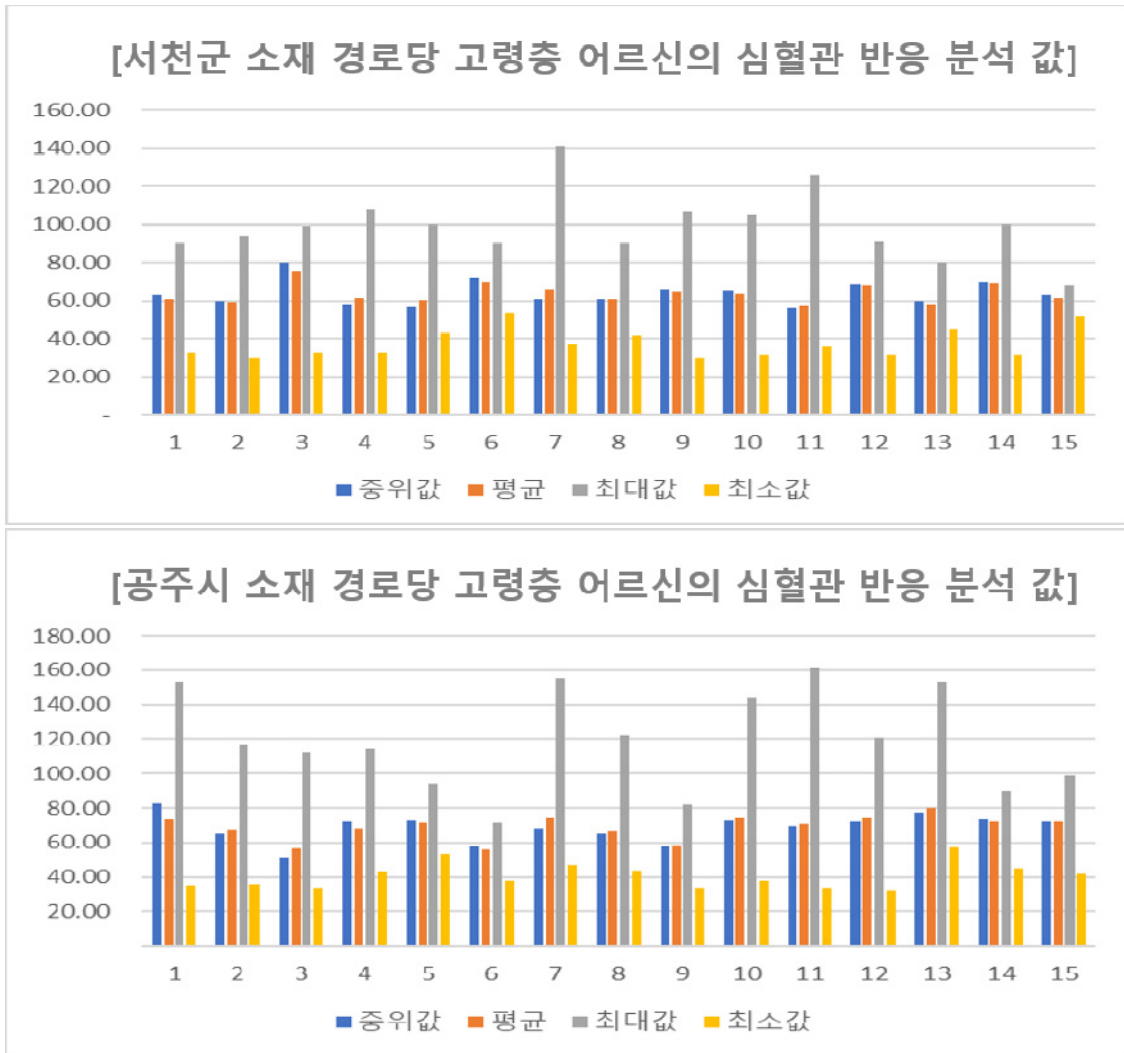
1) Metelka R. Heart rate variability - current diagnosis of the cardiac autonomic neuropathy. A review. Biomed Pap Med Fac Univ Palacky Olomouc Czech Repub 2014;158:327-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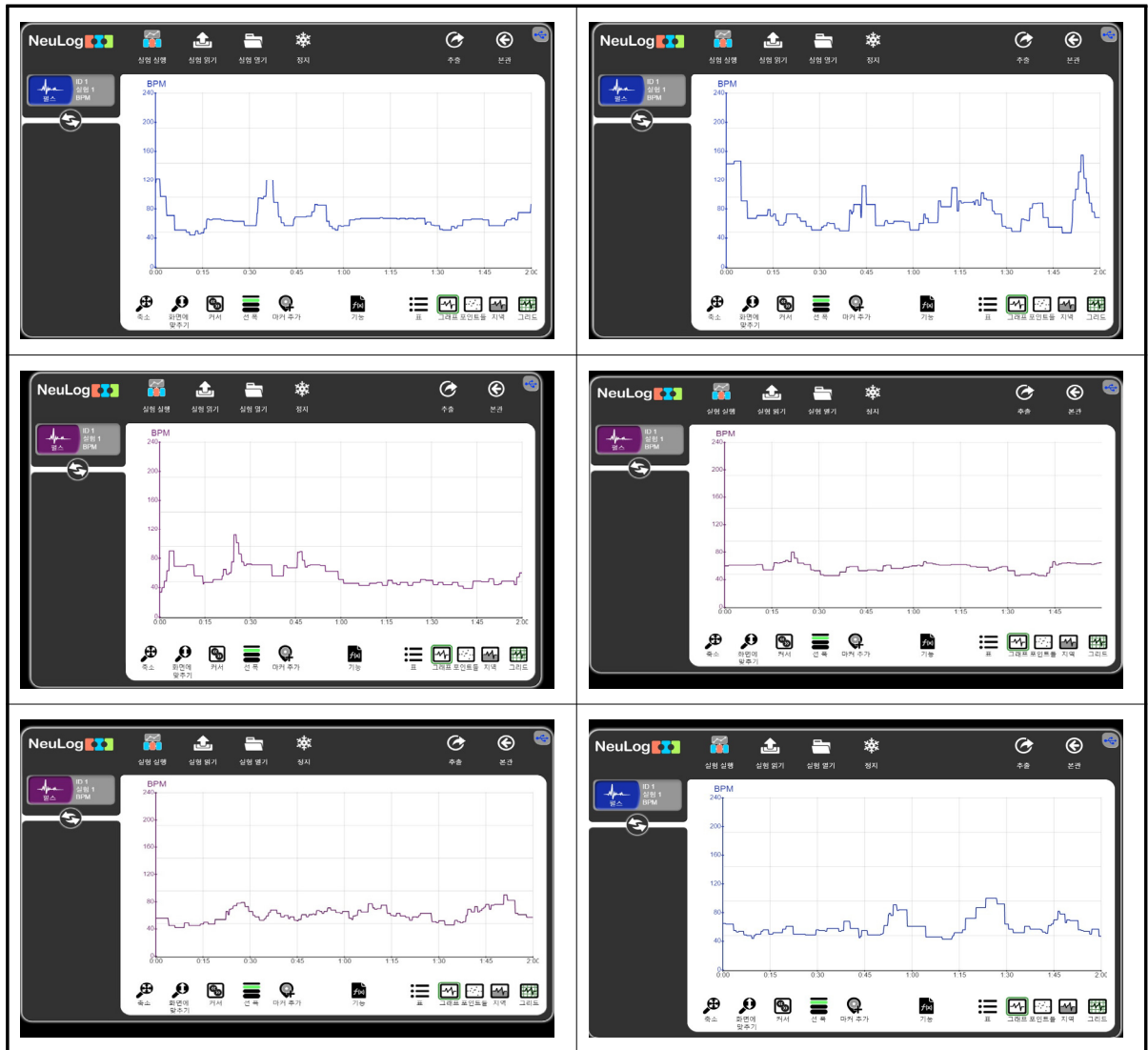
〈표 4〉 서천군과 공주시의 심혈관반응 분석 값

참가자 번호	서천군					공주시				
	중위값	평균	최대값	최소값	편차	중위값	평균	최대값	최소값	편차
1	63.00	60.75	90.00	33.00	14.36	83.00	74.15	153.00	35.00	18.10
2	60.00	59.34	94.00	30.00	14.33	65.00	67.07	117.00	36.00	20.34
3	80.00	75.11	99.00	33.00	16.79	51.00	56.31	112.00	34.00	13.68
4	58.00	61.48	108.00	33.00	15.06	72.00	67.71	114.00	43.00	13.40
5	57.00	60.36	100.00	43.00	13.51	73.00	71.38	94.00	53.00	7.00
6	72.00	69.95	90.00	53.00	7.49	58.00	56.04	71.00	38.00	7.32
7	61.00	66.02	141.00	37.00	20.17	68.00	74.48	155.00	47.00	23.28
8	61.00	60.88	90.00	42.00	10.08	65.00	66.37	122.00	44.00	14.32
9	66.00	64.42	107.00	30.00	12.46	58.00	58.36	82.00	34.00	10.53
10	65.00	63.70	105.00	32.00	19.05	73.00	74.53	144.00	38.00	18.49
11	56.00	57.47	126.00	36.00	14.17	69.00	70.85	161.00	34.00	19.70
12	69.00	68.18	91.00	32.00	7.92	72.00	74.48	121.00	32.00	15.42
13	60.00	58.03	80.00	45.00	6.33	77.00	79.90	153.00	57.00	9.69
14	70.00	69.63	100.00	32.00	9.39	74.00	71.66	90.00	45.00	10.08
15	63.00	61.42	68.00	52.00	4.35	72.00	72.13	99.00	42.00	9.82

[그림 10] 서천군과 공주시의 심혈관반응 분석 값



[그림 11] 조사대상자의 심혈관 반응 data sample : 공주시/서천군 각 지회별 3명



## 2. 조사대상자의 어휘모델링 분석 결과

- 본 연구의 표본으로써 공주시 소재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서천군 소재 경로당 고령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감성 어휘의 적합성 검증, 대표 감성 어휘 도출 및 다차원 감성 모델링을 시행하였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어휘모델링 표본설계 및 분석

대표 어휘 추출	적합 어휘 검증	다차원 어휘 모델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빈도수 낮은 어휘를 제외 : 177개 → 72개</li> <li>- 72개의 어휘에 대한 적합성 검증 실시(31명 설문)</li> <li>- 선정된 적합어휘 대해 7점 척도 설문 (공주시 15명 / 서천군 16명)</li> <li>- 선정된 어휘 기준 반의어 쌍을 구성하여 유사성 설문(31명)</li> </ul>		
카이제곱 검정(SPSS툴)	요인 분석(SPSS툴)	다차원척도 분석
기대빈도 32 이하, 유의확률 0.05 이상인 어휘 제외	소수의 대표 어휘를 도출하기 위해 요인 분석 수행	차원에 감성을 모델링 하고자Russell 이 사용한 다차원척도 분석법(MDS) 및 쌍비교에 의한 유사성 또는 상이성 자료로 차원에 나타내는 방법인 ALSCAL기법 사용하여 결과 도출

- 먼저 공주시 어르신의 어휘 별 유효변수를 추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즐겁다(1), 우울하다(2), 하찮다(M9), 달갑잖다(3), 심심하다(4)’ 어휘에 대해 일부 PPG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p < .05$ ). 감성 어휘와 PPG 변수 차이 검증 결과, 어휘별로 특성을 나타내는 유효 변수 및 증감 패턴이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어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별 유효변수를 활용한 공주시 룰베이스를 정의하였다.
- 다음으로 서천군 어르신의 어휘 별 유효변수를 추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즐겁다(1), 소중한(2), 유쾌한(M9), 안정된(3), 싫은(4)’ 어휘에 대해 일부 PPG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p < .05$ ). 감성 어휘와 PPG 변수 차이 검증 결과, 어휘별 특성을 나타내는 유효 변수 및 증감 패턴이 상이함을 확인하여 어휘별 유효변수를 활용한 서천군 룰베이스를 정의하였다.

[그림 12] 조사대상자의 어휘모델링 data sample

아래 어휘 중 '즐겁다'를 1번에 배치하고, 나머지 5개 어휘들을 2~8번 위치에 배치해주세요.

우울하다	하찮다	심심하다	바쁘다	즐겁다	놀랍다
------	-----	------	-----	-----	-----

위치	어휘
1	즐겁다
2	바쁘다
3	놀랍다
4	괜찮다
5	심심하다
6	우울하다
7	
8	

이름: JOO.

아래 어휘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분류해 보는 설문입니다.  
 세로열 각각의 어휘들이 가로열의 6개의 카테고리 중 어디에 속하는지 'x'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부분은 틀을 고정해 놓았으니, 마우스로 스크롤 하시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표1]

어휘	Category					
	우울하다	하찮다	심심하다	바쁘다	즐겁다	놀랍다
좋다					√	
기분 좋다					√	
재있다				√		
맛있다					√	
이쁘다						√
멋지다					√	
즐겁다					√	
행복하다					√	
소중하다					√	
고맙다						√
기쁘다					√	
신기하다					√	
괜찮다					√	
대단하다						√
뿌듯하다					√	
놀랍다					√	
새롭다			√			
아름답다					√	
힘들다	√					
즐다						√
바쁘다					√	
심심하다					√	
정신없다						√
반갑다					√	
귀엽다						√
편안하다					√	
피곤하다						√

### 3. 조사대상자의 디지털기 및 건강경로당 인식여부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본 연구의 표본으로써 공주시 소재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서천군 소재 경로당 어르신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먼저, 공주시 어르신들은 남성(11.8%)보다 여성(88.2%)의 비중이 월등히 많았으며, 68세-91세까지 대동소이하나 68-74세(35.3%)가 근소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거여부에서는 독신(29.4%)보다 동거가 70.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력은 초졸64.7%, 무학29.4%, 초중퇴5.9% 순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서천군 경로당 어르신들은 여성(87.5%)이 남성(12.5%)보다 높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어르신은 경로당을 환경미화를 관리하는 분들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여성분들만이 교육받으며 참여하였다. 80-84세 48.8%, 75-79세 25.0%순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동거가 62.5%로 많았으며 초졸(81.3%)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공주시와 서천군 모두 어르신들의 건강이 양호하였으며, 최고령인 91세 어르신께서도 모든 조사에 적극 참여하셨다. 동거인으로써 공주시는 배우자 35.3%, 자녀며느리등 23.5%, 아들 11.8%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천군도 배우자 43.8%, 자녀며느리 등 12.5%, 아들 6.3%순으로 집계되었다. 고령층 여성 비율이 높은 추세대로 두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머무는 대상은 모두 여성 어르신들이었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공주시 N=17], [서천군 N=16])

구분	집단 세부	공주시(N=17)	서천군(N=16)	구분	집단 세부	공주시(N=17)	서천군(N=16)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 별	남성	2(11.8)	2(12.5)	주 거	독신	5(29.4)	6(37.5)
	여성	15(88.2)	14(87.5)		동거	12(70.6)	10(62.5)
연 령	68-74	6(35.3)	2(12.5)	학 력	무학	5(29.4)	1(6.3)
	75-79	3(17.6)	4(25.0)		초중(퇴)	1(5.9)	-
	80-84	3(17.6)	7(43.8)		초졸	11(64.7)	13(81.3)
	85-89	4(23.5)	2(12.5)		중중(퇴)	-	1(6.3)
	90세 이상	1(5.9)	1(6.3)		중졸	-	1(6.3)

## 2) 조사대상자의 경로당 이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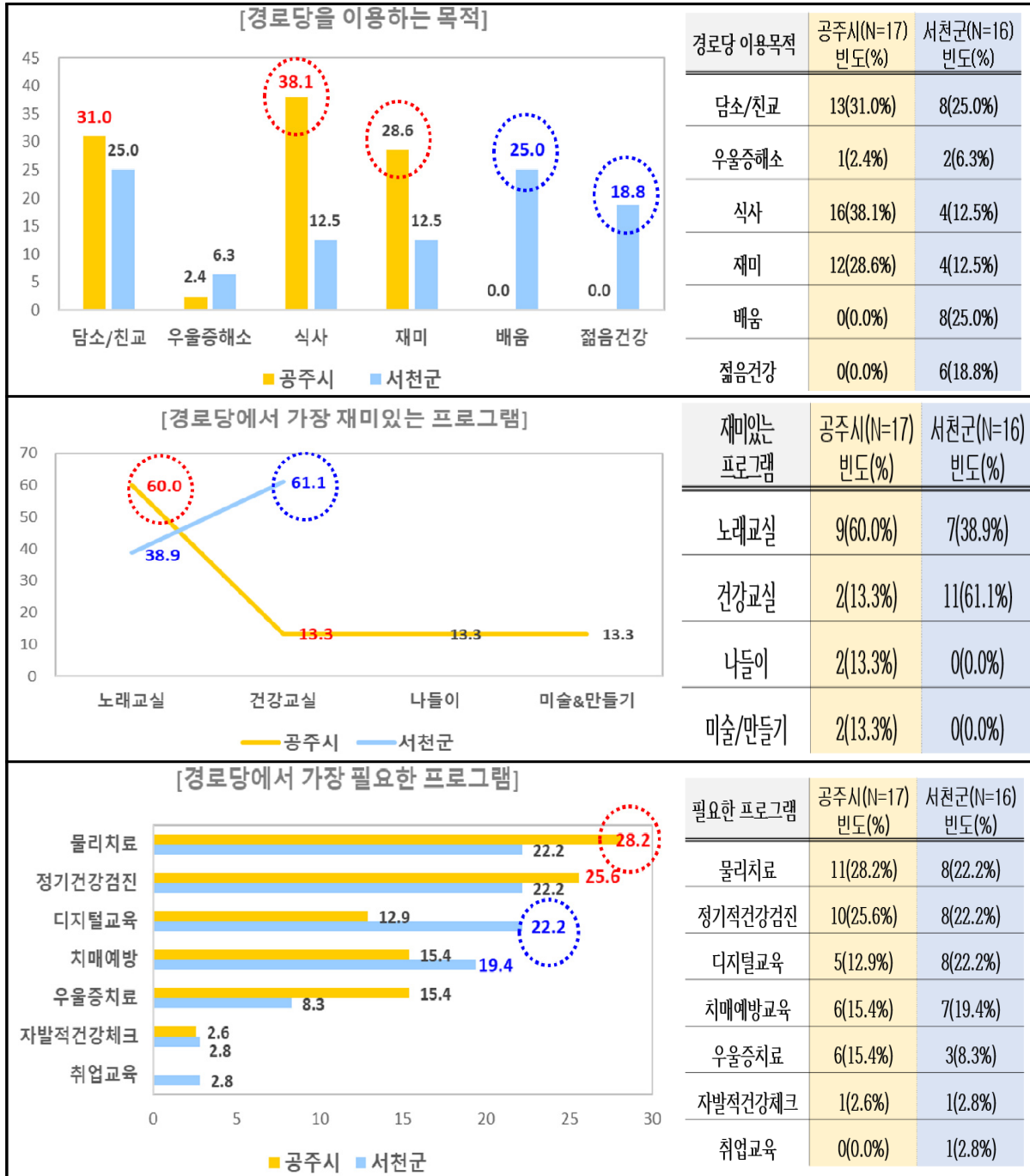
- 경로당을 이용하는 형태에 대한 조사결과, 먼저 공주시 어르신들은 경로당 방문 시 전동차로 이동하시는 분 제외하고 모두 도보(94.1%)로 이동했으며, 도착 소요시간은 1-5분 58.8%로 높았고, 한 분 제외한 모든 어르신이 혼자(94.1%) 방문하였다. 경로당 이용횟수로써 주2회 52.9%, 주1회23.5%, 주3-5회17.6%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로당에서 머무는 시간으로는 2시간 58.8%, 1시간 23.5%, 3시간 이상 17.7%순으로 집계되었다.
- 서천군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동수단으로 도보37.5%, 버스31.3%, 자전거/승용차 등 31.3%순으로 나타났다. 도착시간은 11분 이상과 6-10분 각 37.5%로 비율이 높았으며, 전원 모두 혼자 방문하였다. 경로당 이용횟수는 주2회 43.8%, 주3-5회37.5%, 주1회 18.8%순으로 집계되었으며, 경로당에서 머무는 시간은 3시간 이상이 6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7〉 조사대상자의 경로당 이용 형태

구분	집단 세부	공주시(N=17)	서천군(N=16)	구분	집단 세부	공주시(N=17)	서천군(N=16)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이동수단	도보	16(94.1)	6(37.5)	이용횟수	매일	1(5.9)	-
	버스	-	5(31.3)		1회	4(23.5)	3(18.8)
	기타	1(5.9)	5(31.3)		2회	9(52.9)	7(43.8)
도착시간	1-5분	10(58.8)	4(25.0)		3-5회	3(17.6)	6(37.5)
	6-10분	5(29.4)	6(37.5)	머무는 시간	1시간	4(23.5)	1(6.3)
	11분 이상	2(11.8)	6(37.5)		2시간	10(58.8)	5(31.3)
방문	혼자	16(94.1)	16(100.0)		3시간이상	3(17.7)	10(62.5)
	배우자	1(5.9)	-				

- 다음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목적에 대하여 공주시 어르신들은 식사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38.1%로 높게 나타났으며, 담소/친교 31.1%, 재미28.6%, 우울증해소 2.4%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60.0%)이었으며, 건강교실, 나들이, 미술/만들기는 각 13.3%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했다. 경로당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물리치료 28.2%, 정기적 건강검진 25.6%, 치매예방교육 15.4%, 우울증치료 15.4%, 디지털교육 12.9%, 자발적 건강체크 2.6%순으로 집계되었다.
- 서천군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목적은 배움과 담소/친교가 각 25.0%로 높았으며 젊음건강 18.8%, 식사와 재미 12.5%, 우울증해소 6.3%순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건강교실이 61.1%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노래교실이 38.9%로 나타났다. 경로당에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물리치료, 정기적 건강검진, 디지털교육이 각 22.2%로 높게 나타났으며, 치매예방교육 19.4%, 우울증치료 8.3%, 자발적 건강체크와 취업교육 각 2.8%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조사대상자의 경로당 이용 목적, 가장 재미있는/필요한 프로그램(우선순위별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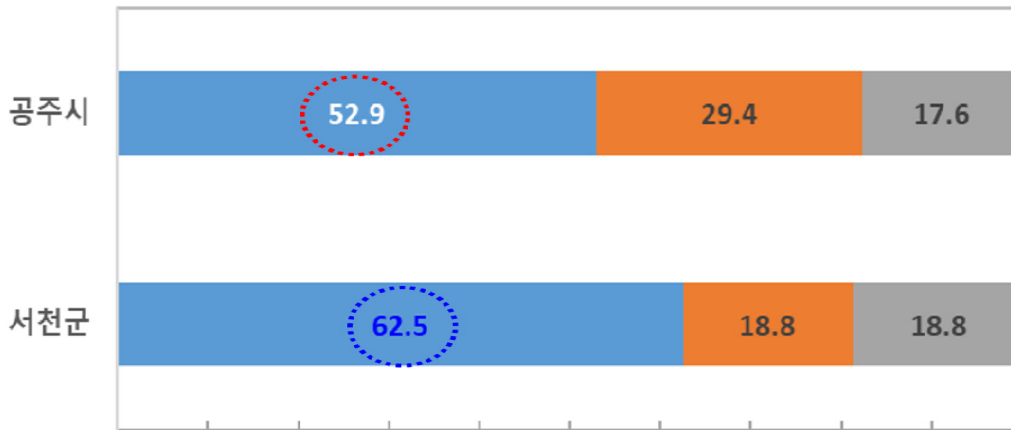
### 3) 조사대상자의 디지털기기 사용여부 및 인식

#### (1)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여부 및 인식

- 본 연구의 표본인 경로당의 고령층 어르신들 대상 디지털 기기 사용여부 및 인식을 살펴보고자 먼저 스마트폰에 대해 조사했다. 공주시 소재 경로당의 어르신들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52.9%로 높게 나타났으며, 29.4%가 사용하지 않으며 스마트폰을 모르는 분들은 17.6%로 집계되었다.
- 스마트폰 사용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과 장점으로 대(大)화면의 큰 글자와 사진촬영(흔들림X, 넓고많이) 각 25.0%로 비유이 높았으며 영상통화/큰 볼륨, 음악감상/유튜브가 각 18.8%, 달력/날씨 등 정보와 화면확대기능 각 6.3%순으로 집계되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및 단점으로 많은기능으로 불편/어려움, 보이스피싱 두려움 각 3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사용하지말라는 권면이 22.2%, 글자를 못 읽어 사용 못함이 11.1%순으로 조사되었다.
- 서천군 소재 경로당의 어르신들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62.5%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18.8%, 스마트폰을 모르는 분들도 18.8%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과 장점으로 영상통화/큰 볼륨이 46.7%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흥미롭게도 카톡/메신저 기능이 33.3%로 높았고 음악감상/유튜브 13.3%, 대(大)화면의 큰 글자 6.7%순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및 단점으로는 사용법 모름이 75.0%로 높았고, 기존핸드폰이 더 편함이 25.0%로 나타났다.
-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조사할 때 실제 공주시 소재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소지하면서도 스마트폰인줄 모르는 분들이 많았으며, 대부분 전화 이외의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큰 화면에 글자크기가 커서 가끔 문자를 전송 및 확인할 때 편리함을 느끼고 사진 촬영 시 손 떨림이 있으나 사진이 잘 찍혀서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경로당 내 어르신의 특정 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당황하여 스마트폰의 화면 터치가 안 됨으로 119연락이 지연되었음을 토로하기로 했다.
- 서천군 소재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카톡/메신저 사용률이 높았으며, 기존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화 및 메신저기능 이에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어르신들의 배움의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도 좋은 핸드폰 사용해야한다'며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주었으나 그럼에도 기존 핸드폰이 더 단순하고 익숙함에 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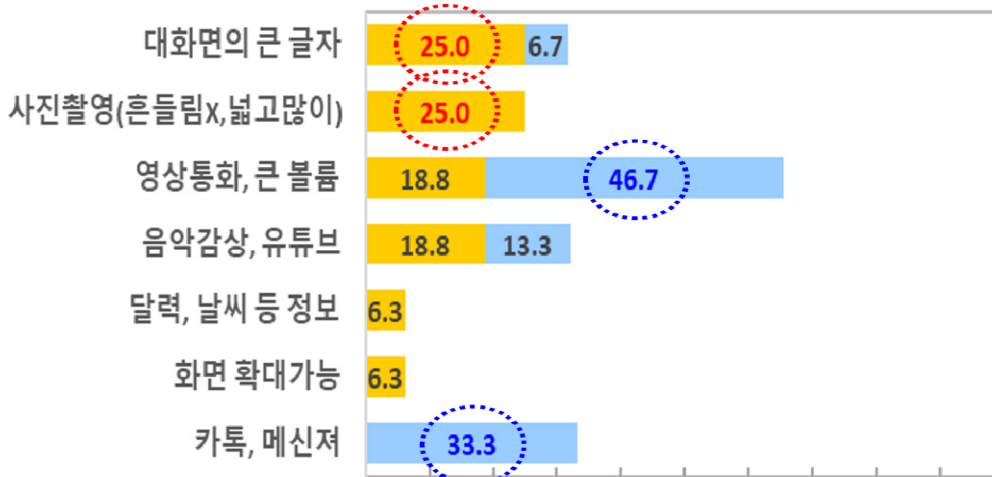
[그림 14]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여부 및 인식

[스마트폰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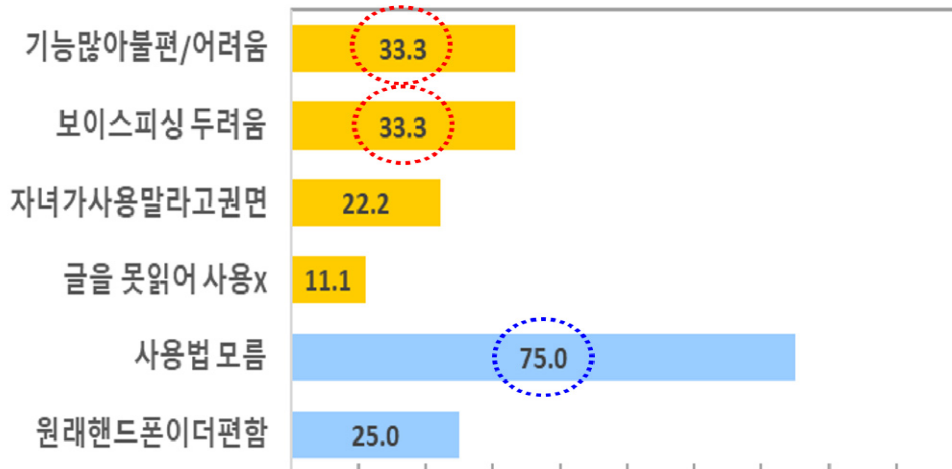
■ 사용 ■ 미사용 ■ 모른다

[스마트폰 사용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장점]



■ 공주시 ■ 서천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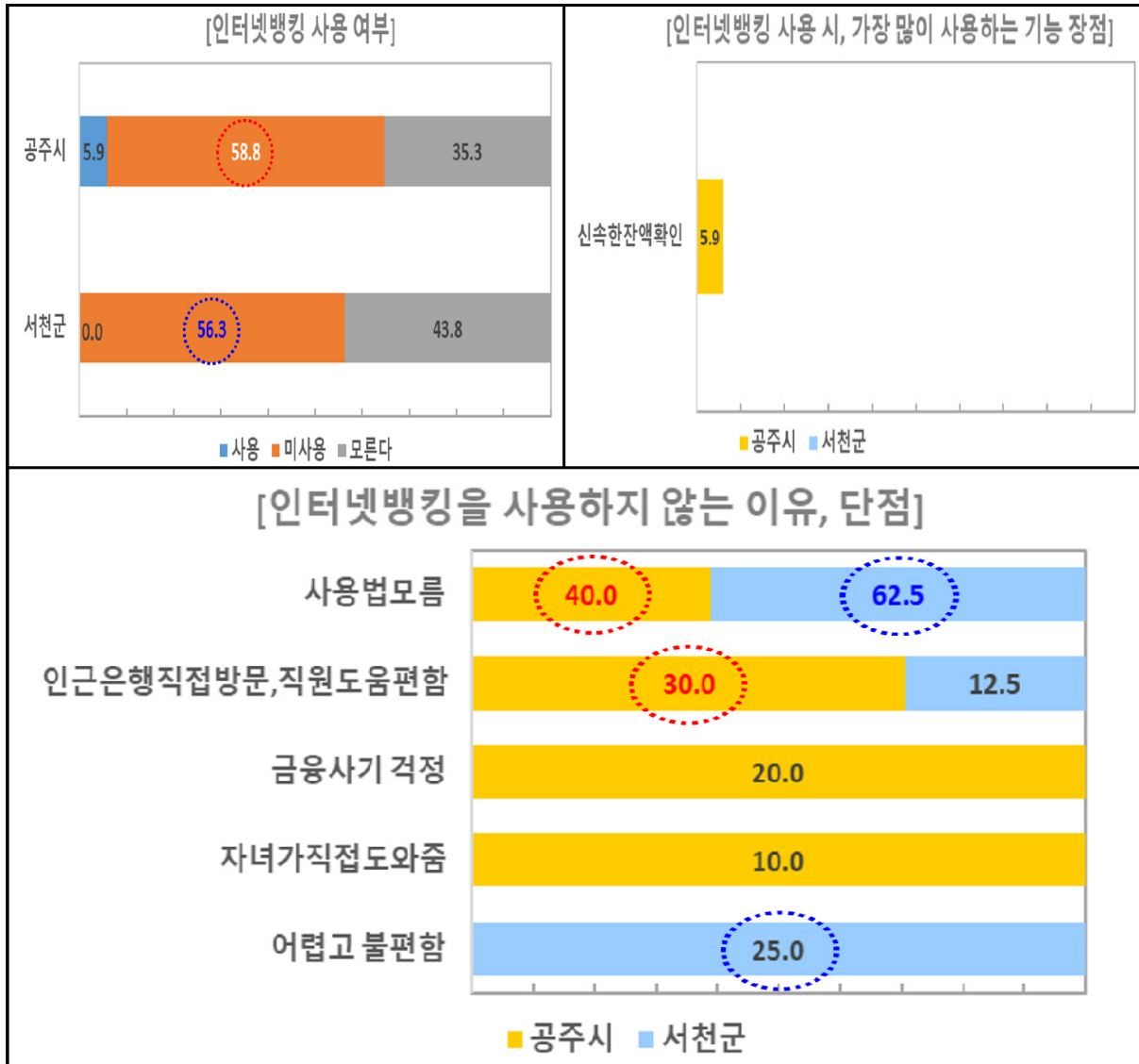


■ 공주시 ■ 서천군

## (2) 조사대상자의 인터넷뱅킹 사용여부 및 인식

- 경로당의 고령층 어르신 대상 인터넷뱅킹 사용여부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먼저 공주시의 어르신들은 58.8%가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35.3%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단지 5.9%만이 사용하였다. 인터넷뱅킹 사용 시 장점은 잔액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음(5.9%)이며 사용하지 않는 이유 및 단점은 인터넷뱅킹 사용법을 모름이 40.0%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근은행을 직접방문/직원도움이 편함 30.0%, 금융사기 걱정 20.0%, 자녀가 직접 도와줌 10.0%순으로 나타났다.
- 서천군 어르신들의 56.3%가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고, 43.8%가 모르며 사용하는 어르신은 한명도 없었다.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및 단점으로는 사용법 모름이 62.5%가 가장 높았으며, 어렵고 불편함이 25.0%, 인근은행을 직접방문/직원도움이 편함12.5%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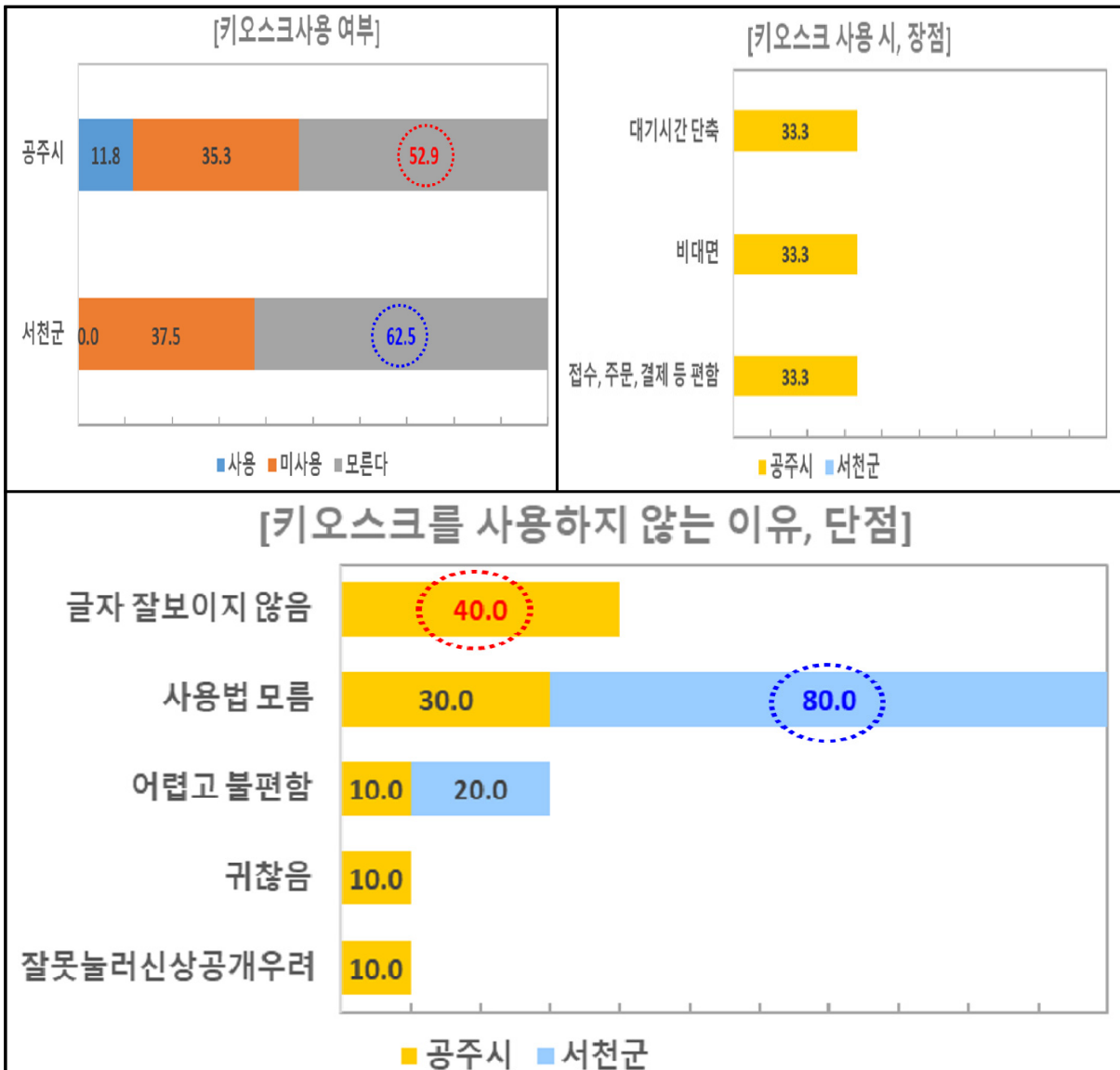
[그림 15] 조사대상자의 인터넷뱅킹 사용여부 및 인식



### (3) 조사대상자의 키오스크 사용여부 및 인식

- 경로당의 고령층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사용여부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먼저 공주시 어르신들의 52.9%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35.3%는 사용하지 않고 단지 11.8%가 사용함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 사용 시 장점은 대기시간이 단축되며 특히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비대면으로 접수/주문/결제등의 편리함이 각 33.3%로 집계되었다.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음이 40.0%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용법 모름 30.0%, 어렵고 불편함, 귀찮음, 잘못 눌러 신상공개우려 각 10.0%순으로 나타났다.
- 서천군의 어르신들은 62.5%가 키오스크를 모르고, 37.5%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사용법 자체를 모르며 어렵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그림 16] 조사대상자의 키오스크 사용여부 및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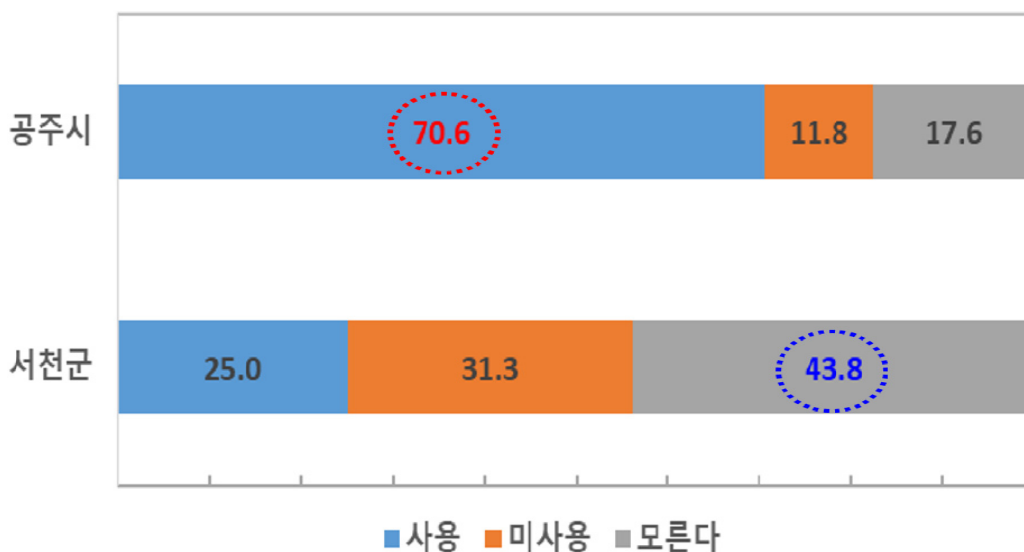


#### (4) 조사대상자의 경로당내 AI 로봇 스마트프로그램 사용여부 및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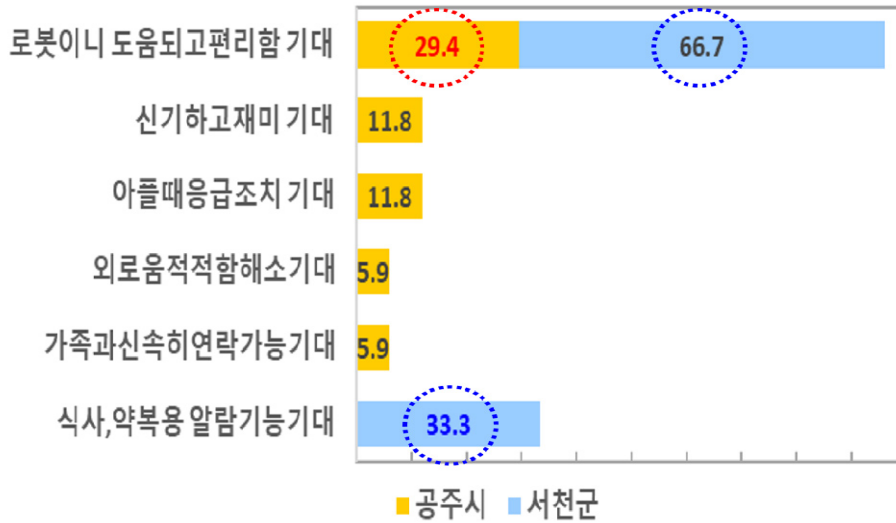
- 향후 경로당내 AI로봇이 도입되면 스마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먼저 공주시의 어르신들은 사용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70.6%로 나타났으며 미사용 11.8%, AI로봇을 모른다고 답한 어르신은 17.6%로 나타났다. AI로봇 사용 시 기대되는 장점으로 로봇이니 당연히 도움되고 편리할 것을 기대함이 29.4%로 높았으며, 신기/재미 기대 11.8%, 아플 때 응급조치 기대 11.8%, 외로움/적적함 해소 기대 5.9%, 가족과 신속한 연락 가능기대 5.9% 순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AI로봇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사용법 모름과 복잡/어려움이 각 11.8%, 감정 없는 로봇은 재미없고 소통불가 5.9%로 나타났다. 경로당내 AI로봇 사용 시,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는 응급시 즉시긴급 연락 36.0%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플때비상연락/조치 28.0%, 건강유지/관리 기능 20.0%, 사람과 같은 말벗 기능 16.0%순으로 집계되었다.
- 서천군의 어르신들은 향후 경로당내 AI로봇이 도입 시 AI로봇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이 43.8%로 높았으며, 미사용이 31.3%, 사용이 25.0%로 집계되었다. AI로봇 사용 시 기대되는 장점으로로는 로봇이니 당연히 도움되고 편리할 것을 기대함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식사/약복용 알람기능 기대가 33.3%로 높게 나타났다. AI로봇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사용법 모름이 18.8%, 감정 없는 로봇은 재미없고 소통불가 6.3%, 내가 할 수 있기 때문 6.3%로 조사되었다. 경로당내 AI로봇 사용 시,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는 건강유지/관리 기능 40.0%로 가장 높았으며, 식사/약복용 알람,수발이 33.3%, 응급시 즉시긴급 연락과 사람과 같은 말벗기능 각 13.3%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7] 조사대상자의 경로당내 AI로봇 사용여부 및 인식

#### [AI 로봇 스마트 프로그램 사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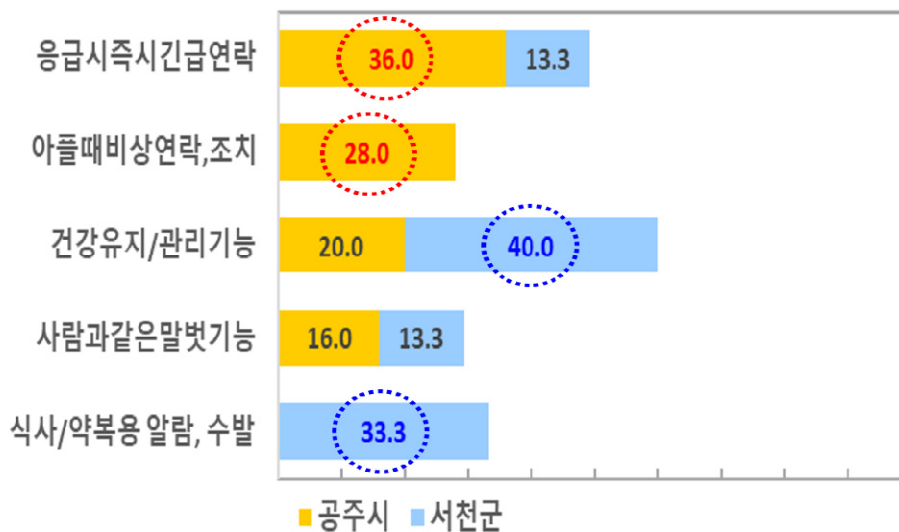
### [경로당 내 AI 로봇 사용 시, 기대되는 장점]



### [경로당 내 AI 로봇을 사용하고싶지 않은 이유]



### [경로당 내 AI 로봇 사용 시, 가장 필요한 기능]



## IV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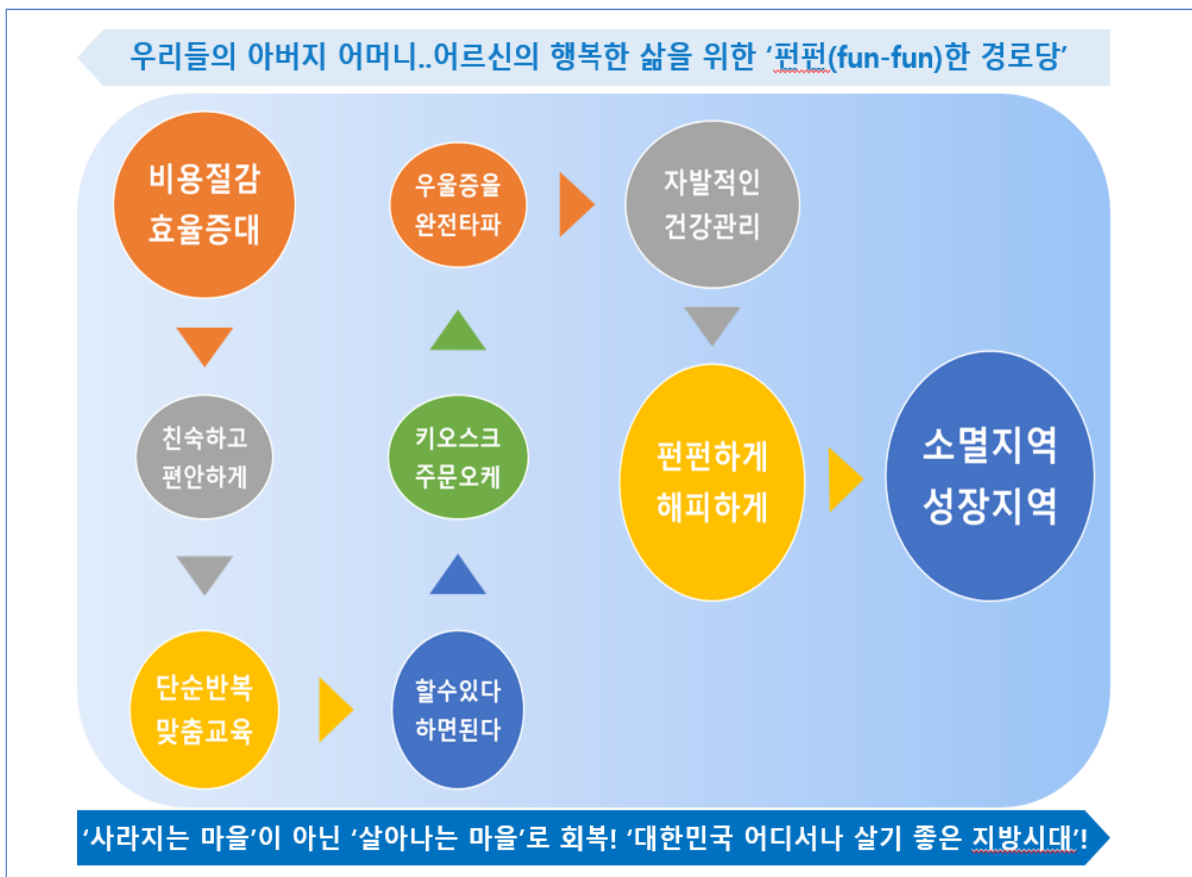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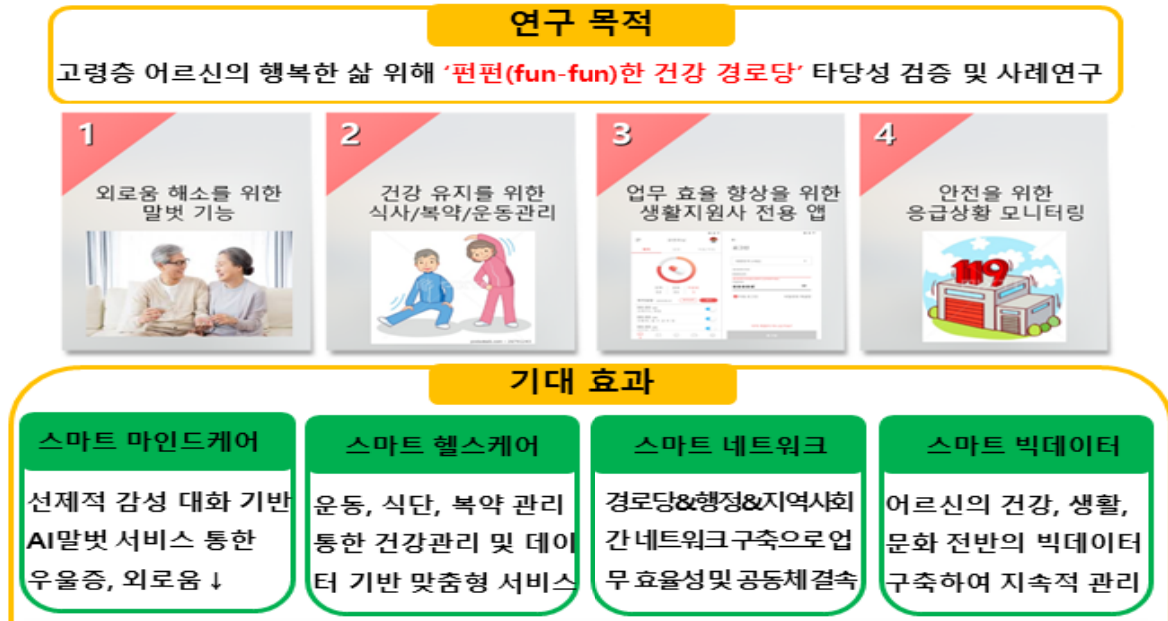
- 지방소멸 및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어르신의 심리적 외로움 해소 및 건강증진, 봉사자 및 민관 네트워크 효율성, 특히 노인부양비용을 절감하고자 AI, ICT, IoT 기반의 스마트 돌봄은 필수불가결한 당면과제이다.
  - 이에, 본 연구는 고령층 어르신의 맞춤형 스마트 돌봄 프로그램 ‘편편(fun-fun)한 건강 경로당’은 보건소에 가지 않아도 경로당에서 쉽고 간단한 데이터를 통해서 자발적 지속적으로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상대적) 저렴한 가격의 가성비와 효율성 높은 시스템 여부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 특히, 고령인구비 및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타 지역으로 확장하여 시범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경로당 & 행정 & 지역사회 민·관·협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거버넌스 파트너십의 업무 효율성 및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하여 ‘거점형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단편일률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별·마을별 고유성과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 돌봄의료를 실현할 수 있으며, 단지 운영의 초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에서 고령층 어르신의 여가와 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마트 돌봄 프로그램 ‘편편(fun-fun)한 건강 경로당’의 실태조사를 위해 설문 심층인터뷰 및 관찰조사, 어휘 기반 노인 감성 모델링, 건강 정보 시스템을 병행하여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주시와 서천군 소재 경로당의 건강정보 측정 시, 고령층 어르신들은 건강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AI, IoT가 아닌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감성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연락하며 대처할 수 있는 원버튼의 시스템(실제 화면 터치형은 응급상황으로 긴장 및 당황했을 시 떨림으로 터치에 실수하여 연락이 지연되었음을 호소함)을 요청하였으며, 감성 없는 로봇과의 일회성 대화가 아닌 사람과 같은 말벗 기능의 선호함이 높았다.
  - 둘째, 건강 정보의 심혈관 반응은 단순하게 건강정보를 나타내지만 경로당내에서 지속적으로 측정된다면 고령층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건강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경로당이 단순하게 친교와 담소의 모임 장소가 아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 자기관리 및 응급상황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건강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향후, '고령층 어르신의 생체신호 측정'을 시행하여 기본적으로 고령층의 건강을 결정짓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 요소의 조합에 따른 건강모델의 결과로써 검증과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생체신호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반드시 필요함으로 판단된다.
  - 셋째,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2005년 이후 지방 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한계로 인한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부족문제, 시설 면에서는 충분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 경로당의 경우 노인 복지법에 따라 시설기준을 최소 면적과 이용정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구축범위나 법규가 도시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재정적 지원의 한계로 충분한 공간계획이 되지 않고 있어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많은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노인 정책 활성화의 일환으로 경로당 관리, 복지·여가지원 사업, 건강지원사업, 특별행사, 생활지원 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기획사업 등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의 강점을 살려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급증하는 노인복지 요구에 대처할 이용자 중심시설로서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 넷째, 고령인구의 증가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취미생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로당 내 건강정보 서비스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욕구가 반영되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의 결과로 현재 사용 중인 경로당이 고령층 어르신들을 위한 특히, 소멸고위험군 농어촌지역의 ‘편편(fun-fun)한 건강경로당’으로써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여 추진해보기를 소원한다. 이를 토대로 고령층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실버시장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라지는 마을’이 아닌 ‘살아나는 마을’로 회복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전환됨을 확신한다.

[그림 18] 초고령사회 균등한 삶 보장 위한 스마트케어 시범연구의 목적 및 기대 효과



## V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2021년 디지털 격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3월 24일자.
- 국토연구원(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WP 22-06.
- 국회미래연구원(2021a).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1-22호, 12월31일자.
- \_\_\_\_\_ (2021b).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및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심층분석 보고서」. 21-23호, 12월31일자.
- 국회입법조사처(2022).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 대응 현황과 과제. 「2022년 사회문화조사실 장기 과제 보고서 III」, 제1963호, 6. 16.
- 김신영(2006).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결정요인연구. 노인복지연구, 32, 99-117.
- 김정숙·최선미(2019). 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접근성,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3(1), 185-220
- 문진영·장익현(2021). 여성노인 1인가구의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이 복지서비스 인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4(2), 31-54.
- 미래연구포커스(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양극화. 「FUTURE HORIZON」, 09, 13-18.
- 중앙일보(2022). 65세 노인 기준 연령, 점진적으로 올려야. 10월18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9935>
- 통계청(2021). 주요연령계층별 추계인구 <https://kosis.kr/>
- \_\_\_\_\_ (2022). 장래인구추계
- 한국고용정보원(2022a).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4월 29일자.
- \_\_\_\_\_ (2022b). 노인 돌봄 노동시장 현황과 전망. 7월 14일자.
-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어르신들의 맞춤형 스마트 돌봄 서비스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본 설문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편편(fun-fun)한 건강경로당의 스마트 돌봄 서비스 개발 위한 사용자 기초 정보 및 인식 설문조사입니다.  
 각 항목별 자유롭게 의견을 표기, 성향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시어 조사를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어반마크 기업부설연구소

1. 우리 어르신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함(별)	(남/여)	연령	세	학력	주거	·독신 ·동거_____
-------	-------	----	---	----	----	-----------------

2. 경로당 이용형태를 여쭙보겠습니다.

교통 수단	·도보 ·_____	도달 시간	·10분 이하 ·_____	방문 유형	·혼자방문 ·_____	이용 횟수	·매일 ·주_____
머무는 시간	·1시간미만 ·_____	이용 목적	①담소/친교 ②우울증탈피 ③식사 ④재미 ⑤배움의 즐거움 ⑥젊음유지 ⑦가족내 불편 ⑧_____				

2-1) 우리 어르신께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별 중복체크)

- ① 노래교실      ② 건강교실      ③ 나들이      ④ 미술교실      ⑤ 기타\_\_\_\_\_

2-2) 경로당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별 중복체크)

- ① 물리치료      ② 우울증 치료      ③ 정기적 건강검진      ④ 자발적 건강체크      ⑤ 치매예방교육  
⑥ 디지털교육      ⑦ 취업교육      ⑧ 기타\_\_\_\_\_

3. 우리 어르신의 성향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항	←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가능한 젊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최신 유행 스타일의 옷이 적어도 한두 벌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운동과 다이어트로 건강 유지/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젊게 보이게 하는 제품, 화장품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돈이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이용 여부를 여쭙보겠습니다.

4-1) 우리 어르신께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십니까?

- ① 예 ←(가)로 답해주세요      ② 아니요 ←(나)로 답해주세요 .....      ③ 모른다←(4-2)로

가) 스마트폰 이용 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과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4-2) 우리 어르신께서는 입금, 출금, 이체 등 목적으로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십니까?

- ① 예 ←(가)로 답해주세요      ② 아니요 ←(나)로 답해주세요 .....      ③ 모른다←(4-3)로

가) 인터넷 뱅킹 이용 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과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4-3) 우리 어르신께서는 병원,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키오스크**를 사용하십니까?

- ① 예 ←(가)로 답해주세요      ② 아니요 ←(나)로 답해주세요      ③ 모른다←(4-4)로

가) 키오스크 이용 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나)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4-4) 우리 어르신께서는 **경로당 내 스마트 AI로봇 시스템**을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가)로 답해주세요      ② 아니요 ←(나)로 답해주세요      ③ 모르겠다←(다)로

가) AI로봇 시스템 이용 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다)로 답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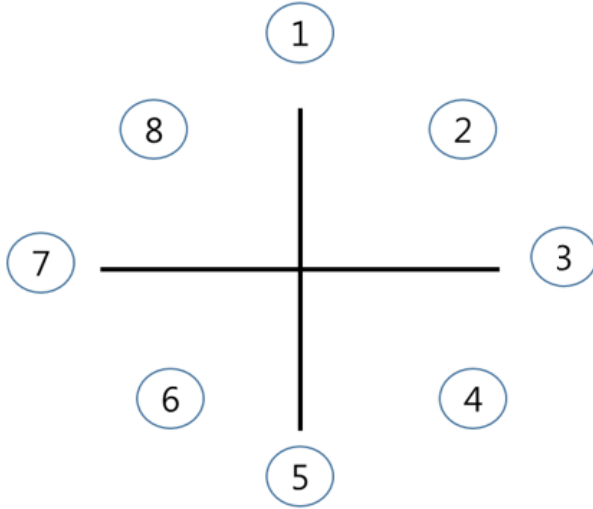
나) AI로봇 시스템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다)로 답해주세요

다) AI로봇 시스템 이용 시, **가장 필요한 기능**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휘모델링 form-sample]

아래 어휘 중 '즐겁다'를 1번에 배치하고, 나머지 5개 어휘들을 2~8번 위치에 배치해주세요.

우울하다	하찮다	심심하다	바쁘다	즐겁다	놀랍다
------	-----	------	-----	-----	-----



위치	어휘
1	즐겁다
2	
3	
4	
5	
6	
7	
8	

아래 어휘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분류해 보는 설문입니다.

세로열 각각의 어휘들이 가로열의 6개의 카테고리 중 어디에 속하는지 'v'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부분은 틀을 고정해 놓았으니, 마우스로 스크롤 하시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표1]

어휘	Category					
	우울하다	하찮다	심심하다	바쁘다	즐겁다	놀랍다
좋다						
기분 좋다						
재밌다						
맛있다						
이쁘다						
멋지다						
즐겁다						
행복하다						
소중하다						
고맙다						
기쁘다						
신기하다						
관찮다						
대단하다						
뿌듯하다						
놀랍다						
새롭다						





도원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최종보고회

발표 5

**장기미취업 고립청년의  
사회진입 · 관계망 형성 지원 방안**  
: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자본 형성 전략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김동희**  
공동연구자 **정보영**



# 장기미취업 고립청년의 사회진입·관계망 형성 지원 방안

: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자본 형성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동희 / 공동연구자 정보영

## I 서론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현대사회의 청년세대는 생애주기 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고립에 직면해 있다. 관련하여 2020년 KDI는 첫 취업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진다고 추정했다. 베이비부머세대 이상의 1인 가구는 실직·가족해체·파산 등으로 고독사, 절대적 빈곤 등과 같은 사회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 청년세대의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회 안착 연령이 늦어져 발생하는 문제 등에 노출되고 있다.<sup>1)</sup>

청년층은 현 사회구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과거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을 겪음과 동시에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들로 발생한 다양한 격차들이 향후 중장년·노년기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소정 외, 2008). 더구나 청년층의 사회진입이 장기화 될 경우 구직시장 진입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심화될 경우 구직단념 및 은둔으로 이어져 생애 전반의 문제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1년 안에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취업 가능성이 있는데도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 단념자는 2020년에만 60만5200명으로, 2019년 대비 13.6% 증가했다.<sup>2)</sup> 청년재단은 국내 고립 청년을 약 13만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정하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거나 편의점만 오가는 만 18~34세 은둔 청년을 전체의 3.6%로 추산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고용시장의 악화로 인해 청년층의 사회재진입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더욱 긴요해졌다.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오랜 기간을 지낸 청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자신감을 잃고 은둔에 이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년시기에 당면한 고립·은둔이 해소되지 않은 채 중·장년까지 지속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도 해법을 찾기 어려워 시급한 사회문제가 된다.<sup>3)</sup> 그러나 아직까지 고립·은둔 현상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과 연구는 노년기와 취약 계층을 위주로 제한적으로 다뤄져왔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사회적 고립과 유사한 취약청년에만 한정하여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정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었다(김기현 외, 2019; 유민상·신동훈, 2021).

1) 윤덕우. [나는 청년입니다] "1인 가구는 시대적 흐름...개인의 행복 초점 맞춘 정책 필요" 대구신문. 2022. 4. 5. 21:40.  
2) 이진혁. 코로나에 달린 취업문... "사원줄 대신 알바 명찰 답니다" [2030 코로나세대]. 파이낸셜 뉴스. 2021.07.11. 18:10  
3) 장수경·신소윤. "은둔이라는 스펙 쌓은 이들이여, 나오라 '땅굴'로." 한겨레. 2022.08.06. 13:17

더구나 탈고립·탈은둔 지원 정책은 다각적인 접근과 장기적 노력이 요구되어 단편적인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제도와 재원을 마련해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라든, 용기를 낸 당사자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이 조달되기도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정책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효능감이 크게 저하되어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다시 도전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방어기제가 사회공동체로의 복귀에 지장을 초래한다. 일련의 과정으로 당사자가 활력을 찾아 구직 의지를 갖더라도 공백기와 직무 경험 부재로 인해 다시금 구직난의 악순환에 빠진다. 따라서 제도권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용기 내어 도전할 수 있도록, 경력·경험·스펙·공백기에 구애받지 않고도 진입 할 수 있는 경험의 무대 조성이 필요하며, 청년층의 사회진입 지연과 고립 수준에 맞춘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도 국정과제로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했는데, 특성상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술적 논의 상으로도 청년에 대한 정의도, 고립과 은둔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다. 지방정부의 현황을 살펴봐도 사회적 고립·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를 도입한 광역지자체는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기초지자체도 전체의 6%인 13개 지역에 불과하다. 미비한 법적 근거와 지원 예산의 부재,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전문가 부족은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의 설계를 비롯해 기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관련 지원 제도, 지역인재 양성과 자원 연계 생태계를 원활히 할 토대가 미비한 소도시의 고립·은둔 청년들은 교육·문화·정보접근·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원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2. 연구 목적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고립과 은둔의 개념적 혼란을 고려하여 기존의 학술적 접근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적·정책적 지원 체계의 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주안점과 한계를 도출했다. 또한 사회적 관계 단절과 배제를 사회자본의 결핍 상태로 보고,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사회자본 형성 방안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한 통합 지원 알고리즘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축적을 요하는 청년시기의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를 청년층의 역량을 심분 발휘할 수 있는 경험과 상생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 관점을 반영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접근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망라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아직까지 학술적 검토가 미비한 탈고립·탈은둔 정책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표 1〉 연구의 논의 구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회적 고립·은둔의 개념 검토	사회자본 관점의 이론적 논의	제도 도입 현황 및 지원 정책 실태 파악	사회자본 형성 알고리즘을 접목한 지원 체계 설계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 설계

## II 이론적 논의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사회적 고립의 개념적 모호성

사회적 고립은 1950년대 후반부터 고립의 극단적 형태로 나타난 일본의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문제를 계기로 대두되었다(김성아, 2022b). 집에 나가지 않거나, 가족과 대화하지 않거나, 방 안에만 머무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히키코모리는 국내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로 순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에서는 ‘폐쇄은둔족’을 용례로 결정했다. 그러나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폐쇄은둔족 등의 혼용은 관련한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사회적 고립의 개념 정의를 어렵게 할 뿐이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명확한 개념이 부재하여 학문분야나 주제, 연구자의 관심 영역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며(최지현 외, 2022), 때로 외로움이나 고독, 은둔의 용어와 함께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김성아, 2022a). 아직까지도 학술적 논의와 제도상의 용어 혼용으로 혼란이 있지만, 합의된 사회적 고립의 개념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정의된다(이상철·조준영, 2017).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을 넘어 개념화 된 사회적 고립은 인간의 인지적·정서적·신체적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에 대한 필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 2)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점

사회적 고립을 다루는 초기 연구들이 주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양적 접촉 부재를 강조했다면, 최근의 논의들은 보다 다차원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김민주·이아라(2021)는 사회적 고립을 객관적 고립과 주관적 고립으로 구분하며, ‘얼마나 객관적으로 고립 되었는가’와 동시에 ‘얼마나 주관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객관적 고립이란 타인으로부터의 고립과 분리의 정도를 의미하며, 주관적 고립은 외로움과 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질적 수준에 대한 지각으로 의미한다(Nicholson, 2012; 이상철·조준영, 2017).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으로 사회적 고립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외부적 고립이란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내부적 고립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유민상·신동훈, 2021).

한편, 사회적 고립은 사회자본 관점, 사회적 배제 관점, 사회적 지지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김성아, 2022; 정주호 외, 2022). 사회자본이란 주로 “사회구성원들의 연결 및 협력을 유도하는 특정 가치, 규범, 네트워크, 공동체 활동, 신뢰 등”을 의미한다(최예나·최영출, 2020). 즉, 사회자본 관점에서 본 사회적 고립은 타인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활동 등과 같은 사회자본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빈곤의 개념을 넘어서 포괄적인 개념을 뜻하며, 주로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배제된 상태”를 뜻한다.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사회적 고립은 타인 및 집단과 교류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 사회, 정치활동을 할 수 없어 배제된 상태다(김성아, 2022a). 세 번째 차원은 사회적 지지 관점의 사회적 고립이다. 사회적 지지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으며, 존중되고 가치 있는, 그리고 상호 부조와 의무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일부(Wills, 1991; Taylor, 2007)"다. 사회적 지지의 부족과 사회적 고립은 유사한 역할을 하며, 서로 연관되고,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활·경제·정서적 측면에서 고립되었다는 것은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주호 외, 202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적 고립이란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되어 '사회자본이 결핍된 상태', '경제·사회·정치활동에서 배제된 상태', '사회적·물질적 지지의 부족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객관적 고립과 주관적 고립,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 니트(NEETs), 단절 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은 사회적 고립의 한 형태이며, 사후적 접근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유민상·신동훈, 2021). 결국, 사회적 고립은 단순 고립과 은둔 상태 등을 포괄하는 우산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사회적 고립'과 단순한 '고립'을 다루는 개념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논의와 현행 제도의 용례 상에 빚어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사회적 고립을 '고립·은둔'으로 지칭하여 분석했다.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사회자본, 사회활동 배제, 사회적 지지 부족으로 나타난 사회적 고립은 취약계층만이 당면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없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책은 미비하다. 대다수 선행연구도 노년층이나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주요하게 다룰 뿐, 청년층의 고립·은둔에 대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 처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재진입 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틔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사회적 고립의 원인과 위험성

사회적 고립의 원인은 생애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김춘남 외(2018)는 아동청소년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은 학교 적응, 가정환경, 친구관계, 방과 후의 활동에 따라 일어나며, 청·장년기에서는 실업과 퇴직, 이성관계, 경제 환경, 친구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노년기에서는 퇴직 후 적응, 가정환경(자녀, 배우자), 경제 환경, 건강상태에 따라 고립 상황이 발생한다. 개중 청년기와 노년기의 경우, 그 전의 생애주기인 유아동기 혹은 청·장년기에서 사회적 고립이 발생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아 지속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청년기 사회적 고립의 경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환경과 학교 적응, 친구관계요인에 따라 중장기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상황일 수 있다(유민상·신동훈, 2021).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전자의 경우 우울증,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겪으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 기도에 이를 우려가 있다.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청년층의 관계 단절과 물질적·사회적 지원 부족이 신뢰와 협력의 하락,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켜,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준,



2019; 박지선, 2020). 특히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은 타인의 관계 형성이나 결혼 및 출산에서 스스로 자신을 배제해 저출산 문제가 심화할 개연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김성아, 2022b),

종합하면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생애 전반에 드리운 위험문제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 중대한 사회 문제이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또 다른 차원의 사회문제로 귀결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이 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수준의 고립·은둔에 처한 청년은 대개 장기미취업 상태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 생애주기 청년은 핵심생산인구이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이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까닭이다. 사회변동에 따라 급증한 1인 가구와 사회적 관계망의 붕괴는 핵심동력인 청·중년층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 개중에서도 미취업 청년은 향후 고립·은둔에 처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상인 외(2021)의 연구는 사회적 고립 단계가 심화할수록 심리정서 안정과 진로 탐색 및 구직에 더욱 취약해짐 뒷받침한다. 이와 반대로, 구직에 성공하더라도 고용 상태의 안정성에 따라 사회적 관계에 격차가 유발되어 역으로 사회적 고립이 조장되기도 한다(조예지, 2016). 즉,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장기미취업이 나타나기도 하며, 반대로 장기미취업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에 처할 가능성이 모두 있다는 것이다.

### 3. 사회적 고립과 사회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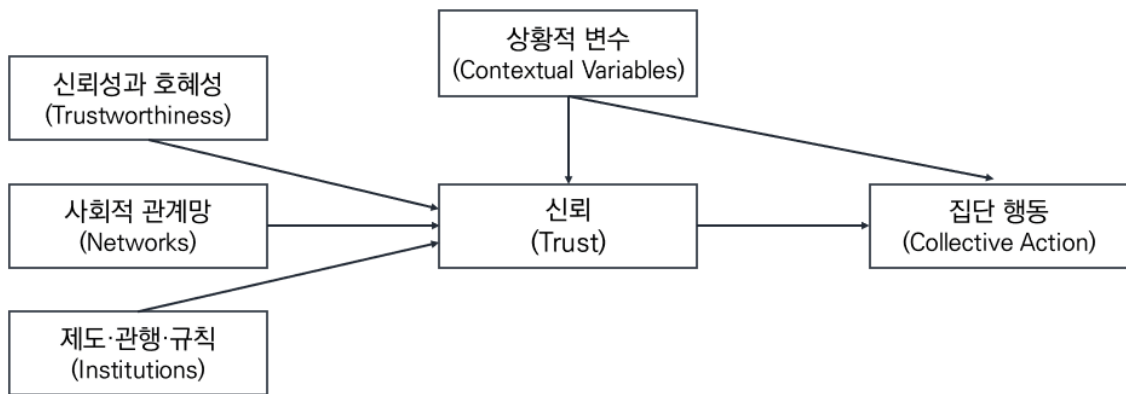
사회적 고립은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사회자본이 결핍된 상태, 경제·사회·정치 활동으로부터 배제된 상태, 사회적·물질적 지지의 부족 상태를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은 개별 사회자본의 감소 추세가 현대사회에서 행복을 감소시키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입증해오고 있다(De Jong Gierveld et al., 2006; Cacioppo & Patrick 2008; Arampatzi, E. et al., 2018). 사회전반의 행복 수준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주요한 조건이 되는 사회자본은 일반적으로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의 규범'으로 논의된다(Putnam, 1993; 강서윤·전희정, 2022).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은 경제적 가치 창출에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가령, 사회자본을 적절히 활용하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의 질, 관련성 및 적시성이 향상되기 때문에(Adler, P. S. & Kwon, S. W., 2002), 역량 개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조달받거나, 구인 정보를 받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관련 정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소통 단절과 사회갈등, 정보격차로 인한 인적 자본의 감소에 직면해 있는데, Coleman(1988)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자본이 인적 자본 창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으로 공공재와 사회자본의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 수저담론으로 대표되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지위세습 또한 사회자본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데, 만일 부모의 인적 자본이 가족관계에 내재된 사회자본에 의해 보완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역량은 자녀의 교육적 성장과 무관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Coleman, 1988). 즉, 사회자본은 개인이 고립·은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요하는 인적 자본을 재생산 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때문에 장기미취업 고립 상태에 처한 경우 사회자본 형성과 활용이 더욱 중요해진다. 성공적인 구직을 위해서는 구직 역량, 즉 사회·경제적 역량을 갖춘 인적 자본으로써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신뢰는 신뢰하는 주체가 본인의 이익이 단기적으로 감소하여도 공동의 장기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피신뢰자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Ostrom & Ahn, 2003). 즉, 구인 중인 기업 입장에서 신입 사원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하여 단기 이익이 감소하게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채용할 구직자가 공동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 믿어야 노동과 화폐의 교환이 성립되는 것이다. 반대로 자립을 단념하고 장기간 가족에 경제적으로 의존 하던 개인은 다시 시장경제 노동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의존하는 것보다 효용 가치가 낮으리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가까이는 가족구성원 간 형성된 신뢰로 경제적 부담을 나누려는 동기를 갖거나, 멀게는 사회적 신뢰로 ‘시장경제 참여에 대한 노력’이 보다 많은 편익을 증진할 것이라 믿게 된다면 집단행동에 참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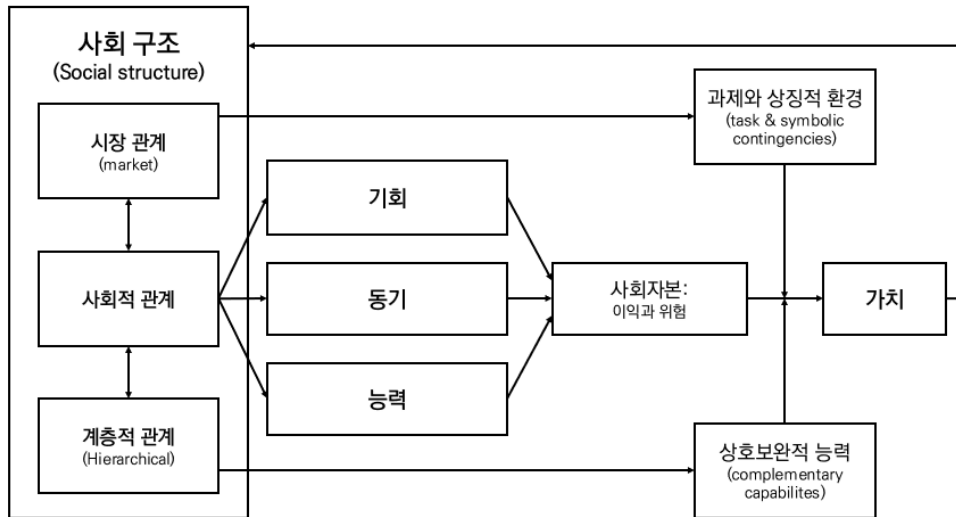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자본의 형성  
\*출처: Ostrom & Ahn (2003)

때문에 집단행동의 2세대 이론가인 Elinor Ostrom과 T.K. Ahn은 사회자본을 집합행동이 달성되는 방법이자 집단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적 속성으로 정의했다. 이 때 사회자본은 ①신뢰성과 호혜성, ②네트워크, ③공식적·비공식적인 제도와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해당 요소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작동하기 위한 맥락을 형성한다(〈그림 1〉). 여기서 신뢰는 집단이 특정한 방식의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수준(Cambetta, 2000)으로도 정의될 수 있으며, 그림 상으로는 사회자본과 집합행동을 매개하는 핵심요인(Torsvik, 2000)이 된다. 이러한 접근은 구직 단념을 선택한 고립청년이 자아존중감(자기스스로의 능력과 잠재가능성에 대한 신뢰)을 형성하며 동시에 주변 환경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다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 공동체적 협력 동기와 구직 의사를 재활하기 위한 지원책을 설계할 때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 즉, 반복적인 규칙 준수와 일정한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는 공동체 설계, 구성원 간 상호신뢰 및 협력으로 긍정적인 평판을 형성하는 네트워크, 반복된 신뢰 확인과 공동의 편익 증진으로 신뢰성과 호혜성을 형성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면, 탈고립·탈은둔을 향한 동기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종합하면,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족 또는 생활공동체와 지역사회에 협력 동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자기신뢰, 대인신뢰, 사회신뢰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미 기존 관계의 단절을 택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타인의 사회적·물질적 지지 없이는 다시 구직자로 동기를 부여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구직 지원의 관건은 사회 자본을 형성하고 유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이를 위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Adler & Kwon(2002)의 사회자본의 개념 모형(〈그림 2〉)를 참고하고자 한다.

Adler & Kwon(2002)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사회자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개인의 동기와 능력에 따라 다르게 구현된다고 말한다. 매개요인인 기회, 동기, 능력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사회자본 형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합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2〉 사회자본의 개념 모형

\*출처: Adler & Kwon(2002)

형성한 사회자본은 고립·은둔상황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위험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Adler & Kwon(2002)에 따르면 첫 번째로, 사회자본을 불균형하거나 과잉되게 투자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자산 축적을 억제하거나, 부채로 전환 될 수 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원 상태로 되돌리거나 전환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로, 사회자본이 고립·은둔 청년에 유익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전체적으로 부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연계하는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로, 이익과 위험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여러 조절 요인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에게 다른 가치로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가령, 고립·은둔 청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가 신뢰와 협력을 요구하는지, 경제적 합리성과 경쟁을 요구하는지에 따라서도 이를 둘러싼 사회자본의 가치가 다르게 판별될 수 있다. 고립·은둔 청년이 속한 공동체 내·외부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도 영향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청년의 주변 환경의 규범과 신념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도 사회적 역량의 가치를 인지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고립·은둔 청년이 다른 청년들이나 지역사회 행위자들의 자원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맥락 역시 형성된 사회자본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

위 모형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개인적·공동체적 사회자본의 전략적 활용과 관리를 위한 모형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고립·은둔 지원의 거래비용을 줄이며 정책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고립청년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Adler & Kwon(2002)의 사회자본 창출 구조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사회진입 및 관계망의 형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Ⅲ 연구 설계

####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한국 청년세대의 고립과 은둔 문제를 조명하고, 지역사회가 수요하면서도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군과 공동체 모형을 탐색했다. 이를 통해, 경험이 부재한 청년들도 자아존중감과 사회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는 현 사회가 고립청년을 ‘고립되어 구제가 필요한 개인’으로 낙인하지 않고, 잠시 ‘이행을 지연하거나 우회하고 있는 시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고립·은둔을 겪은 청년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재도약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원원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흐름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접근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했다. 먼저, 청년층의 고립·은둔을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여 관점 전환을 요구하는 접근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탈고립·탈은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접근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립·은둔 담론의 전환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장기미취업·고립·은둔에 대한 기존 제도·정책에 대한 담론 분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인식 전환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취업·고립·은둔 지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을 제시하고자 했다. 둘째, 고립·은둔 지원 제도 및 정책의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장기미취업·고립·은둔 지원을 위한 제도 현황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장기미취업·고립·은둔 지원 정책의 사례 조사 및 검토했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 제시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일자리를 연계하여 탈고립·탈은둔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 별 종합 지원 체계 설계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시민)사회의 자원·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직업군을 연계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했다. 또한, 청년참여제도와 연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설계하고자 했다. 현재 지자체 별로 설치되고 있는 청년참여제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동일연령 집단 간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청년들이 문화기획 및 공공프로젝트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독자적인 지역사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역량 제고하고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잠재력이 있다. 이에 실제 청년참여제도와 연결하여 청년들 간 사회관계망 형성을 독려한 사례를 제시하여, 청년들의 단절과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 형성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 3.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자료와 조례 및 정책 자료를 종합한 후 비교제도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사회적 고립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 탈고립·탈은둔 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다음으로 탈고립·탈은둔 지원 제도의 개념과 접근방식을 비교하여, 지원 범위와 의사결정 구조, 정책 전달 메커니즘을 파악하며 특징과 차이를 조명하고자 했다. 또한 사회자본 관점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기존 방식의 시사점과 보완점을 도출했다. 이는 병리적 처방과 경제활동 참여를 강요하는 기존 접근을 비판하고, 청년 개개인의 사회적 효능감과 관계망 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자본 형성 지원 시각의 필요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에 끝에서 사회자본 형성 모형에 착안하여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 IV 제도·정책의 현황 및 한계

### 1. 탈고립·탈은둔 지원 제도

#### 1) 근거 기반

2000년도 8월에 시행된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에는 탈고립·탈은둔 지원을 명시하는 규정이 부재하다. 폭넓은 의미에서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의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참조하여 적용해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한 만큼 법적 기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민상·신동훈(2021)에 따르면 청년기본법 이외에 생애전반기 대상을 포괄하는 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 또한 관련 포괄할 만한 규정은 있으나,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광역지자체가 도입한 관계 조례는 서울, 대구, 제주, 광주, 부산, 전남(6개곳)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기초지자체는 강원 원주시, 광주 동구·남구, 경기 이천시, 경북 안동시, 서울 노원구·성동구·양천구·은평구·중랑구, 인천 미추홀구, 전남 순천시, 충북 청주시(13개 곳)으로 전체의 6%다(〈표 2〉). 만성화 된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생애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정책의 시급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를 다루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의 도입 현황

지방자치단체		제정일자	조례 명
광역 자치 단체	고립	서울특별시	2021. 12. 30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2022. 10. 1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2021. 5. 20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은둔	광주광역시	2019. 10. 15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2021. 7. 14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전라남도	2021. 9. 30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기초 자치 단체	고립	남구(광주)	2021. 3. 29 청년 기본 조례
		성동구(서울)	2022. 9. 2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서울)	2021. 12. 3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전남)	2021. 8. 5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양천구(서울)	2020. 10. 29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경기)	2022. 8. 11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제7조(기본계획)
		원주시(강원)	2022. 2. 1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서울)	2021. 4. 1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 안정)
		청주시(충북)	2022. 5. 1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은둔	남구(광주)	2021. 11. 4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노원구(서울)	2022. 1. 6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광주)	2021. 3. 24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미추홀구(인천)	2022. 10. 17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안동시(경북)	2022. 5. 6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은평구(서울)	2021. 9. 30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개중 광주광역시 남구, 전라남도 순천시, 경기도 이천시, 서울특별시 중랑구(4개 곳)는 별도 조례 없이 청년 기본 조례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정책대상자의 세대범주가 같은 까닭으로 청년 지원 조례 내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볼 수 있지만, 탈고립·탈은둔 지원 프로그램은 단일 정책 사업만으로는 불가하며, 구체적인 종합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까닭으로 청년 기본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령,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청년 기본 조례 중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에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는데, 사회적 고립 청년의 명확한 정의와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에서 고립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한계를 지닌다.

단,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평생학습, 문화 향유의 측면에서 청년지원제도와 탈고립·탈은둔 관련 지원 제도는 연계할 지점이 많은 까닭으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경기 이천시, 광주 남구, 전남 순천시(7개 곳) 등처럼 청년정책 추진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은 장려할 만하다. 일례로 제주도는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청년 기본 조례로 정하며, 기본계획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한다(〈표 3〉).

반면, 대전광역시 서구의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보다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와 동일한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서는 정책 대상자를 정의상으로 ‘청년 1인 가구’와 고독사가 우려되는 ‘고독사 위험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탈고립·은둔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접근으로 엄밀한 ‘탈고립’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 경상북도 등 몇몇 지자체 또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을 다루는 관련 조례의 지원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하고 있는데, 서구 사례와 같은 사유로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표 3〉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에 명시된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위원회(자문·심의)	전달체계	
광역 자치 단체	고립	서울특별시	5년 주기	매년시행	가능	-	고립청년 지원시설
		대구광역시	5년 주기	매년시행	의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시설
		제주특별자치도 <sup>4)</sup>	5년 주기	시행규칙	5년 주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은둔	광주광역시	5년 주기	매년시행	3년 주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부산광역시	5년 주기	매년시행	3년 주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사무의 위탁
		전라남도	5년 주기	매년시행	5년 주기	-	사무의 위탁
기초 자치 단체	고립	남구(광주)	5년 주기	시행계획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시설(민간위탁)
		성동구(서울)	5년 주기	매년시행	의무	-	-
		성북구(서울)	가능	-	가능	-	민관협력 <sup>5)</sup>
		순천시(전남)	5년 주기	매년시행	-	청년정책위원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양천구(서울)	5년 주기	매년시행	가능	-	-
		원주시(강원)	5년 주기	매년시행	가능	-	-
		청주시(충북)	5년 주기	매년시행	5년 주기	청년정책위원회	-
		이천시(경기)	5년 주기	매년시행	-	청년지원정책위원회	-
	은둔	남구(광주)	5년 주기	시행계획	-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청년시설(민간위탁)
		노원구(서울)	5년 주기	심의가능	-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
		동구(광주)	5년 주기	매년시행	3년 주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미추홀구(인천)	5년 주기	심의가능	심의가능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
안동시(경북)		5년 주기	심의가능	3년 주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	
은평구(서울)		5년 주기	심의가능	-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다만, 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독사 이외의 정의로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로서 사회적 고립가구를 추가로 명시하여 동일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자조모임 성격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심리상담 및 치료, 의료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대부분 1인 가구에만 한정하며, 내용상으로도 병리적 문제의 해소에 방점을 두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구조·문화적 요인의 해소와 지역사회공동체와 연계한 사회자본 관점의 권익 증진의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1인 가구 중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다루는 조례는 분석에 제외하였다. 관련 참조사항으로 서울특별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이외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시행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와 연계

5) 제8조(고립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고립청년지원기관 등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밀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은 지역단체 및 고립청년지원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표 4〉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의 개념 정의

구분		법적 규정					지자체 사례
개념	고립 유형	원인 규정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생활 환경	
사회적 고립	사회자본 결핍, 사회적 배제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 사회적 관계의 자발적 단절	사회진출의 어려움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	원주시(강원), 청주시(충북), 이천시(경기), 남구(광주), 양천구(서울)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 사회적 관계의 단절	사회참여의 어려움			성동구, 성북구(서울)
			-	-			대구광역시
			-	-			한정된 공간
	사회자본 결핍	-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의 현저한 곤란	-	한정된 공간, 외부와 단절	제주특별자치도
고립된 청년					미규정 (경제적 요인 암시)	외부와 고립	순천시(전남)
은둔형 외톨이	사회자본 결핍, 사회적 지지 부재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	정상적인 사회 활동의 현저한 곤란		한정된 공간, 외부와 단절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동구(광주), 안동시(경북)
			사회적 관계 단절	사회 활동의 현저한 곤란		일정 기간, 한정된 공간	노원구, 은평구(서울), 남구(광주), 미추홀구(인천)

보다 나아가 광주광역시 남구는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을 정의하고,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를 따로 시행하여, 개념적 차원에서 고립과 은둔을 구분하여 접근한다. 남구의 청년 기본 조례에서 고립청년은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로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사람”이다. 반면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상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다. 즉, 고립을 청년의제와 연관하여 생애주기 이행에서 겪는 사회진출 상의 어려움으로 바라보고, 은둔은 생애주기와 무관하게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활동 반경에 제약을 겪는 경우로 구분하여 다르게 접근한 것이다(〈표 4〉).

그러나 1인 가구이거나 구직중인 청년이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신뢰받으며 기회를 조달 받고, 역량을 함양하는 중이라면, 사회적 지지를 얻으며 사회자본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립 상태’에 처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더라도 직장갑질만을 오가며 이웃관계망으로 부터 단절되어, 사회공동체적 관계망이 부재하고 사회참여로부터 배제되어있다면 은둔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고립 위기에 처해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고립은 구직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고 있는 개인도 사회자본이 저조하다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2) 조례의 내용 분석

다음은 각 지방정부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의 접근 방식이다(〈표 5〉).

〈표 5〉 조례 상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대한 내용 분석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관계		건강권			자립		평생교육과 문화향유		지역사회 통합		가족 지원	
	사회성	공동체	의료(자유)	활력(희박)	응급	일자리	주거	학습	여가	활동확대	지역연계		
광역 자치 단체	광주광역시	-	-	■	■	-	■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서울특별시	■	■	-	-	-	■	-	-	-	■	■	■
	제주도	-	-	-	■	-	■	-	■	■	-	■	■
전라남도	-	■	-	-	-	■	-	-	■	-	-	■	
기초 자치 단체	남구(광주)	-	■	-	-	-	■	-	-	-	■	-	■
	노원구(서울)	-	■	-	■	■	■	-	■	-	-	-	■
	성동구(서울)	■	■	-	-	-	■	-	-	-	■	■	■
	성북구(서울)	-	■	-	-	-	■	-	-	-	■	■	■
	동구(광주)	-	■	■	■	-	■	-	■	■	■	■	■
	미추홀구(인천)	-	■	-	-	-	■	-	-	-	■	-	■
	안동시(경북)	-	■	-	■	-	■	■	■	-	-	-	■
	양천구(서울)	-	■	■	-	■	■	■	-	-	■	-	-
	은평구(서울)	-	■	■	■	-	■	-	■	-	■	■	■
	원주시(강원)	-	■	■	-	■	■	■	-	-	■	■	-
청주시(충북)	-	■	-	-	■	■	-	-	-	■	-	-	

고립이나 은둔에 처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접근을 명시한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3개 곳)이며, 기초지자체는 노원구(서울특별시), 안동시(경북), 남구(광주), 미추홀구(인천), 청주시(충청북도)의 5개 곳이다. 사업 지원 종료 이후의 사후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북구(2개 곳)이다.

정책 수요자를 발굴하기 위한 조항<sup>6)</sup>에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그 주체로 지자체만이 아니라 청년 관련 기관과 단체까지로 포함한다. 또한 복지, 고용, 상담에 관련한 전문기관들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장한다. 서울시 성북구는 제8조(고립청년 발굴, 지원체계구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고립청년지원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발굴하여 조기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발굴 확대 및 밀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 중간지원조직을 두지 않고 지역사회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책 지원 방식으로는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당사자의 일자리 지원을 염두하고 있다. 그러나 고립 기간이 '공백기'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상황이므로 일자리 알선이나 단기일자리 지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구직 역량과 경험을

6) 전라남도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발굴' 대신 '발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관련해 구직 역량과 진로 탐색에 필요한 교육 지원을 명시한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도(4개 곳), 기초지자체는 서울 노원구, 광주 동구, 경북 안동시, 서울 은평구(4개 곳)이다. 나아가 당사자의 경험과 활동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조례는 광역으로는 광주, 광주, 서울(3개 곳), 기초에서는 광주 남구와 동구, 서울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인천 미추홀구,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9개 곳)가 있다.

더구나 고립을 넘어 오랜 기간의 은둔 생활로 신체활동이 저조했던 경우, 상황에 따라 당장의 사회 활동을 요구하는 것보다 신체건강 회복과 체력 증진이 우선되어야 할 수 있다. 우발적인 노력으로 활동력을 확보하더라도, 증상기적인 관점에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일상적인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할 확률이 높은 까닭이다. 따라서 특히 은둔 지원 정책에서 당사자의 '건강권'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되는데, 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도와 인천 미추홀구의 조례에는 건강 관련 조항이 없다. 사회적 고립 지원 조례를 활용하는 대구, 서울, 성동구, 성북구, 청년 기본 조례에 탈고립·탈은둔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광주 남구도 건강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또한 부산, 양천구(서울), 원주시(강원), 청주시(충북)를 제외하고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당사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인식 개선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미비한 지역의 보완이 요구된다. 그런데 가족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도는 고립과 은둔 당사자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조모임 및 활동 단체 지원은 당사자가 아닌 고립청년의 보호자, 고립청년 발굴 활동을 이루는 지역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의 삶의 주도성 회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제2조(정의)에서 고립청년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한 대목으로 말미암을 때, 고립청년을 자칫 정상성의 범주에서 어긋나 계도가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반면 제주도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가 자조모임이나 사회관계망 형성을 염두한 공동체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장기적인 은둔 상태에 처했던 당사자의 경우,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동질적인 구성원들과의 관계 형성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만 차후 사회·경제적 독립으로 발돋움을 고려한다면 이질적인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적 측면의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 대구, 성동구만이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비롯한 가족과의 관계 문제로 은둔을 택한 사례의 경우에는 원가족과의 분리가 우선되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미취업 상태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은둔 상황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까닭에 대안적인 주거환경과 생활공동체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관계 조항을 명시한 지역은 광주광역시, 경북 안동시, 서울 양천구, 강원 원주시(4개 곳)다.

## 2. 탈고립·탈은둔 지원 정책

탈고립·탈은둔 지원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6~8〉).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상담을 통한 ‘마음건강’ 지원하는 단일 정책, 취업을 지원하는 단일 정책은 제외하였으며, 중앙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전국 범위의 공공서비스는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국내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표 6〉).

〈표 6〉 전국 청년 대상의 탈고립·탈은둔 지원서비스 비교

공급 단위	사업 명	대상	내용	
전국 (중앙 또는 민간)	K2 인터내셔널 코리아 (사회적 기업)	자립을 향한 5단계 프로그램 *활동 중단	·제한 없음 ·2021년 말 활동 정지	·탈출지원 패키지(부모·방문상담, 세미나, 가족모임) ·공동생활 프로그램(생활·학습·의료·복지) ·내일내일프로젝트(클럽활동·언어교환·스포츠·요리) ·직업훈련, 일하기체험(아르바이트·취직)
	SEED:S (사단법인)	두더지 땅굴 *온라인 플랫폼	·제한 없음 ·2022년 8월 22일 개소	·은둔테스트, 해결중심 상담 제공 ·모임·활동비지원, 일경험 지원 ·고립·은둔청년 뉴스레터, 온라인 챌린지 제공
	청년재단 (비영리 재단)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	·만 19세 ~ 34세 ·6개월 이상 가족 외 비접촉 ·사회적 시스템 외부 청년 ·정서적 상태에 주목한 선정	·자립 프로그램(공동생활, 관계형성) ·월간 부모교류회(월 1회)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마련 ·일경험 연계 및 사후관리
		청년 다다름 사업	·만 19세 ~ 34세 ·보호종료·장기미취업 ·대학비진학·가족돌봄 청년	·생활기술 형성 및 자기 발견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사회진입 및 안착을 위한 사후관리

K2인터내셔널코리아는 은둔·고립 청년을 단계 별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일본 요코하마에 본사를 둔 한국법인이다. 고립·은둔 당사자 지원에 필수적인 생활 활력 회복과 사회적 역량 함양, 가족구성원 지원, 학습과 경험, 일 경험 연계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연수를 통한 외국어 교환 프로그램까지 제공했다. 2012년부터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민간의 자원 한계로 인해 2021년 말에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대신, K2인터내셔널코리아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사단법인 씨즈’의 상담창구로 연결된다. 씨즈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마음의 쉼터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2022년 8월 이후로 온라인플랫폼 ‘두더지땅굴’을 운영 중이다.

청년재단은 고립 및 은둔 청년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자체 서비스로 청년 다다름 사업과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그러나 고립과 은둔 청년을 타겟하는 체인지업은 2021년까지도 구 홈페이지와 블로그로 소개되었으나, 리뉴얼 된 홈페이지에서는 청년 다다름 사업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sup>7)</sup> 다다름 사업도 유사한 서비스를 포괄하나, 지원 요건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50%가 추가되었다. 모집 기간 또한 상시가 아닌 연 중 1회로 한정한다. 민간단체의 사업은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아 단계 별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원 조달의 한계로 인해 지원 체계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성과의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유민상·신동훈, 2021). 정책의 특성상 중장기적 밀착 서비스와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새로운 당사자 발굴과 현행 이상의 서비스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7) 2021년 12월 사단법인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설립으로 별도 운영

다음은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탈고립·탈은둔 지원 정책이다(〈표 7〉).

〈표 7〉 광역지자체의 탈고립·탈은둔 지원서비스 비교

광역자치단체	정책 명	대상	내용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상시	·만 18세 ~ 34세 ·구직단념청년 <sup>8)</sup>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1년 이상) ·지역특화 고립청년 1,000명	·밀착상담과 사례 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및 자조모임 ·취미/체험 프로그램 지원 ·의사소통 방법 등 사회적 적응 지원 ·지역특화프로그램 제공	총 32시간 이상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시 인센티브 2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은둔청년 지원사업	·관내 만 19세 ~ 39세	·은둔청년 맞춤상담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 연계 ·정서지원, 관계이해, 취미·체험 프로그램 ·사례관리 및 생활관리, 온라인 프로그램 ·부모지원 프로그램 등	NPO연계
광주광역시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상시	·연령제한 없음 ·관내 거주 은둔형외톨이 당사자 및 가족	·(상담)당사자, 가족구성원과 라포 형성 ·마음건강 전문상담, 자조모임 ·(교육)가족구성원 교육, 전문가 양성 ·(활동)생활습관개선 및 사회역량강화, ·단계별 치유 프로그램, 조력자 양성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전달체계, 통합 서비스 제공
대구광역시	청년사회진입활동 지원시스템 (대구형 청년보장제)	·만19세~만34세 미취업 청년 ·가구중위소득 150%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생애이행과정 지원(교육기→사회진입기→직업기→안정기) ·상담연결형 사업(2000명): 맞춤상담 이후(1회) ·적격자에 수당 지급 및 기관 연계 ·진로탐색지원형 사업(400명): 관련 프로그램 ·수료 및 활동계획 후 수당 지급	탈고립·탈은둔 지원 정책 미도입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은둔형 외톨이 본인 및 가족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은둔 정도 등 ·기초통계자료 확보 및 지원방안 마련	정책 미수립

국내 민간에 준하는 지원 체계를 갖춘 광역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고립과 은둔청년 지원 정책을 나누어 운영하며,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당사자에 대한 밀착 프로그램과 사회적 함양, 사회관계망 형성, 진로탐색부터 역량강화, 지역특화 경험 형성, 취업역량까지 종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참여 동기도 높히려는 접근을 꾀하고 있다. 상시로 모집하며 관내 청년으로 국한하지 않아 용기 낸 타 지역 청년당사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공 대상의 범위가 적어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은둔청년 프로그램의 경우 관내 만 19세~만39세로 한정하여 200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1년도에 비해 올해 지원 대상을 약 4배로 확대하여 1,200명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전문가들이 은둔청년의 규모를 추산한 바로 청년인구의 3.4%인 37만4156명 가량<sup>9)</sup>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턱 없이 부족한 규모다.

광주광역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도 단계적인 접근으로 고립·은둔 당사자와 가족구성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탈출'이라는 컨셉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사회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은둔 상황에서 벗어난 이들이 '은둔고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당사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되어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다만 이는 은둔 상황에서의 탈출에 집중한 방식으로, 탈은둔 이후에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 및 활력 증진, 사회적 역량에 나아가 경제적

8)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취업훈련 이력 부재,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청년

9) 김태희. "은둔 청년'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는 사이, 37만명 추산." 경향신문. 2021.09.08 06:00



독립을 위한 자기탐색과 일자리 경험 정책, 실용적인 금융 지식 제공과 긴급 지원, 자산 형성 등을 연계하는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서비스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취창업·일자리 정책에서 연계할 수 있겠지만, 장기화 된 미취업 상태에 처한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접근으로 과도기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는 지원 정책 미수립 상태이나, 2022년 6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기존의 청년정책으로 마음건강 사업과 구직 지원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소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장기미취업 청년에 대한 단계별 접근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대구광역 시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조례가 22년도 10월에 제정되어 고립과 은둔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이 수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기존에 운영해온 ‘청년사회 진입활동 지원시스템’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진입 및 상담 프로그램을 유사 정책으로 포함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맞춤형 상담과 진로탐색, 구직역량 관련 프로그램을 각각 제공한 후 청년수당을 지급하여, 단일한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발굴-진단-청년수당 지급-(필요 시)기관 연계’의 통합 지원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다만 정책의 대상이 고립과 은둔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이기 보다 보편적인 취약계층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수요자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고립·은둔 청년이 보편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발굴하고, 활력을 돋우는 별도의 설계가 요구된다.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탈고립·탈은둔 지원 정책은 <표 8>과 같다. 관련 조례를 도입한 지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수인데, 조례에만 규정하고 관계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광역지자체의 정책 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서울특별시)나 단일한 마음건강 사업이나 구직역량 교육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 까닭이기도 하다. 그마저도 강원도 원주시는 엄밀하게는 청년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시 광산구는 청년심신활력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공식블로그와 보도자료에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있지만 2021년도에 그치며 최근의 정보가 부재하다.

서울시 관악구와 중랑구는 근린의 밀착 지원이기 보다는 광역정책의 수요를 보완하는 일회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노원구는 기초단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지원 체계로 청년일경험 일샵센터를 설치하여 은둔 상황에 처한 청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다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일반적인 청년센터가 차용하는 방식의 일회성 프로그램 형식을 띄고 있어, 서울시 관악구와 중랑구와 유사한 형태다. 서비스 공급자의 시각에 따라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게 되면 실제 고립·은둔 상황에 처한 청년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요자가 정책 프로그램의 향후 일정과 경과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다. 프로그램의 예측가능성과 단계 별 프로그램을 형성하여 수요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조달하고 있는데, 고립·은둔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직접 탐색하여 확보할 동기를 부여받는 것에 조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은둔 청년의 참여 동기와 활력 수준을 고려한 설계가 무엇보다 요구된다.<sup>10)</sup>

10) 사단법인 씨즈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두더지 땅굴’ 서비스를 참조·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표 8〉 기초지자체의 탈고립·탈은둔 지원서비스 비교

실행 단위	정책 명	대상	내용	비고	
서울	관악구 (청년정책과)	홀로배움교실 운영	·관내 만 19세 ~ 39세 ·관내 거주 또는 활동 청년	·고립감 해소를 위한 시민교실 ·재무분석교실, 요리특강 등 교육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제공	고립·은둔 청년 관계 조례 부재
	중랑구 (기획재정국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2022 THE 나답게 -날개를 달다) *6월 모집	·관내 만 19세~34세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퍼스널칼라진단 ·스트레스상태점검, 집단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직업인과의 만남 ·문화체험(공예, 베이킹, 바리스타등) ·안심알바체험 및 굿즈 지원	
	노원구 (아동청소년과)	청년일경험 일상센터 운영	·관내 거주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	·은둔이 은둔에게 키트 제공 ·은둔형 외톨이 사회화 지원사업 ·1인 청년 안전 커뮤니티 관계형성 사업 ·취업취약청년 취업역량 강화사업 ·미취업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 청년지원센터)	청년 다다름 사업	·관내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30명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장기미취업, 보호종료청년, 대학비진학, 가족돌봄청년 우선 선발	①심리 상담 ②생활기술 및 자기발견 ③취·창업 상담 및 훈련지원 ④식비지원 ⑤건강검진지원 ⑥애로사항해소지원(긴급재정지원)	청년재단 지원사업 *청년맞춤제작소
광주	광산구 (일자리정책과 청년활력팀)	청년심신활력 프로젝트 청년주거독립실험실	·관내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	·청년체력장(100명): 시설 등록비 지원, 클래스 운영, 마라톤 대회 ·청년주거독립실험실(20명): 세어하우스 제공(주거독립 경험), 자립프로그램 (생활기술 전수) 교육	고립·은둔 청년 관계 조례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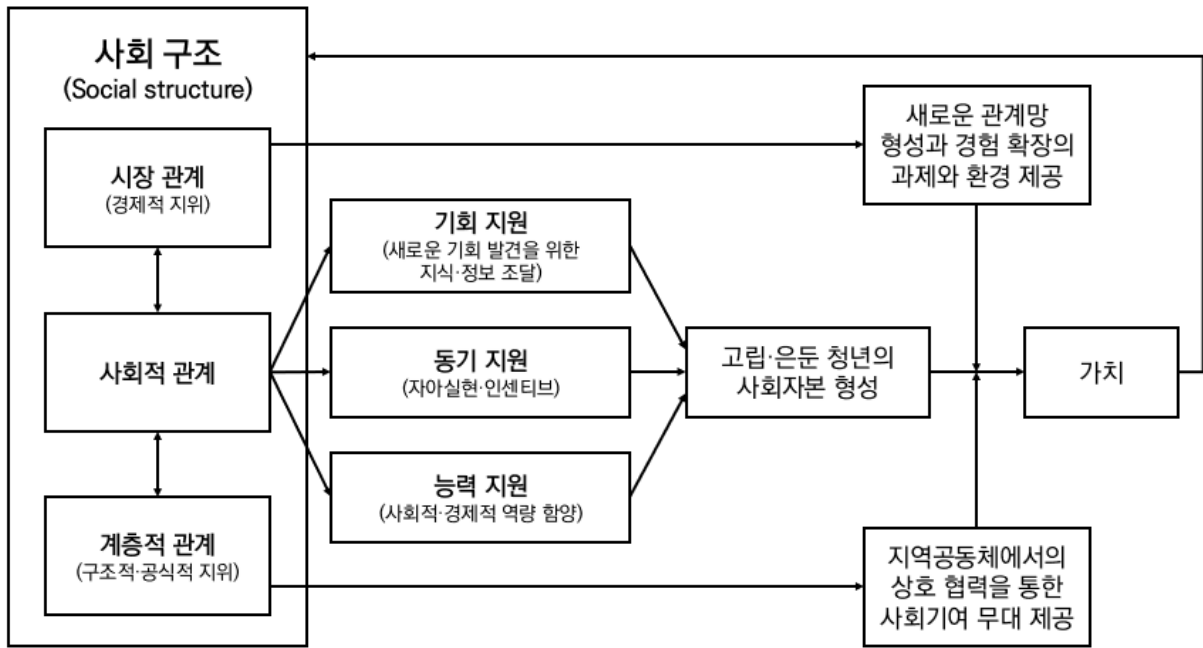
이외 부산광역시, 서울 용산구,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12개 곳)에서 지자체 별로 시범운영 중인 가족센터를 통해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층 뿐만 아니라 중·고령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기돌봄 관계기술, 소통·교류 모임,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소득과 재산과는 무관하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년정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각 포털에는 관련 정보가 부재해 접근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



# V 탈고립·탈은둔 지원 체계 설계를 위한 제언

## 1. 사회자본 형성 원리에 입각한 지원 체계

본 장에서는 Adler & Kwon(2002)의 사회자본 형성 모형을 재구성하여 탈고립·탈은둔 지원을 위한 알고리즘을 도출한다(〈그림 3〉). 당사자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을 토대로 기회와 동기, 능력을 함양하여, 점진적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기존 가족공동체와 자조모임 성격의 관계망을 넘어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경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과제를 할당하여 성취감 및 시장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를 주 무대로 문제해결과 다양한 주체 간 상호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도성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자본 형성 알고리즘을 토대로 한 반복점진적 역량 개발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관적·객관적으로 상보성을 담지하여 효능감(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3〉 탈고립·탈은둔 청년의 사회자본 형성 지원 알고리즘

\*출처: Adler & Kwon(2002)의 모형 재구성

그러나 프로그램 제공에 앞서 가장 우선적해야 할 작업은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당사자가 처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Coleman(1988)은 가족관계가 부모의 인적자본이 자녀의 교육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런데 가족 간 대화, 관심으로 인한 시간 투입, 경제적 지원 등 가족 내 사회자본이 부족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성이 부족하면 자녀는 부모의 인적 자본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어렵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장기화 된 고립·은둔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은 기존의 가족 관계에서도 구조적 결핍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원가족과의 분리가 가장 절실할 수 있는데, 장기미취업이나 저임금·불안정 고용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독립이 어려워 개인 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정서적·환경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가 가장 장기화 된 은둔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원인에 따라 가족 외부의 사회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를 분리하고, 새로운 생활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고립 및 은둔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자기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 사회적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① 기회 지원 프로그램, ② 동기 형성 프로그램, ③ 능력 함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계다. 기회 지원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회 발견을 위해 지식이나 정보를 조달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동기 형성 프로그램은 자아탐색과 실현 프로그램을 비롯해 참여수당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탈고립·탈은둔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능력 함양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재능 개발 및 구직 역량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림 3〉의 모형의 이론적 논의에 따라 기회, 동기, 능력 중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자본 형성 효과가 저해된다. 각 요소들은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발현되는 까닭으로, 동일한 구성원이 모인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 시작하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점차 다양한 직군의 또래,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의 여러 경로를 확인하고, 자신의 삶을 재설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좁은 범위의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기초 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계다. 어느 정도 역량이 뒷받침되면 2단계로 유사한 구성원으로 모인 다른 자조모임 공동체와 함께 학습 및 교류하며, 경제적 프로젝트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연결된 실천 과제로 할당하여 사회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로는 1인 가구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실버세대 공동체와 상호협력하며 기회·동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4단계에서는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접근하되, 다양한 분야의 진로 탐색과 실질적인 일경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상생이 가능한 청년예술인(미술·음악·연기 등), 문화기획자(로컬 크리에이터), 펀드레이저(기금 마련 전문가), 사회적 기업가, 사회복지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심리상담사 등의 직업인들과 교류하며 학습과 실천해볼 수 있도록 한다. 5단계로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자신감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고립·은둔 지원 정책의 환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나아가 보편적인 청년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정책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위는 가족, 또래집단, 지역사회, 시장경제에 대한 단계 별 영역 확장을 통해 당사자의 사회자본 형성을 지원하며, 개인의 사회적 역량과 신뢰성 확보를 꾀하는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사회자본 형성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나 시장경제의 인적 자본으로서의 효능감을 올리며 자신감과 사회 진입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탈고립·탈은둔으로 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탈고립·탈은둔 지원 추진 체계

본 장에서는 탈고립·탈은둔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의 전반적인 과정을 논의한다.

정책 추진체계는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한 후 평가 및 피드백을 하는 경우와 정책을 정책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포괄한다(김기현, 2022). 서비스 전달 관점에서는 장기미취업 상황으로 인해 취약한 경제 상황으로 잦은 이동이 불리하거나, 생활 반경이 특정 공간으로 한정되어 오프라인 활동을 저어하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온라인 전달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점차 집 내부에서 동네로, 마을과 지역사회로 활동 반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점진적인 활력 증진에 대한 고려도 함께 들어가야 하는 만큼 기초지자체 단위의 근린형 사회자본 형성이 중요하다. 나아가 점차 삶의 주도성 회복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동질한 집단의 공동체에서 이질적인 타인과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참여·권리적 측면에서 정주민구로써의 시민권을 회복하는 관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책 환류 과정에서 청년참여 거버넌스의 주체로도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정 설계에 반영하여 상호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중앙의 행정체계와 집행체계와 관련한 논의로는 비단 탈고립·탈은둔지원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도, 보편적인 청년정책 조차 추진체계 정비가 현재 진행 중이다. 청년정책 전반의 추진을 위한 중앙단위 입법도 몇 년이 되지 않은 까닭이다.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계한 중간지원조직은 부재하다. 더욱이 김기현(2022)에 의하면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집행체계도 부처마다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며(158개 기관), 대학일자리센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100개), 그외 대학과 기업, 은행 등 보편적인 기관을 제외하고 청년을 일부라도 지원하는 기관과 시설을 합하면 2021년 기준 1,891개에 이른다. 장기적으로 중앙 청년정책의 전달체계에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체계를 연계하는 전략 수립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따라 우선 과제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 또한 청년정책 도입이 지자체부터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이뤄져 다양한 정책이 산발해 있는 만큼, 고립과 은둔 지원 정책의 종합적인 전달체계로 연계하기에 아직까지 부적합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 별도의 행정 체계와 집행체계 구상이 필요하다.

단,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기존에 홍보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청년포털과 고용노동부의 온라인청년센터와 연계하도록 한다. 정보채널을 분산하는 것은 거래비용과 전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며, 정보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청년정책과 고립·은둔 지원 정책을 지나치게 분리한 것은 자칫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구분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과 거부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까닭이다. 대신 사단법인 씨즈에서 고립·은둔청년들을 위해 지난 8월에 정식 오픈한 온라인 플랫폼 '두더지 땅굴'과 기존의 청년정책 채널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 VI 결론

본 연구는 고립과 은둔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고립·은둔을 겪은 청년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재도약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윈윈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자료와 조례 및 정책 자료를 종합한 후 비교제도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사회적 고립에 대한 기존 담론을 정리하고, 탈고립·탈은둔 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또한 탈고립·탈은둔 지원 제도의 개념과 접근방식을 비교하여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Adler & Kwon(2002)의 사회자본 형성 모형을 활용하여 고립 및 은둔의 완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 지원 전략을 도출했다.

분석결과, 첫째로 만성화 된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생애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정책의 시급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를 다루는 제도적 기반이 대체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고립과 은둔의 개념정의를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의 경우 구직상황과 무관하게 경제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고 있는 개인도 사회자본이 저조하다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개념재정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고립 및 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방식에서 특히 '건강권', '공동체적 접근', '사회적 관계 마련', '원가족과의 분리' 등의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차원으로는 시행 프로그램 부재, 지역 차원으로는 정책수요자의 범위 한정, 일자리 프로그램 미비, 청년 참여 동기 등의 지원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조례, 제도, 정책 마련 혹은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고립, 고독, 은둔의 제도적 개념의 정립이 가장 시급하다. 사회적 고립의 개념정의를 우선시 되어야 혼용되지 않고 고립 및 은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내에서도 일관성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립 및 은둔의 지원범위와 지원 내용은 지역 별로 차이가 있으며 부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와 재원을 조정 및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당사자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Adler & Kwon(2002)에 착안한 논의처럼 사회자본 관점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차원도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짧은 연구기간(10월 중순~11월 하반기)으로 인해 정책 지원 현장에 대한 인터뷰를 신지 못한 한계가 있다. 대신 현존하는 탈고립·탈은둔 정책의 제도적 기반과 공공서비스 조달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정책적 미비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지점들을 도출했다. 또한 고립과 은둔이 단편적인 심리 상담과 취업 장려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못함을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당사자의 사회자본을 함양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정책 추진·전달체계를 재설계한 데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주로 조직차원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모형을 개인 사회자본의 수준으로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개인수준 차원에서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 모형을 활용했다. 이는, Adler & Kwon(2002)의 모형과 본 연구의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해 지원체계 설계시 사회자본의 형성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정책 현장이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제반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고립·은둔 지원 예산 편성과 정책 수요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당사자 발굴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탈고립·탈은둔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 중 협업을 통해 각기 경험이 더 많은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용기와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와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 VII 참고문헌

- 강서운, 전희정. "사회적 자본이 안전인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韓國行政學報 56.2 (2022): 395-427.
- 김기현, 김지연, 장근영, 소경희, 김진화, 강영배. (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222.
- 김기현. (2022).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참여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2(3), 44-58.
- 김민주, 이아라. "대학생의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과 대처양식의 군집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관계 문제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8.9 (2021): 89-114.
- 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 경기복지재단
- 김성아. (2022a). 사회적 고립의 심리적 비용: 주요국과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38(3), 115-152.
- 김성아. (2022b).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 305.- (2022): 74-86.
-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2021).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73(2),57-81.
- 박지선.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사회적질연구 4.2 (2020): 19-45.
- 정주호·한연수·김동욱·조민효. (2022).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유형에 관한 연구 - 잠재집단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0), 1011-1045.
- 조예지. (2016). 취업자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지위 및 혼인지위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39(2): 47-76.
- 이상인, 오미애, 김문길, 전진아. (2021).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미취업 청년 고립 실태 분석 연구: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이상철·조준영. (2017).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61-86.
- 이소정, 정경희, 손병돈, 홍백의, 이미숙, & 이은진. (2008).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민상·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지현,조미형 이승영. 청년의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74.2 (2022): 53-78.
- 최예나, 최영출. (2020). "사회적 자본과 정부의 질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공가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4(3). 325-352.



- 한준 (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 통계개발원, 337-3
- Adler, P. S., & Kwon, S. W. (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17-40.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Ostrom, E., & Ahn, T. K. (2003). *Foundations of social capital*. Edward Elgar Publishing.
- Taylor, S. E. (2007). *Social support*.
- Nicholson, R. (2012). A review of social isolation: An important but underassessed condition in older adults.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3(2-3), 137-152.
- Wills, T. A. (1991).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 56 ships. In M.S. Clark (Ed.), *Prosocial behavior* (pp. 265-289). 57 Newbury Park, CA: Sage
- 김세은. 나도 혹시 '고립 청년'?...심리적 단절감 해소책 부족해. 이데일리. 2021-05-28 오전 12:30:52
- 이진혁. 코로나에 닫힌 취업문... "사원출 대신 알바 명찰 답니다" [2030 코로나세대]. 파이낸셜 뉴스. 2021.07.11. 18:10
- 이환주·이진혁·김도우 "문열고 나와도 잡아주는 손이 없다... 예산없어 문닫는 지원단체 [숨어 버린 사람들 (7)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서둘러라]" 파이낸셜 뉴스. 2021.11.28. 17:47
- 윤덕우. [나는 청년입니다] "1인 가구는 시대적 흐름...개인의 행복 초점 맞춘 정책 필요" 대구 신문. 2022. 4. 5. 21:40.
- 장수경·신소윤. "은둔이라는 스펙 쌓은 이들이여, 나오라 '땅굴'로." 한겨레. 2022-08-06 13:17



# MEMO

# MEMO



도전·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최종보고서

---